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3-2027 시행계획]

2023. 12.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과제1] 감시예방

①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

① 신·변종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	1
② 종합상황실(EOC) 기능강화 및 위험평가 고도화	18
③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23

[과제2] 대비대응

②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및 대규모/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① 해외출입국 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	35
② 유행 병원체 조기 특정 및 충분한 진단역량 확보	44
③ 대응전략 최적화 위한 초기사례 심층분석 및 유행예측 강화	51
④ 초기대응 물자·장비 비축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57
⑤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훈련(Full-scale) 실시	66
⑥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71
⑦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80
⑧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 방안 마련	90
⑨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98
⑩ 감염취약 시설·집단 보호체계 강화	112

[과제3] 기반

③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

①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및 조직 역량 강화	125
②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135
③ 전략적 위기소통 기반 강화	140
④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46

[과제4] 회복

4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① 위기상황에도 견고한 취약계층대상 복지체계 정비	151
②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별·분야별 지원체계 확립	154
③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	158
④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162

[과제5] 연구개발

5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①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169
②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 지원체계 강화	179
③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공급 기반 마련	206

**①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

1-1-1

사건기반 감시 등 해외 유행 감시체계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분석담당관
담당자	장우성 서기관 ☎ 043-719-7551 e-mail : qwt4888@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존할 미지의 신종감염병(Disease-X)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해외 유행 감시체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공중보건위협 사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체계 확대 및 정보검증체계 다변화

- **(체계확장)**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해외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강화
 - 질병청 국외파견자* 및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정책 동향 심층 수집 추진
 - * 교육훈련, 고용휴직, 직무파견자를 통한 정기(분기별)·수시 정보수집('23.3분기~)
 - ** **(기존)** 재외공관을 통한 코로나19 자료수집체계 → **(확대)** 주요 감염병 전반으로 확장 및 필요시 청 요청에 따른 자료수집체계 구축 추진
 - 아세안(ASEAN) 국가(중점: 필리핀, 베트남 등*)에 가용한 정보 자원을 확보, 선제적 1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 추진**('25년~)
 - * 제한된 감시역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고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 중심으로 우선 추진(이후 단계적 확대)
 - ** 「아세안 의료기관 네트워크 협력 전략 수립」 연구용역('24년), 본사업 추진('25년)

구분	1차 자료(Primary Data)	2차 자료(Secondary Data)
정의	■ 감염병 정보를 직접 획득한 자료	■ 외국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 및 재발하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빠르게 획득 ⇒ 국내 유관기관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감염병 전파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관에서 1차 검증 후 공개 ⇒ 자료의 획득 편의성 및 신뢰성 높음

○ **(검증강화)** 전 세계적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기 수집된 1, 2차자료의 신속한 검증 강화

- 주요국 보건당국 및 국제기구(WHO, ACPHEED* 등) 등의 세계적 공중 보건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검증체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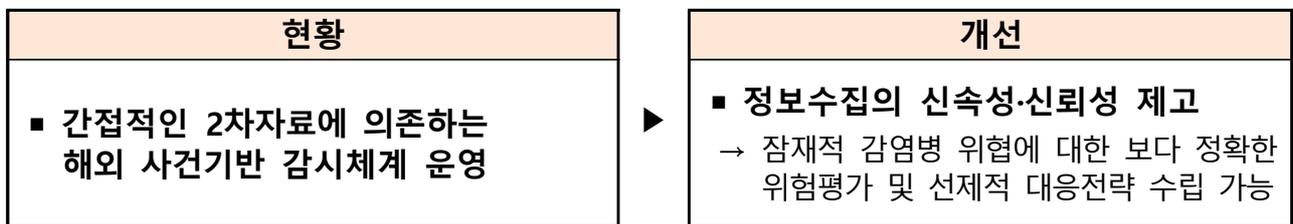
* 아세안 공공보건 응급상황·발병 대응센터(ASEAN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 아세안의 자체 CDC 개념의 기구

** 해외전문가 인력풀(DB) 구축('24년) 및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 심포지엄 초청, 화상 전문회의 실시 등 지속적인 자문체계 구축 추진('25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국내 ODA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활동 인력을 통한 감염병 정보검증 강화('25년~)

* 기 체결된 일본-KOICA 업무협약('18.3.20.)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 수립('24)

** 현지 인력의 전문성 한계를 감안, 기 수집된 정보의 교차검증 위주로 활용



□ **향후 계획**

○ 질병청 국외파견자 통한 정보수집(지속)

○ 「아세안 의료기관 네트워크 협력 전략 수립」 연구용역('24년)

○ 해외 감염병 전문가 인력풀(DB) 구축('24년)

○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지속적 자문체계 구축('25년)

○ 국내 ODA 기관 해외 현지활동 인력 활용 협력방안 수립('24년)

○ 국내 ODA 기관 해외 현지활동 인력 활용 감염병 정보검증체계 운영('25년~)

○ 아세안 국가 협력을 통한 1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사업 운영('25년~)

○ 재외공관 통한 감염병 정보수집 방안 외교부와 협의('25년~)

1-1-2

국내발생 조기발견 등을 위한 체계적인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담당자	김인호 연구관	☎ 043-719-7141	e-mail : globalepi@korea.kr
	이지은 연구관	☎ 043-719-8220	e-mail : jerhee001@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존 감시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및 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급수 조정(2급→4급)으로 코로나19가 기존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 필요

□ 주요 내용

◇ **신종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임상감시 확대 및 병원체 감시 강화를 통한 체계적·통합적 감시체계 운영**

- **(임상감시)** 지역별 대표성 제고를 위한 표본감시체계 확대, 참여 의료기관 진료과목 확대, 지역단위 유행 등 조기감지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 및 감시체계 평가
 - 주요 국가 대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 수 부족, 지역별 통계 산출 한계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위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 감시기관(ILI) 확대 검토·추진*
 - * (기존) 196개 → (개선)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ILI, ARI, SARI)를 통합·확대하여, 대표성 제고 및 지역통계 산출
 -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종료 이후 대상 기관 우선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포함 추진

< 국가별 호흡기 표본감시 기관 현황 >

	한국	일본	미국
(인구수)	5,155만	1억 2,320만	3억 3,999만
임상감시	196개	5,000개	3,000개
인구10만명당	0.38개	4개 (한국의 10배)	0.88개 (한국의 2.3배)
병원체감시	36개	500개	400개
인구10만명당	0.07개	0.41개 (한국의 5.8배)	0.12개 (한국의 1.7배)
한국 미흡한 부분	★지역별 통계 산출 불가능	지역별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 산출 가능	

- 호흡기감염병을 진료하는 과목 중 이비인후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비인후과가 추가 지정 필요

* (기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중심 → (개선) 이비인후과로 확대

- 전반적인 감시자료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호흡기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추진

*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평가 관련 정책연구 용역 진행 중(~'24년 2월)

- ARI 감시체계 진단신고 표준화, SARI 감시체계 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한 호흡기 입원환자, 중환자 대상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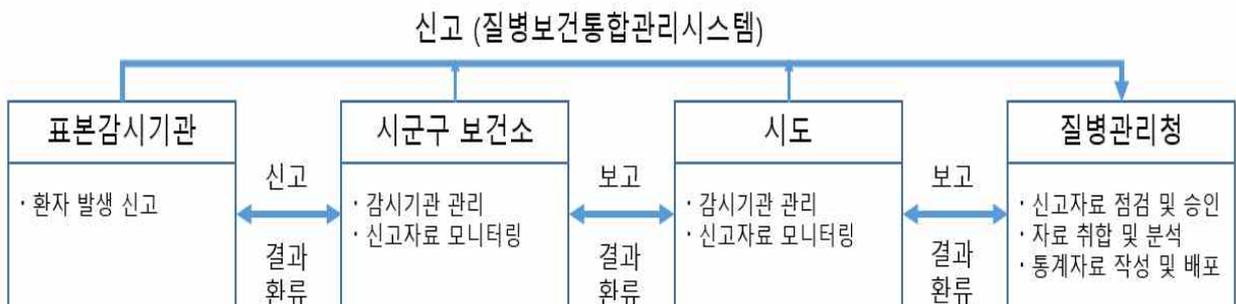
* 입원환자 및 호흡기중환자에서의 호흡기병원체 발생 양상 심층분석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구성 >

구분	외래	입원	중환자
	인플루엔자의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	급성호흡기감염증 (Acute Respiratory Infection)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대상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호흡기바이러스(8종) 세균(2종)	호흡기바이러스(8종) ¹⁾ 세균(4종) ²⁾
목적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감시 및 분석	발생감시 및 분석	발생감시 및 분석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사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사례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196개소	병원급 기관 (200병상 이상) 219개소	상급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등 42개소
신고내용	연령군별 총진료환자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종류별·연령군별 입원환자수	성별·연령·기저질환· 백신접종여부· 폐렴진단여부 등

1) 호흡기바이러스(8종) : 인플루엔자, 사람코로나, 아데노, 호흡기세포융합, 보카, 메타뉴모, 리노, 파라인플루엔자

2) 세균(4종) : 폐렴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균



○ **(병원체 · 변이)** 병원성, 전파력 증가 등 공중보건 위협하는 신종 병원체 조기발견 위한 감시·분석 능력 획기적 확대

- 지역사회 병원체유행 감시를 위한 기존 표본감시기관 확대(77→100개소, 現임상감시기관의 50%)는 물론 고령층, 해외입국자 등 집중감시 대상군* 신규 선정 감시

* 감염취약군 감시(요양병원 30개소), 검역 호흡기 증상자 감시(수도권대응센터 협조)

- 유전정보 기반 변이분석에 더해, 병원체 구조적 분석*(단백질, 유전체), IT 융합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특성분석 고도화로 위험성 조기 평가·예측

* 병원체 단백질 분석으로 전파력, 면역회피 등 예측, 돌연변이, 재배열 등 유전체 분석(NGS 기법)으로 변이상황 및 신종병원체 출현 판단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유행 발생, 위증증 및 재출현·변이·신종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 파악에 한계 ■ 유전자 분석과 배양을 통한 제한적 특성분석으로 전파력 등 파악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감시기관 확대 및 집중감시군 감시로 신뢰성 높은 감시자료 산출 ■ 단백질 구조분석법 도입하여 병원체 감시 정보 획득

□ **향후 계획**

- 호흡기표본감시체계 평가(~'24년 2월)
- 호흡기표본감시체계 심포지엄 개최('24년 하반기)
- ARI 감시체계 진단신고 표준화('24년 상반기)
- SARI 감시체계 월간 심층분석 실시('24년~)
- 병원체 표본 감시기관 확대 및 운영('24년~)
- 집중감시군 대상 신규감시체계 구축(~'24년)
- 확대된 병원체 감시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24년 하반기)
- 고도화된 분석기법 특성분석에 단계적 적용('25년~)

1-1-3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하수감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담당자	조미영 사무관 ☎ 043-719-7732 e-mail : miyo@korea.kr

□ 추진 배경

-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기법 도입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증대**

* 무증상자 선제감시 어려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과대한 예산 소요 등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환경 감시 내 하수 감시 지침 발표('22.4.), 14차 국제보건규칙(IHR) 회의 결과 "하수 감시" 권고('23.1.)

- 하수 기반 감시는 하수에서 병원체량을 측정하여 지역사회 유행 경향을 판단하는 것으로 간단하고 다양한 병원체에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감시 대상 확대 및 실험방법 표준화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고도화

- **(감시 확대)** 감시결과 신뢰도 향상 및 감시 병원체 다양화를 위해 전국 공공 하수처리장의 감시율* 및 감시 병원체** 확대(지속)

* 감시율: ('23) 50% → ('24) 60% → ('25) 65% → ('26) 70% → ('27) 75%

** 감시 병원체: ('23) 3종 → ('24) 5종 → ('25) 6종 → ('26) 7종 → ('27) 8종 (코로나19·노로·사람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필수 3종 감시 및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 예정, 美CDC의 경우 코로나19·엡폭스 2종 감시('23.10월) 및 향후 4종 추가 예정)

- **(실험방법 표준화)** 지역별 감시 결과를 비교하여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 마련 및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교육* 시행(~'24년)

* 하수 전처리 기법 및 데이터 해석 등 실험방법 표준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감시 결과 공개)** 지역별 주간 하수 감시 결과 대국민 공개('23년~)

*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http://npt.kdca.go.kr>) > 발간자료 > 하수감시 소식지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일정시간 경과 후 사후적으로 유행상황 파악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공식 신고·보고보다 6~8일 병원체 조기 검출(코로나19 사례)로 유행상황 선제적 대응 및 기존 감시 보완

□ 향후 계획

-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운영 지침 개정(~'24년 1월)
-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교육 및 실험실 정도관리('24년 상·하반기)
-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사업성과 우수기관 선정 및 사례 공유('24년 하반기)
- 하수 감시 표준매뉴얼 마련('24년 하반기)
- 감시 대상 병원체 및 감시율 단계적 확대('24년~)

1-1-3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오수감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담당자	박진욱 사무관 ☎ 043-719-9218 e-mail : jinuk0302@korea.kr

□ 추진 배경

- 검역구역 내 코로나19 등 병원체에 대한 선제적 인지 및 대응을 위해 전국 공항만 하수·오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필요
 - 공항만 하수·오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기 상태에서의 감염병 유입 여부를 확인하여 현행 검역체계 보완

□ 주요 내용

◇ 공항만 하수 및 항공기 오수 검사를 통한 해외감염병 감시

- **(공항만 하수 감시)** 유증상자 중심 검역을 보완하여 검역구역 내 하수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잠복기 상태 선제적 감시
 - 공항·항만 재개 및 검역소별 여건(예산·인력 등)을 고려하여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검사 수행 및 단계적 확대(**(23)**8개소* → **(24)**전국 13개소)
 - * 인천공항, 김해공항, 동해, 군산, 목포, 제주, 마산, 포항 23년 시범사업 실시 중
 - ※ 코로나19, 엠폭스, 콜레라 등 검역감염병 포함 40종 병원체 검사
- **(오수검사*)** 항공기·선박 도착 직후 ①**단일 노선**(국가 기준), ②**단일 지역**(장소 기준), ③**다양한 항공사**(또는 선사) 등 기준 선정하여 수행(계속)
 - * (美CDC) 항공기 오수감시 도입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스크리닝 및 변이 탐지
 - 하수·오수 감시체계에서 해외 감염병 유입 발견 시 출발국가에 대한 검역 조치로 연계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활용

현황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하수감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하수감시 정식 사업화((24년))

- **(감시결과 조치)** 감염병 병원체 검출시, 관련기관 등 안내·홍보 및 검역조치 강화를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 전파 차단에 기여

구 분	내 용
해외감염병 발생 안내·홍보	관련기관(공항, 여객터미널, 항공사 등) 및 지역 보건기관(보건소 등)에 감염병 병원체 검출 안내 * 특히 감염병 대량 발생시 공항만 소독실시 등 조치 안내
	공항만 여행객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필요시, 보도참고 자료 배포 등
운송수단 및 입국자 검역조치 강화	해당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에 감염병 병원체 검출 안내 및 조치 * 자체 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 등 보건위생관리 철저 지시
	지자체(보건소)에 국내 입국자 명단을 통지하여 모니터링 요청 * 증상 여부 및 증상 발생 신고 안내 등
	해당 운송수단 차기 입항시 입국자 검역강화* 및 보건위생점검** 실시 *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 운송수단내 가검물 채취·검사 및 위생조사 강화 등

□ **향후 계획**

- 공항만 오하수 감염병 감시 확대('24년)
 - * **하수채취:** ('23)8지점(공항6/여객터미널1/항만1)→('24)18지점(공항8/여객터미널6/항만4)
 - 운송수단 오수 채취:** ('23) 3개 공항 항공기 → ('24) 8개 공항 항공기/ 3개 항만 여객선
- 국제 크루즈선 오수 감염병 감시 추진('25년)

1-1-3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사망감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담당자	안미숙 연구사	☎ 043-719-7746	e-mail : classic0220@korea.kr
	류보영 역학조사관	☎ 043-719-7745	e-mail : byryu@korea.kr

□ 추진 배경

- 국내 사망통계는 사망발생 차년도 발표(통계청)로 실시간 사망 모니터링에 한계, 질병부담 측정 및 신속한 공중보건 정책 활용을 위한 적시성 있는 사망정보 수집 필요

* 미국, 일본 등은 사망신고자료 기반으로 잠정 사망통계를 산출하여 주월단위 발표

□ 주요 내용

◇ 적시성 있는 사망감시체계 구축 및 사망 분석 고도화

< 사망감시체계 구축 >		
구분	사망 전수감시(사망발생 후 2개월)	사망 표본감시(사망발생 후 일주일)
1단계	건강보험공단 진단 코드 활용 코로나19 사망자 추이 모니터링	표본설계 및 수집 정보범위 결정
2단계	통계청 등 사망정보 실시간 공유 협의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표본의료기관 신고 정보를 통해 모든원인 사망정보 확보

- **(전수 사망감시)** 전국 사망자 수 및 초과사망 규모 등 분석
 - (1단계) 건보공단의 진단 코드를 활용한 사인분석 활용 가능성 평가 및 초안 마련
 -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근거, 사망자료 공유 협의(23.6월)
 - (2단계) 통계청에서 수집 중인 사망자 기본정보 및 사인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협의 지속,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표본 사망감시)** 실시간 사인별 사망자 발생 추이 모니터링
 - 표본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사망자 정보를 수집하여 비감염병을 포함하는 모든 원인 사망정보를 통해 포괄적인 질병 영향분석 및 정책 근거 마련

< 국내·외 사망신고 제도 및 통계작성 방법 비교 >

구분	국외			국내	
통계주체	통계부	영국, 캐나다, 호주		통계청	
	보건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신고기한	24시간 ~ 14일 이내			28일 이내	
근거법령	인구동태신고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관계등록법 통계법(인구동향조사규칙)	
신고주체	의사, 검시관 등			신고인(친족 등)	
통계발표	잠정	사망자 수	주단위	영국, 미국, 캐나다	1회/월
			월단위	일본, 영국, 호주	
	통계	사망 원인	주단위	미국	-
			월단위	영국, 호주	
	확정통계		1회/년(사망원인 포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유행규모와 영향력이 큰 감염병 사망정보 적시 활용 한계 * 법정 감염병 총 89개 중 1~3급 감염병 (66개) 사망자만 신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수(사망률), 초과사망, 조기사망 등 주요 지표를 지연 없이(실시간) 파악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 **향후 계획**

- **(전수 사망감시)** 감염병신고 자료 및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보완감시체계 구축('24년 상반기)
 - (통계청) 통계청 사망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 지속
 - (건보공단) 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 자료와 상관관계 분석 및 건보공단 자료를 통한 사망자 수 추계가능성 검토 후 정기적 보완적 감시체계 구축 가능성 평가('23.11월)
 - (사망신고 확대 검토) 신속한 공중보건 정책 활용을 위해 법정감염병 사망 전수감시 범위 확대 필요성 검토(1~3급→4급 중 필요시 한시지정)
 -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와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자료 분석 및 감시체계 평가 연구용역 실시
- **(표본 사망감시)** 표본설계, 수집정보의 범위 결정,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관련 정책연구 용역 실시

1-1-3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인수공통감염병 감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결핵정책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조수경 연구사	☎ 043-719-7165	e-mail : ptblue@korea.kr
	김웅태 사무관	☎ 044-201-2558	e-mail : kimwt@korea.kr

□ 추진 배경

- ①기후변화 및 국가 간 이동 증가에 따른 국외 감염병 유입 및 토착화 우려, ②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캠핑·텃밭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일상적 감염병 증가 위협 등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주요 내용

◇ 인수공통감염병 사람-동물 통합 감시체계 구축

- **(반려동물)** 전국 동물병원 기반,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에 대한 감염 의심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고위험군(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22년~)
- **(유기동물)** 전국 동물보호센터 대상, 유기동물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브루셀라, 톡소포자충증 등) 항체조사 등 감염실태 모니터링 연구사업 추진('23년 1월~)
- **(산업동물)** 가축(소 등)의 큐열 발생 정보 공유(농식품부) 및 고위험군(가축방역사 등) 대상 감염실태 파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가축방역사 대상 정기 검사(건강검진) 협조('23년 7월)
- **(야생동물)** 수렵인, 야생동물 보호·전시시설 관계자, 검사공무원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고위험 직업군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자료 공동제작·배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협조('23년 11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감시체계 정보연계 미흡 및 고위험군 관리방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질병청 정보연계로 사람-동물 통합감시 강화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한 환경변화에 대한 고위험군 선제적 대응 등 관리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사람-동물(반려, 유기, 산업동물) 간 통합감시체계 강화('24년)
- 감시체계 정보 활용도 제고('25년~'27년)
- 야생동물 밀접 접촉 고위험군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홍보·교육('24년~'27년)

1-1-4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도입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담당자	장민정 역학조사관	☎ 043-719-7744	e-mail : jkmj88@korea.kr
	최시원 역학조사관	☎ 043-719-7734	e-mail : siwon1221@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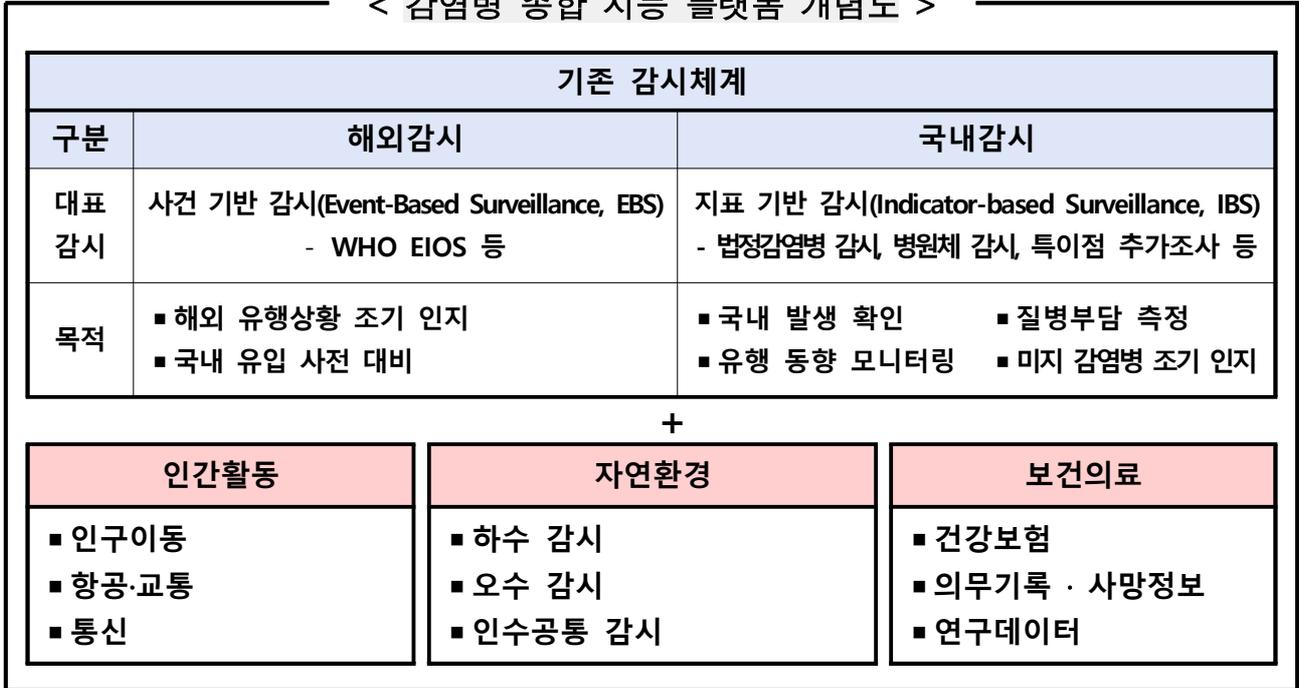
- 국내외 발생 감염병 정보의 분절적 수집 및 자료 연계 미흡으로, 신·변종 감염병으로 인한 종합적 의사결정 취약
- 기존 감시 정보에서 건강보험, 인구 이동량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감염병 위험 인지 및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종합감시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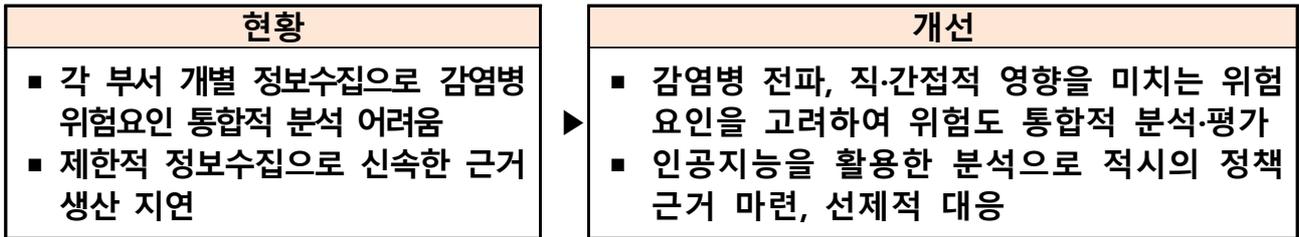
◇ 감염병 감시 및 감염병 외 정보를 연계하여 감염병 위험요인 고려한 종합 위험 분석, 정책 근거 기반 강화 및 적시성 확보

- **(감시정보 통합 분석)** 現 감염병 감시 정보, 인간 활동, 자연환경, 보건의료 등 감염병 외 정보 연계 및 통합분석체계* 마련
 - * 종합감시 분석체계의 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시행
 - (감염병 정보 파악)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현황 파악(~'24.上)
 - (감염병 외 정보 종합감시·분석) 감염병 외 다양한 위험요인 관련 정보(건강보험, 이동량 등)의 단계적 연계·통합 분석체계 구축*('24년)
- **(인공지능 활용 종합감시분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통합된 감시정보 분석·시각화,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 조기 포착하여 선제 대응
 -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사업(ISP) 시행('25년) → 사업 계획 수립('26년) → 시스템 구축 및 운영('27년)

<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개념도 >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위험평가 고도화 및 조기경보 가능



□ 향후 계획

-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현황 파악 및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용역 추진('24.上~)
 - * 국외 사례, 감염병 외 감시 정보 통합관리 방안 검토 등
-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사업(ISP)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24년~)
- 현 인공지능 플랫폼(Azure* 등)을 활용한 하수 감시체계(자료수집, 모델구축, 분석) 도입 검토 및 추진(~'24.上)
 - * 자동화를 통한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예측 등이 가능한 MS社의 AI

1-1-5

감염병 대응 범부처 협력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결핵정책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조수경 연구사 ☎ 043-719-7165 e-mail : ptblue@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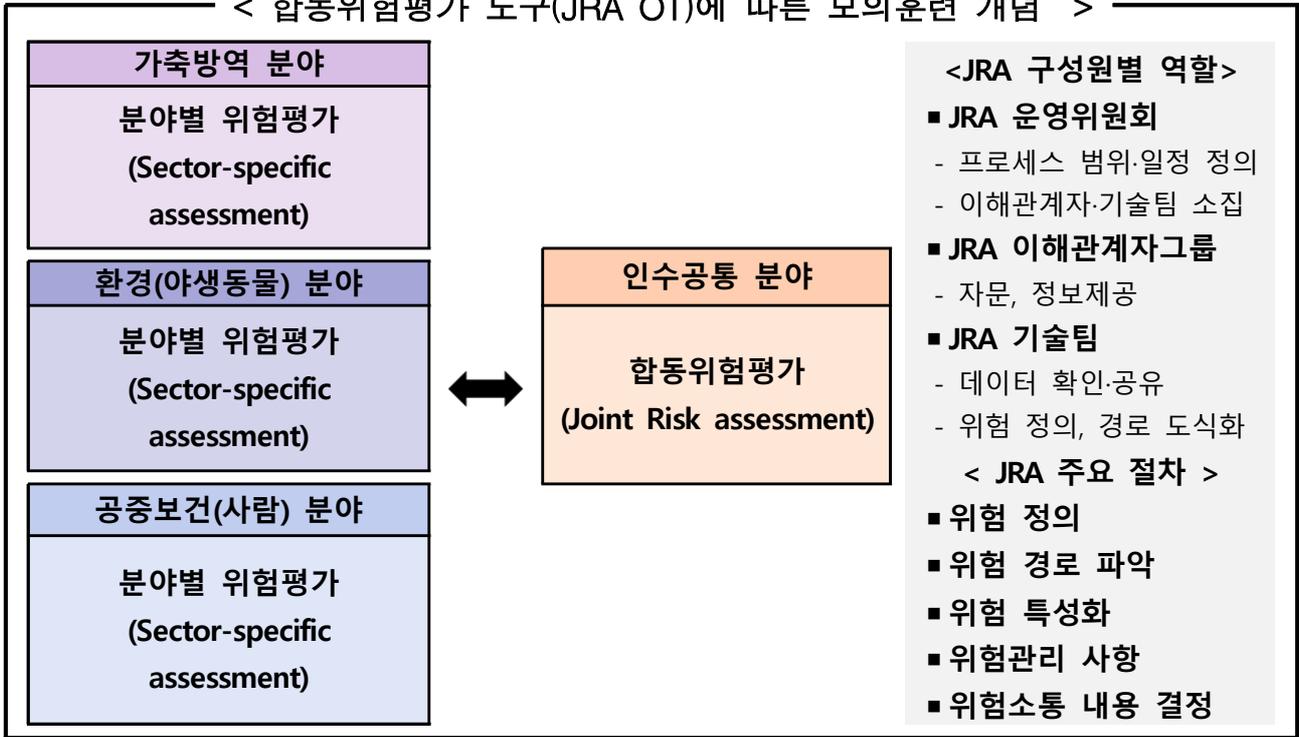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관리는 사람-동물-매개체-환경을 포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이 필수로, 제도화된 협력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협력체계 및 공동대응 체계 활성화

- **(협의체 활성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현안과제·공동연구 등 안건 발굴 강화('23년~)
 - * 질병관리청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질병청(사람),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 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연 2회 정기회의 실시)
- **(합동 모의훈련 정례화)** 합동위험평가(JRA) 도구*를 활용,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위협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 정례화**('22년~)
 - * Joint Risk Assessment, FAO-WOAH-WHO가 개발한 공동대응 프로토콜
 - ** (참여기관) 질병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등

< 합동위험평가 도구(JRA OT)에 따른 모의훈련 개념 >



- **(공동 역학조사 구축)** 큐열·브루셀라(사람-가축) 및 결핵(M. bovis, 사람-가축·전시동물)에 대한 공동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및 체계 구축('22년~)
- **(통합감시 보고서 발간)** 인수공통·매개체(모기, 진드기)·식품매개감염병 대상 사람-동물-환경을 아우르는 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23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인 범부처 합동훈련 (AI 한정) ▪ 인수공통감염병 공동역학조사 부재 ▪ 부처별 분절된 감시보고서 발간, 부처간 정보공유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한 훈련체계 구축 및 정례화 ▪ 공동역학조사체계 구축, 대상 감염병 지속 확대 추진 ▪ 범부처 합동 감시보고서 발간, 매년 정례화된 정보공유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실무협의체 운영(반기별 1회, '24년~'27년)
-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반기별 1회, '24년~'27년)
- 연차보고서 발간(연 1회, '24년~'27년)

1-2-1

감염병 종합상황실(EOC) 역할 및 기능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분석담당관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이현수 사무관	☎ 043-719-9390	e-mail : lhs01@korea.kr
	장우성 서기관	☎ 043-719-7551	e-mail : qwt4888@korea.kr
	구현숙 연구관	☎ 043-719-9081	e-mail : hyunsook.koo@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전략적이고,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EOC) 역할·기능 강화 및 정보시스템·장비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위기상황 정보수집, 상황평가 및 자원 조정 등 전략적 상황 관리 기능 강화

- **(위기상황 관리)** 24시간 정보수집, 위기상황 파악·조정 등 종합상황 관리
 - 국내·외 위기상황 모니터링·접수, 파악·분석, 상황보고 및 전파(24년~)
 - 위기대응 수준별 대응상황 모니터 및 중재·조정 등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24년~)

< 종합상황실(EOC) 기능 강화 >

기존 기능		+	향후 필요 기능					
<table border="1"> <tr> <th>상황관리</th> <th>초기대응</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신고 대응 ■ 콜센터(1339) 운영 ■ 신고 통계 산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파악·전파 ■ 초동 조치 (1급감염병 등) </td> </tr> </table>	상황관리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신고 대응 ■ 콜센터(1339) 운영 ■ 신고 통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파악·전파 ■ 초동 조치 (1급감염병 등) 		<table border="1"> <tr> <th>전략기획·조정</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발생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 위기상황 초기 예비평가, 자원 조정 기능 ■ 위기평가회의 소집 등 상황평가관리 ■ 방대본 구성 및 타부처 협력 강화 </td> </tr> </table>	전략기획·조정
상황관리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신고 대응 ■ 콜센터(1339) 운영 ■ 신고 통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파악·전파 ■ 초동 조치 (1급감염병 등) 							
전략기획·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발생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 위기상황 초기 예비평가, 자원 조정 기능 ■ 위기평가회의 소집 등 상황평가관리 ■ 방대본 구성 및 타부처 협력 강화 								

- **(상황판 개선)** 위기대응 관리 상황 종합정보 표출,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적시 정보 지원을 위한 상황실 전자상황판 기능 개선(~27년)
 - *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도입'(1-1-4) 과제에서 생산된 종합감시분석자료
- **(인프라 확충)** 방대본의 중단없는 24시간 운영 및 복수의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동시간 다수의 방대본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확보('23~'27년)

- (네트워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영상표출장비 등 네트워크 이중화*('23~'25년)

* 인터넷/업무망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각 1개, IP Wall Controler 6개 등

- (시설) 복수의 방대본 설치 예비 공간, 시설 등 추가 확보('24~'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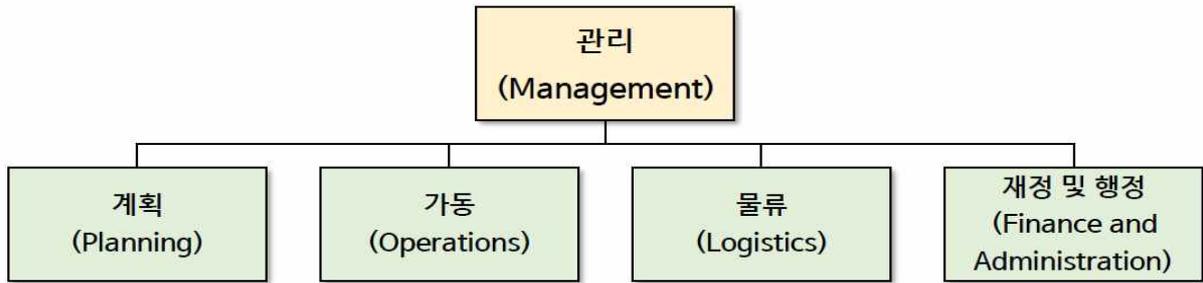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감염병 신고접수, 통계생산 등 제한적 상황관리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정보수집, 상황평가 및 자원 조정 등 종합상황실(EOC) 기능 강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가능

□ **향후 계획**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계획 마련('24년)
- 영상표출장비 등 이중화 실행계획 수립('24년)
- 전자상황판 기능개선 계획 수립 및 단계적 기능 적용('24년~'27년)
- 시설 확대 방안 연구, 설계 및 시설 설치('24년~'27년)

□ WHO 공중보건긴급상황실(PHEOC)

- PHEOC는 긴급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ERP), 사건 관리체계(Incident Management System, IMS)의 구조를 기반으로 관리·계획·가동·물류·재정 및 행정 5가지 기능의 역할 수행



- (관리) 위험소통과 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상황관리에 대한 사항
- (계획) 상황진행과 이용자원에 따른 자료 수집·분석·조치사항 계획
- (가동) 대응수준에 따른 현장 직접 대응 및 기술 자문지원
- (물류) 근무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자원 및 물자의 비축·추적·저장·유지·배치
- (재정·행정) 예산준비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자금운용과 인사운영 관리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긴급상황실(EOC)

-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 및 대응하고자 '03년 설치되어 EOC 가동 시 자원, 정보, 위기·위험소통 등의 조정

< 미국 CDC의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대응 핵심 역량 >

구분	역량
1. 지역사회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	1. 지역사회 대비(Community Preparedness)
	2. 지역사회 회복(Community Recovery)
2. 사건관리(Incident Management)	3. 위기대응공조(Emergency Operations Coordination)
3.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4. 위기경보 및 공적정보(Emergency Public Information and Warning)
	5.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4. 대응책 및 완화(Countermeasures and Mitigation)	6. 대응약제 공급 및 투약(Medical Countermeasures Dispensing and Administration)
	7. 의료자원 관리 및 보급(Medical Materia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8.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9. 대응인력 안전 및 건강(Responder Safety and Health)
5. 급증상황 관리(Surge Management)	10. 사망자 관리(Fatality Management)
	11. 대량환자 관리(Mass Care)
	12. 의료급증(Medical Surge)
	13. 자원봉사 관리(Volunteer Management)
6. 생물감시(Biosurveillance)	14. 공중보건 실험실 진단(Public Health Laboratory Testing)
	15. 공중보건 감시 및 역학조사(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출처: 미국 질병통제센터 EOC 전문가 초청 질병관리본부 교육 자료, 2015.12.>

1-2-2

위험평가체계 고도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분석담당관
담당자	이지아 연구관 ☎ 043-719-7553 e-mail : jlee106@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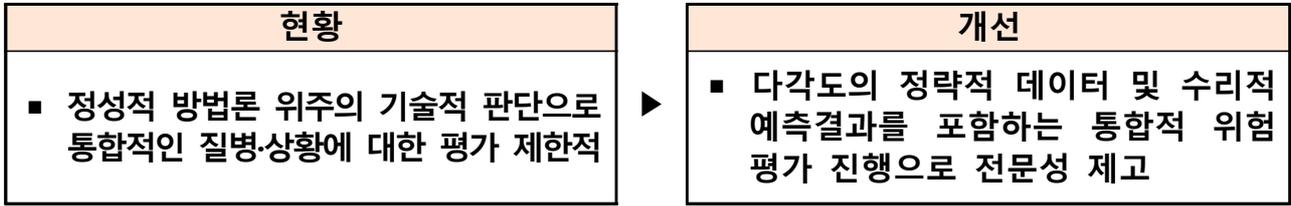
□ 추진 배경

- 알고리즘 형태의 사건 중심 위험평가 방법론의 일률적인 활용으로 통합적인 질병 및 상황에 대한 평가 제한적
- 코로나19 이후 기존 유입 시, 위기 단계 조정 시 등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위험평가에 대한 정례화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 위험평가 방법론 개선 및 구체화를 통한 위험평가체계 강화

- **(평가 세분화)** 감염병 위험 단계별·상황별 위험평가 세분화 및 각 평가에 대한 평가도구·운영방법 마련
 - 잠재적 공중보건위협사건에 대한 단계별 위험평가(신속평가·질병심층평가) 및 검역감염병·지역 지정, 군중모임행사, 해외여행자 정보제공 등 특정 상황별 위험평가 방법론 개선
- **(평가 정례화)** 국외 감염병 발생 상황의 위험 분석 및 대응체계 점검 등 정례적 평가(반기별) 추진
 - * 현재 검역감염병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반기별 위험평가 진행 중
 - 위기시에는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정기적(3~4개월)으로 위험평가를 시행하여 상황 평가 및 위험 정보 수준 조정 여부 결정
 - * 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시 3개월마다 긴급위원회를 통해 상황 평가, PHEIC 유지 여부 논의
- **(방법론 개선)** 주요 국외기관(WHO, 유럽CDC, 영국 UKHSA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한 방법론 비교·분석, 감시체계 평가 등을 통해 개선점 발굴



□ **향후 계획**

- 세분화된 평가 방법론 개선 및 개발(~'24년)
- 정례 위험평가 진행('24년~)
- 주요 국외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방법론 지속 업데이트

1-3-1

해외 주요국과 기술지원·협력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오승규 주무관	☎ 043-719-7753	e-mail : oskdavids@korea.kr
	김희숙 연구사	☎ 043-719-9131	e-mail : nikita1025@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보건취약국 대상 기술지원 요구 증가 및 신정부 외교정책 기조*에 따른 협력 확대 필요
 - * 질병청-아프리카CDC 간 MOU('22.5) 기반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 한-아세안 정상회의('22.11) 및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23.4) 등
- 감염병분야 ODA사업의 상호보완적 사업기획 위한 유관기관 협력, 주요국과의 지속적·정례적인 협력 등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한국 주도 글로벌 방역 기술 지원 및 협력 거버넌스 마련

- **(기술지원)** 감염병 감시, 진단, 역학조사 등 대륙별 방역 기술지원 확대(중동 등)로 보건취약국 역량강화 및 글로벌 보건안보 기여
 - 감염병분야 ODA 사업 대상 지역(기존 라오스, 아세안, 몽골, 아프리카)을 공조 및 정보수집 필요 높은 중동('25~'29년 신규)까지 확대 계획
 - ODA 유관기관(KOICA, KOFIH)과 협의체를 마련하여 상호보완적 사업기획 및 추진계획 공유, 협력방안 논의 등 실시('23년 3분기~)
 -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지원* 및 공조 강화('24년 하반기~)
- * (협력과제) 긴급상황센터(EOC) 설립·운영 역량 강화,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 프레임워크' 이행 활동 지원, FETP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개발 지원 등

- **(기술협력)** 국외 전문기관과 MOU 체결* 및 정례회의 확대** 등을 통해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체계 구축

* MOU: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 호주 도허티 연구소 등 MOU 체결 추진('23년)

** 정례회의: (기존) 일본 감염병연구소, 중국 질병관리본부 → (확대) 미CDC, 유럽CDC, 아프리카CDC, 영국보건안보청 등 연간 정례회의 마련

- WHO 등 국제기구와 고위급 정책회담 확대하여 해외 정책 동향 파악 및 협력사업 발굴, 적극적인 참여기반 마련('24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아프리카 등 기술지원 ■ 한-일-중 3자 간 역내 정례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지역까지 기술지원 확대('25년~) ■ 미국, 유럽, 아프리카 국가 등 역내외 정례회의 통한 글로벌협력 강화(상시)

□ 향후 계획

- 중동 지역 ODA 사업 신규 실시('25년)
- KOICA, KOFIH와 ODA 협의체 운영(계속)
-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 호주 도허티 연구소 MOU 체결 추진('23년)
- 국외 전문기관과 기술협력 정례회의 확대(수시)
- WHO 협력센터 지정 신청(~'23.12월), 승인(6개월 소요 예정) 및 센터 운영('24년 하반기~)

□ ODA 사업 현황

- (목적) 보건취약국 역량강화 기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감염병 대응 강화 추진중(총 224억원 규모)

대상 지역	기 간	금액(총액)	주요 내용
라오스	'22.~'26.	5년간 39억원	실험실 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체계 기술지원
아세안(10개국)	'22.~'26.	5년간 65억원	교육연수, 감염병 조기경보 및 위험평가 체계 지원
몽골	'23.~'27.	5년간 72억원	실험실 역량강화, 방역물품지원,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아프리카	'23.~'27.	5년간 48억원	감염병 진단, 감시, 위험평가, 위기대응 등 역량강화

※ 중동 지역 ODA 사업('25.~'29. 계획) 신규 추진중(타당성조사 '23.3월~10월)

- 또한, WPRO와 국제백신연구소에 매년 기여금 지급('23년 총 100억원)

대상 기구	기 간	금액(연간)	주요 내용
WHO WPRO	'06.~매년	'23년 20억원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원
국제백신연구소	'94.~매년	'23년 80억원	국제백신연구소(한국 유치) 전체운영비의 30% 지원

□ ODA 사업 추진 방향성

- (내실) ODA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내실화·고도화 추진
 - 현재 ODA 사업 초기 단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 * 질병청 ODA 사업 추진 매뉴얼('22.6. 제정) v2 마련, 현지 모니터링 참여 등
- (연계) 질병청 국제협력 역량강화의 기회로 연계효과 제고 추진
 -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 강화, 전문가 파견 등 연계 활용

□ 감염병 분야 ODA 협의체 운영

- (목적) 유관기관(KOICA, KOFIH)과 소통·협력 강화 위해 협의체 마련
 - 사업 간 분절성 방지 및 상호보완적 사업기획으로 효율성 제고
- (계획) 주기적으로 기관별 신규 ODA 추진계획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또한, 진행사업 효과성 증대 및 종료사업 효과 지속방안* 등 논의
 - * (질병청-KOFIH 실무회의) KOFIH에서 '19-'23년 시행한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 통해 사업 효과 지속방안 논의(8.8.)

□ WHO CC 지정 추진

- (배경) 서태평양지역 위기대응 공조 체계 구축 및 리더십 확보
- (현황) 질병청內 WHO 협력 센터는 항생제내성 분야('21.3.~)에 이어 2번째이며, 팬데믹 분야에서는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3번째

<WHO CC 개요>

- WHO가 국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직한 국제협력 기구로 80여 개국 800여 개 협력센터가 활동 중
 - WHO 정책 등에 따른 국가,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의 하나로 사무총장이 지정하며,
 - 지정된 WHO CC는 간호, 산업보건, **감염병**, 영양, 정신건강, 만성질환 등의 분야에서 정보수집, 연구수행, 훈련 등의 활동으로 협력 중
- * 일반적으로 지정 기간은 4년으로 하며(갱신 가능), 재정 지원은 없음

□ WHO CC 지정 추진 내용

- (WHO CC 명칭)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WHO CC
- (협력분야(안)) 3개 협력과제(Terms of Reference, TORs), 5개 협력활동(activity) 및 9개 업무계획(actions)

협력과제(TORs)		협력활동(Activity)	업무계획(Actions)
TOR1	긴급상황센터(EOC) 설립 및 역량 강화 지원	1. EOC 운영 능력 강화 지원	1.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관리 역량 지원 2. 위기 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TOR2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 프레임워크 (APHSF*)' 이행 활동 지원 * Asia Pacific Health Security Framework	2. WPRO 주관 워크숍 행사 기술 지원 3. 공중보건 전담 기구 설립 지원	1. 팬데믹 분야 SOP 및 훈련모듈 개발 지원 1. 공중보건계획 자문 및 역량 평가 지원
TOR3	FETP*를 통한 서태평양지역 대응 역량 강화 * 역학조사관 훈련 프로그램	4. FETP 핵심역량 훈련 모듈 개발 지원 5. TSI* 평가 훈련 기술지원 * 전파력, 심각도, 영향력 (Transmissibility, Severity & Impact)	1. WPRO FETP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 WPRO FETP 훈련 모듈 업그레이드 3. 한국의 EIOS 활용 사례 공유 등 1. 역학적 지표 분석 도구 개발·개선 2. TSI 평가 관련 훈련 제공

1-3-2

체계적인 해외 정보 수집 기반 조성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분석담당관		
담당자	오승규 주무관	☎ 043-719-7753	e-mail : oskdavids@korea.kr
	이지아 연구관	☎ 043-719-7553	e-mail : jlee106@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발생정보 공유, 물자(백신, 치료제 등) 배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
- 현재 전문인력 해외 파견 소수에 불과하여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 정책 공조, 연구기반 확보 등에 한계 존재
 - * 코로나19 관련 국외 정보수집이 해외 언론, 외국 정부·기관의 발표 등을 통해 사후적·수동적으로 진행되어, 정책 결정 근거 미비 지적 多

□ 주요 내용

◇ 해외 인력파견 등 글로벌 교류를 통한 해외정보 네트워크 강화

- **(국제교류)** 주요국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등에 전문인력 근무기회 확대*로 현지 감염병 정책정보 수집 및 공동 협력사업 참여(관계기관 수시협약)

* (기존) WHO 본부,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 → (확대) WPRO, 유럽CDC, 중국 등

WPRO	서태평양지역 감염병 정보수집 및 공조강화 위해 주요부서 교류 필요
유럽CDC	유럽지역 감염병 정보수집, 방역정책 공조, 네트워크 확대 위해 교류 필요
중국 등	다빈도 교류 국가 현지 정보수집 및 신속대응 위해 교류 확대 필요

- WHO GOARN(국제 질병유행정보 대응 네트워크)과 글로벌 보건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현지 협력 추진

* 인력풀 구성(외부전문가포함)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 워크샵 등 통한 역량강화

- **(현지네트워크)** 보건취약국(아프리카·아시아 등) 현지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종감염병 정보 및 병원체 자원 등 확보 추진

- 기술지원 국가별(라오스, 아세안, 몽골, 아프리카 등) 전문가 파견 및 실무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자원 수집 기반 강화('24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 및 병원체자원 확보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 및 현지 사업참여 확대('24년~) ■ 주요 보건취약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통해 정보·자원 수집 기반 강화('24년~)

□ 향후 계획

- 주요국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전문인력 근무기회 확대(수시)
- WHO GOARN 현장 파견 인력풀 마련 및 내부교육 진행(~'24.1월), WHO GOARN 훈련 개최 연례화 추진 및 요청시 파견 진행('24년~)
 - * WHO GOARN Tier 1.5 훈련(기술 현장 적용방안 및 유행 대응 경험 공유(1일 워크샵) 개최('24.3월), Tier 2.0 훈련(유행대응 관련 시나리오 기반 집중 훈련(5일) 개최('25년)
- 기술지원 국가별 전문가 파견 및 실무협력 통한 정보·자원 수집 기반 강화('24년~)

1-3-3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립 및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질병관리청 국제협력현안대응TF GHS 조정사무소팀		
담당자	오승규 주무관	☎ 043-719-7753	e-mail : oskdavids@korea.kr
	안제현 사무관	☎ 043-719-7108	e-mail : ajh0909@korea.kr

□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건안보 강화가 기획·추진될 전망으로, 다양한 영역 노력들의 효율적 추진 위한 조정 역할* 기관 필요
 - * 종합 분석 → 중점 투자 및 강화 필요 분야 제시, 단편적·중복적 사업 방지 등
- '22년 한·미 정상회담('22.5.) 및 GHSA 장관급 회의('22년 11월)*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한국 설치 선언
 - * GHSA 회원국간 합의된 「新서울선언문」을 통해 GHS 조정사무소 설치 공식 발표

□ 주요 내용

◇ GHS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주도

- **(GHS 조정사무소)** 사무소 설치 및 운영체계 정립을 통해 국내외 보건안보 강화 총괄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
 - GHS 조정사무소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후 '23년말 개소, 이후 단계적으로 규모·역할 등 확대('25년 목표) 운영 계획

< GHS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 (설치계획) 조정사무소 설립 내용이 포함된 "GHSA 운영 기본계획(Framework2028)" 채택('23.12월, GHSA 선도그룹 회의) 후 질병관리청 내 예비 개소 추진('23.12월)
 -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총괄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수행('24년), 이후 여건 및 기반 등을 추가 확보하여 사무소 서울 이전 및 역할·사업 확대 운영('25년)
- (기능·역할)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역량 분석·평가 및 전략 수립 등 총괄지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및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체계 강화 주도
 - ^GHSA 사무국(Secretariat) 역할 수행, ^행동계획(Action Packages) 이행 및 활성화 등 체계적 관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경험)공유 촉진 및 상호 협력 등 지원

< 시기별 GHS 조정사무소 운영계획(안) >

개소 준비 / '23.10~12.	예비 개소 / '23년말~	확대 개소 / '25년~
GHS 조정사무소 개소 준비 TF	GHS 조정사무소 개소 및 운영 * 질병청, 부처 및 해외 전문가 파견	사무소 서울 이전 및 확대 * 해외 전문가 파견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소 초기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무소 개소 전 행정사항 추진 개소식 준비(글로벌 선도 컨셉)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SA 총괄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 확대 검토, 확대 개소 추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기구 펀드 협력사업 발굴 분석·기획 등 기능 고도화 교육훈련센터 확대운영(질병청 연계)

- **(거버넌스 구축)** WHO,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기구와 협력사업을 발굴·연계하여 GHS 조정사무소 중심 보건안보 거버넌스 구축
- GHS 조정사무소 내 美CDC 조정관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유치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축으로 발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 총괄지원 및 조정기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S 조정사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결 허브'(플랫폼) 체계를 구축, 글로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연계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의 조정 역할 주도 국가"로 도약, 국제적 리더십 확보

□ 향후 계획

- 'GHSA 선도그룹 회의'에서 조정사무소 설치·운영계획 확정('23.12월)
- 'GHS 조정사무소' 예비 개소 및 운영(오송 질병청 내, '23.12월)
- 'GHS 조정사무소' 확대 개소(서울, '25년 목표)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개요

- (성격) WHO 국제보건규칙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역량을 각 국가 보건안보 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 (배경) 에볼라, 조류독감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내성균 및 생물테러 등이 전세계 사회안전·국가안보 위협요소로 대두
 - * 미국 주도로 강력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약 30여 개국 및 WHO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14.2월 출범
- (회원) 현재 71개국(한국 포함), 10개 국제기구·NGO 참여('23.3월 기준)
 - * 회원 기여금은 없고, 일부 국가 자발적 재정으로 기술지원(미국, 한국 등)

□ GHSA 공조체계 구성형태

- (장관급 회의) GHSA 비전 및 아젠다를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안보 분야 장관급 회의(연 1회, '19년부터는 격년 주기 개최)
 - * 회의 개최경과 : '14년(미국), '15년(대한민국), '16년(네덜란드), '17년(우간다), '18년(인도네시아), '20년(태국, 화상회의), '22년(대한민국)
- (선도그룹) GHSA의 운영 및 행동계획 진행상황을 조정·평가하는 주요 참가국 회의로 16개국이 참여(연 3-4회) *한국은 '14년부터 선도그룹 지속 참여
- (태스크 포스·행동계획) GHSA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그룹 내 실무그룹인 TF와 함께, 예방·탐지·대응 분야의 9개 행동계획 운영 중

구분	세부분야	주도국
행 동 계 획	① 항생제 내성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네덜란드
	②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인나, 베트남, 세네갈, 영국
	③ 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체계 강화(Biosafety and Biosecurity)	우간다, Africa CDC
	④ 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한국, 사우디
	⑤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Real-Time Surveillance)	조지아, 미국
	⑥ 진단·실험 시스템 강화(National Laboratory System)	미국, 태국, 남아공
	⑦ 각국의 인력 역량 강화(Workforce Development)	태국
	⑧ 법제 준비(Legal Preparedness)	미국
	⑨ 지속 가능 재정(Sustainable Financing)	미국

**②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및 대규모/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

2-1-1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선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담당자	박진옥 사무관 ☎ 043-719-9218 e-mail : jinuk0302@korea.kr

□ 추진 배경

- 검역은 신종감염병 유입 방지의 최전선으로 해외 발생 시 조기에 탄력적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 필수
 - 상황별·국가별 위험도에 비례한 검역 정책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IT 기반 촘촘한 검역체계 구축 및 선제적 감시를 통한 검역 선진화

- **(검역 효율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활용 범위 확대, 감염병 유행시 사용 의무화 실시 및 관계 부처 시스템 연계* 추진(계속)
 - * 해수부,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 입국자접촉자 정보(좌석, 주소 등) 정확도 제고
 - 항만검역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확대 및 ▲입국자 관리 화면 개발, ▲전자검역심사대, ▲자동검역심사대 등 추진
 - * ('22년) 8개 공항 500만명 → ('23년) 7개 항만 45만명 추가 확대
- **(평가체계 개선)**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기시 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5조)을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평시/위기시 검역정책 운용방안>

구분	평 시	위 기 시
중심 회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전문위원회(분기) ※ 필요시 수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주1회~월1회)
위험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관리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관리지역(일반국가) • 중점검역관리지역(주의국가)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자 증상 확인 및 증상 여부에 따른 조치 •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관리지역) 증상확인, 입국 전·후 검사, 입국 후 격리, 예방접종증명서 징구 등 • (중점검역관리지역) 상기 조치 일체 + Q-CODE 의무화, 지자체 입국자 전수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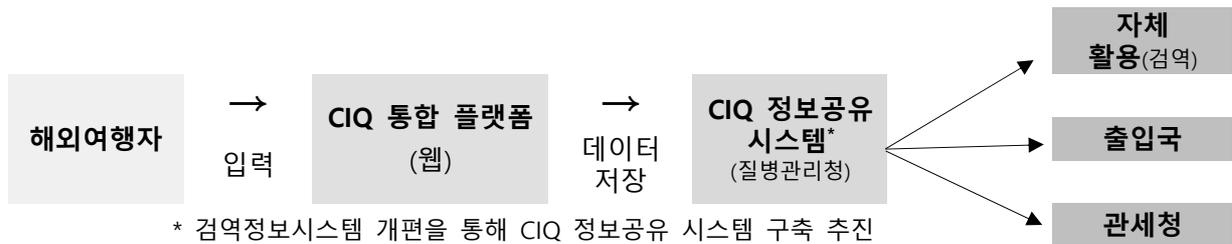
- 각 국가별 유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하도록 「검역법」 내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 추진('23년)

○ **(CIQ* 협업) CIQ 운영 기관(세관, 출입국, 검역)간 상설회의체 구성·운영 및 CIQ 기관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 CIQ: 세관(Customs), 출입국(Immigration), 검역(Quarantine)

- 여객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 기반 시스템 구축, 기관별 정보 연계 시 시스템(CIQ 정보공유 시스템) 활용 등 추진

<해외여행자 CIQ 정보공유 시스템 개념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검역소 Q-CODE 활용 ■ 위기시 의사결정 체계 이원화 ■ CIQ 간 분절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검역소 Q-CODE 확대 추진(계속) ■ 의사결정 일원화로 신속 대응(~'24년) ■ CIQ 간 통합된 정보('25년~)

□ **향후 계획**

- 7개 항만검역소 Q-CODE 전자검역심사대 설치('23년)
-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24) 및 확대('24년~)
- 「검역법」 내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 추진('23년)
- CIQ 관련 분절된 정보를 통합 활용하기 위한 협업 추진(지속)

2-1-2

검역시설 등 인프라 확충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담당자	박진욱 사무관 ☎ 043-719-9218 e-mail : jinuk0302@korea.kr

□ 추진 배경

-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감염병 의심자의 안정적인 격리, 관리 등 초기대응 역량을 위해 공항만 내 격리시설 등 검역시설 인프라 필요
* 현재 6개 검역(지)소 공항만 격리관찰실 부재(여수, 광양, 울산, 부산신항, 통영, 거제)

□ 주요 내용

◇ 공항만 내 격리시설 보강을 통해 초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인프라 확충)** 공항만 내 격리관찰실이 없는 검역(지)소 시설 확충(계속)
 - 지역별 ①유증상비율, ②입국자 수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격리 관찰실 규모 진단 후 청사수급관리계획(안) 반영 추진
 - ※ 6개 검역소(여수, 광양, 울산, 부산신항, 통영, 거제) 대상으로 격리관찰실 우선 확보(25)
 - 주기적인 운영 지침* 보강을 통해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검사, 격리, 사후조치 등의 체계적 대응 추진
 -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국립검역소 격리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 개정(23)
- **(방역친화 숙박업소)** 유사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역친화 숙박업소* 육성
 - * 코로나19 당시 입국자 격리를 위해 호텔 활용. 격리시설 매뉴얼에 최소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여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숙박업소 격리시설로 활용
 - 숙박업소에서 활용가능한 규모별 표준 위생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AirBnB 청결강화 프로그램, 힐튼호텔 클린스테이 등 위생관련 해외사례 참고
 - ※ 숙박업소별 위생지침 구비·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친화 숙박업소 인증 추진
- **(방역교통)** 유증상자(유행 상황별 입국자)의 이동을 위해 활용가능하도록 구급차, 방역택시, 버스 등 별도의 이동수단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검역(지)소 공항만 격리관찰실 부재 ■ 코로나19 이후 격리관찰시설(실) 세부 운영 지침 부재 ■ 시설이동수단 운영지침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내 격리관찰실 확보로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계속) ■ 주기적인 운영 지침 보강을 통한 격리 관찰시설(실)의 기능 내실화(계속) ■ 시설이동수단 운영지침 마련(~'25년)

□ 향후 계획

- 격리관찰실 확충을 위한 청사 취득 및 예산 확보('24년)
- 검역구역 내 임시생활시설로 활용가능한 인프라 파악, 지침 개정(지속)
- 방역친화 숙박업소 시범사업 추진('25년)
- 격리관찰시설(실) 운영현황 파악 및 격리관찰실 확보(지속)

□ 목적

- 국립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격리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
- 국립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의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중 보건위기에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빈틈없는 초동 대응

□ 격리관찰시설(실) 구분 기준

- (격리관찰시설) 검역소 외부 단독 건물로 설치된 격리관찰시설
 -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시설 운영 중
- (격리관찰실) 검역소 또는 공·항만 입국장 등에 설치된 격리관찰실

□ 현황

- 격리실 총 145실 운영 중(검역소 외부 격리관찰시설 82실, 검역소 격리 관찰실 22실, 공항만 내 격리관찰실 41실)
 - (격리관찰시설) 총 82실(인천공항 50실, 제주 20실, 부산 12실)
 - (격리관찰실) 총 63실(검역소 내 22실, 공항만 내 41실)

< 권역별 격리시설 현황 (23년 6월 기준) >

구분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인천공항	인천	동해	평택	군산	목포	여수	제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김해공항	
격리관찰시설	82	50	-	-	-	-	-	-	20	-	-	12	-	-	
격리 관찰실	검역소	22	-	-	-	2	2	1	3	1	1	2	2	6	2
	공항만	41	1	4	6	5	1	6	-	8	2	-	7	-	1

2-1-3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정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담당자	박진욱 사무관 ☎ 043-719-9218 e-mail : jinuk0302@korea.kr

□ 추진 배경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상시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에 부속서(Annex9) 개정 사항('22.11.18. 발효)을 1년 내 반영할 의무 부여
 -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촉진을 위해 1947년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

□ 주요 내용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도입

- **(항공기 보건위생관리)** 항공기 특성, 규모 및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건위생상태 관리 방안 구체화(계속)
 - (보건상태 신고) 매입항 시 항공기 보건상태를 신고하고, 누락 신고 또는 미제출(입항전) 시 항공기 과태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강화(계속)
 - * 항공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신고서 서식 개정('24년) 및 실태조사 실시(계속)
 - ※ 원활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를 위해 항공사 승무원 등 위한 이수교육 마련
 - (위생관리 기준 수립) 기내 구역별 위생상태 조사-평가 기준* 수립(계속)
 - ※ 미생물, 수질, 유해물질(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등 위생요인 위주
 - (지침 개정) 검역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적 항공기 보건위생 조사 절차·방식 등 확립(~'25년)
 - * 위생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공사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 및 검증하여 관리
- **(검역법 개정)** ICAO, WHO 등의 국제 표준 기준을 반영하여 검역법 개정 단계적 추진('23년~)

< 검역법 개정 추진 방향 >

구분	주요 내용	일정
항공기 위생 관리 정비	항공사 자체점검 후 보고 및 위생검증, 시정명령, 과태료 등	~'24년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정비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검증 및 과태료 등	~'25년
항공기 구제·소독 정비	항공기 내 매개체 구제, 입항전 위생해충 구제증명서 등	~'27년
기내 소비재 물품 관리 정비	기내 배치물품 승인 및 심사 등	~'27년
공항만 공중보건위험 평가 신설	공항만 내 지역별·사업별 공중보건위험영향평가제도 도입	~'27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기 검역시 검역관의 구체적 업무 절차 및 기준 미흡 ▪ 항공사가 일상적·통상적으로 신고서에 환자, 매개체 발견 여부 등 제출 ▪ ICAO 부속서 개정 사항 반영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특성, 위생 등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계속)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 서식 개정(계속) ▪ 국제적 공중보건 기준 충족을 통해 전세계를 선도하는 검역 달성

□ 향후 계획

- 항공기 보건상태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발의 추진(연내)
-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서식 개정 추진('24년)
- 검역업무지침 구체화 및 검역법 단계적 개정('25년)
-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보완(지속)

참 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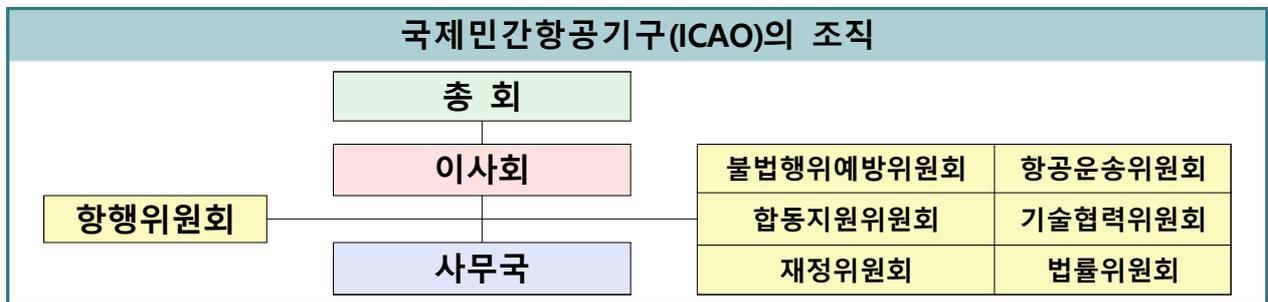
□ 설립목적 및 근거

○ (목적) UN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증진('47.4.4. 설립, '52.12.11. 가입)

○ (근거)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44.11.1 제정) 제43조로 “본협약에 의하여 국제항공기구라는 기구를 조직한다.”라고 규정

* '44.12.7, 시카고에서 52개국 서명('47.3월 비준 완료). 총96개 조문(+3개 bis)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7), 지역사무소(7)



○ **총회** : 이사국 선출, 회원국 분담금·예산 및 협약 승인 등

※ 매 3년마다 개최, ICAO 본부(캐나다 몬트리올)

○ **이사회**(총회 3년마다 선출, 36개 회원국 구성) : 항행위원회 설치, 부속서심의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

Part I (11국)	협약	항공운송에 있어 중요한 국가
	선출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경쟁 없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
Part II (12국)	협약	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에 공헌한 국가
	선출	항공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크고, 대부분 영토가 큰 국가를 선출
Part III (13국)	협약	Part I, II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로서 세계 모든 지역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선출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륙별 지역적 대표성이 있는 국가
	이사국	대한민국, 그리스, 페루, 도미니칸공화국, 튀니지, UAE, 파라과이, 코트디브와라, 잠비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적도기니, 수단

* 한국은 33차 ICAO 총회('01.9)에서 처음 이사국 PartⅢ에 진출, 35차 총회('04.10) 재선, 36차 총회('07.9) 3선, 37차 총회('10.10) 4선, 38차 총회('13.9) 5선, 39차 총회('16.10) 6선, 40차 총회('19.10) 7선

- 전문위원회 : 이사회 의 분야별 위원회(총 7개)
 - 항행위원회(19인) : 협약 부속서 제·개정 등 국제항공안전 분야의 모든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ICAO 내 핵심 위원회
 - * 우리나라 최초 진출('05.11), 재선('07.12), 3선('10.11), 4선('13.11) 5선('16.11) 및 6선('19.11)
 - 그 외 항공운송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위원회, 합동지원위원회 및 불법행위예방위원회 운영
- 사무국 : 5국(항행국, 항공운송국, 기술협력국, 법률국, 행정국), 7개 지역 사무소(태국, 카이로, 다카, 리마, 멕시코, 나이로비, 파리) 및 1개 지역 사무소 분사무소(베이징)
 - * ICAO 본부에 고용휴직 1명(강혜정事), 아태지역 분사무소(베이징)에 직무파견 1명(하후호事) 근무 중
- 전체 인원규모 : 800여명
 - ICAO 아태지역사무소 분사무소(ICAO APAC Regional Sub-Office, RSO) 인원 규모 : 16명(전문직위 7명, FPP 3명, 행정지원 6명)

2-2-1

감염병 병원체 조기 파악 위한 기술 및 역량 고도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담당자	김일환 연구관 ☎ 043-719-8141 e-mail : ilhwan98@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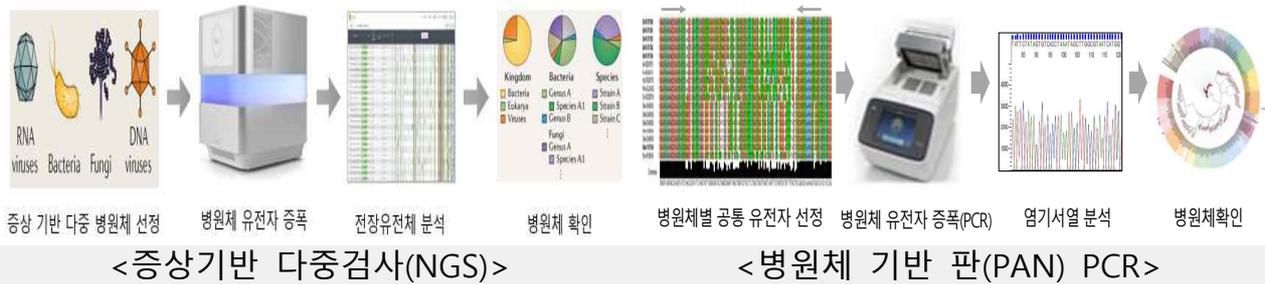
□ 추진 배경

- 세계·국가적 위협이 가능한 신종병원체 출현시 이를 조기 파악하고 특성을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단법 지속 개발 및 업데이트 필요

□ 주요 내용

◇ 미래 유행 가능 감염병에 대한 검사법 등 사전 확보

- **(미래감염병 진단)** 그간 국내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세계화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진 해외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
 - 미래감염병(28종)* 중 진단법 미구축 감염병(4종) 검사법 개발**하고, 이미 구축된 검사법은 성능개선***
 - * (28종 선정) WHO, 주요국, 학계 등 연구·분석결과 참조 및 국내 팬데믹 발생 현황을 감안하여 자체위험도평가 후 선정
 - ** (개발) '23년 3종(서교열, 옴스크출혈열, 헨드라바이러스), '24년 1종(전염성 농창)
 - *** (개선) 매년 3~4종씩 추진('24년~)
- **(미지의 감염병 진단)** 그간 인류가 경험치 못한 새로운 질병(Disease X) 출현 시 이를 신속히 규명하는 핵심 기술 확보
 - 증상기반 다중검사(NGS)* 및 병원체 기반 판(PAN) PCR 분석법** 개발(~'27년)
 - * ('23) 신경 24종 → ('24) 호흡기 26종 → ('25) 설사 26종 → ('26) 출혈열 26종 → ('27) 발진 26종
 - ** 같은 과(Family)이나 대변이로 인해 병원성 등이 전혀 달라진 병원체 검출 위한 진단기술로 코로나(코로나 등), 올소믹소(인플루엔자 등) 등 10종 대상, 연 2종 개발



- 병원체 배양 최적화 기술 자체 확보로 전문성, 숙련도 강화

○ **(병원체 유전자 통합 DB 구축)** 병원체 유전자 정보 축적·관리로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병원체를 DB 내 비교로 신속히 확인

* ('23년) 코로나-19, 생물테러감염병 등 17종

→ ('24년~) 연도별 우선순위 감염병 추가(보유량 등 고려)

- 감염병 병원체 통합 유전자 정보 DB 구성(안)

<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주요 기능 >

- 코로나, 인플루엔자, 고위험병원체 분류군 20종 통합관리
- 병원체별 유전정보(염기서열, 메타데이터) 체계적 관리
- 변이분석 및 계통분석 등 유전정보 특성 분석 도구 제공
- 웹기반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공유 기반 마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에 대한 PCR 진단중심 업무수행 -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시 진단 등 신종병원체에 대한 대비 강화 필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병원체 조기인지 및 적시 대응을 위한 Disease X 검사역량 강화 - NGS 다중검사분석법, 판 PCR 등 신종진단기술 확대 - 미래감염병 검사법추가(4종) -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DB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극대화

□ **향후 계획**

○ 미래감염병 검사법 개발 및 성능개선('24년~)

○ 증상기반 다중검사 및 병원체 기반 판 PCR 분석법 개발(~'27년)

○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통합 DB 운영 및 고도화('24년~)

참 고

미래감염병 28종 검사법 구축 현황

No	감염병	법정/ 非법정	병원체 분류	검사법 개발현황
1	신종인플루엔자	[제1급-16]	바이러스	완료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제1급-15]	바이러스	완료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非법정	바이러스	완료
3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非법정	바이러스	'23년 개발중
4	라싸열	[제1급-3]	바이러스	완료
5	뎡기열	[제3급-18]	바이러스	완료
6	치쿤구니아열	[제3급-24]	바이러스	완료
7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제1급-4]	바이러스	완료
8	리프트밸리열	[제1급-6]	바이러스	완료
9	에르리히아증	非법정	세균	완료
10	하트랜드바이러스	非법정	바이러스	완료
11	림프구성맥락수막염	非법정	바이러스	완료
12	엘리자베스킹키아	非법정	세균	완료
13	재귀열(이 매개 재귀열)	非법정	세균(리케치아)	완료
14	타히나열	非법정	바이러스	완료
15	마비저(glamder)	非법정	세균	완료
16	세인트루이스뇌염바이러스	非법정	바이러스	완료
17	선모충증	非법정	기생충	완료
18	북아시아진드기열	非법정	세균(리케치아)	완료
19	인위반충병	非법정	기생충	완료
20	진드기매개재귀열	非법정	세균	완료
21	앵무병	非법정	세균	완료
22	서교열	非법정	세균	'23년 개발중
23	참호열	非법정	세균	완료
24	로키산홍반열	非법정	세균	완료
25	아나플라스마증	非법정	세균	완료
26	진드기매개뇌염 (극동진드기매개뇌염)	[제3급-22]	바이러스	완료
27	옴스크출혈열	非법정	바이러스	'23년 개발중
28	전염성농창	非법정	바이러스	'24년 개발예정

2-2-2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신속한 진단시약 도입 및 검사기관 확대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담당자	박재선 연구관 ☎ 043-719-7849 e-mail : fried80@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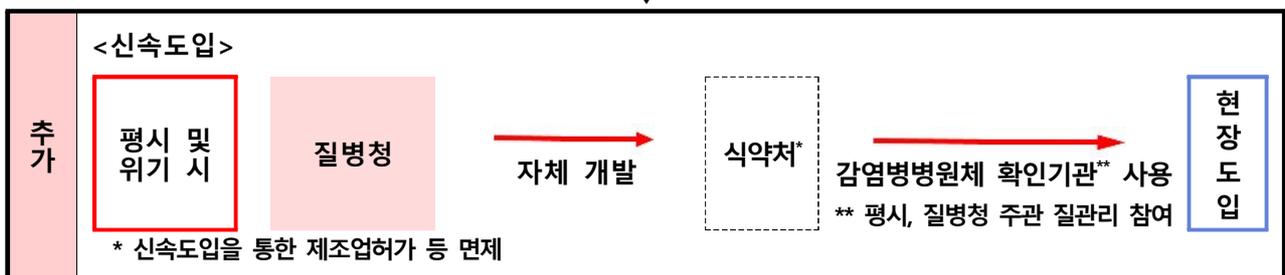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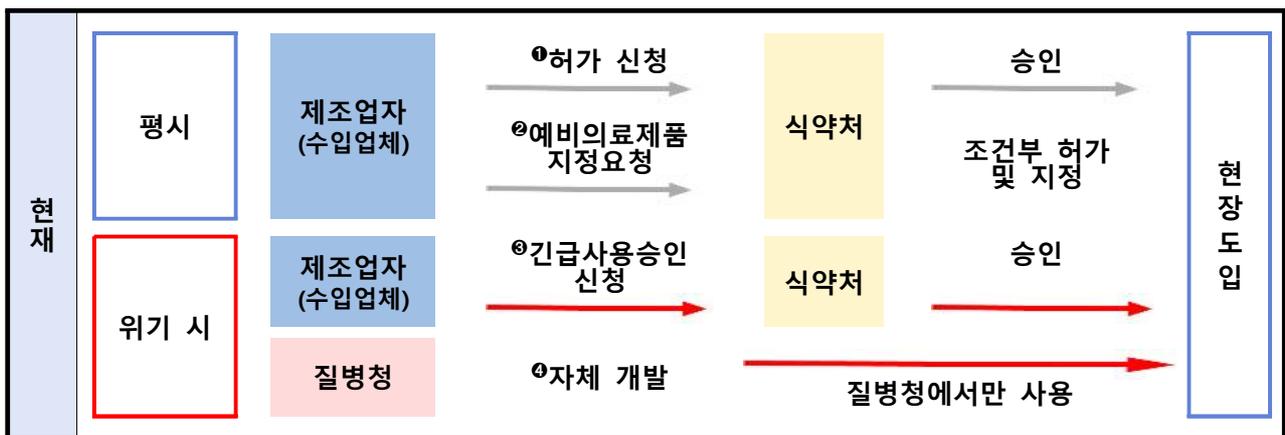
-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허가된 진단시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신속한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주요 내용

◇ 새로운 감염병 확산 전, 신속한 대규모 검사역량 확보

- **(법적근거)** 허가시약이 없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질병청 자체 개발 시약, 연구용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질병청의 감염병 진단제제 제조·구매·배포·사용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추진
 - ※ 예시: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도 위기(우려) 전까지는 질병청 개발 시약을 활용

< 진단시약 도입 절차 >



- **(공급체계)** 위기 시 진단시약의 신속한 도입 및 대량 공급 체계 마련
 - **(평가체계)** 개발단계의 진단시약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위기 시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진단시약 성능평가체계 구축
 - * 감염병 진단시약 평가를 위한 민관합동평가단 구성 및 1차 회의 완료('23년 6월)
 - **(비상생산)** 위기 시 대량의 시약을 생산·배포할 수 있도록 생산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이전하는 비상생산체계 제도화
 - * 비상생산기관 지정요건 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23년 12월)
- **(검사기관)** 비상시 신속한 검사기관 확대를 위해 진단검사 기관 인증제 도입
 - * 평시 인증된 기관 대상 교육, 공동훈련 등 지원하고, 위기 시 진단검사기관으로 우선 투입
 - ** 인증기준, 절차 마련 등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23년 12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시약) 긴급사용제도 등을 이용해 민간 시제품 활용 ▪ (검사기관) 위기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병원체 확인기관 대상 검사 가능 기관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시약) 질병청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한 시약 즉시 현장 활용 ▪ (검사기관) 사전 선정한 검사기관이 즉각 검사에 투입

□ **향후 계획**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식약처 협조, ~'25년)
- **(공급체계)** ▲평가 수요 발굴 및 감염병 진단시약 성능평가 실시 ('23년 下~) ▲비상생산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25년~) ▲우수병원체 확인기관 인증요건 확립 및 시범운영('24년~)

2-2-3

대규모 확산 상황에 맞는 진단역량 확보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담당자	박재선 연구관 ☎ 043-719-7849 e-mail : fried80@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대규모 유행시, 안정적 진단인프라 확장

- **(법적근거)** 現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제16조의2)에 미해당하는 기관*까지 대규모 유행 시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예시: (현재) 진단검사전문의를 상주하는 의료기관 → (개정) **위기 시 진단 검사전문의 미상주 의료기관 포함해 검사할 수 있도록 임시지정**

<유행 단계별 진단시약 확보 및 검사기관 확대 체계>

구 분		대비 (국내 유입 전)	초기 대응	유행 확산	대규모 유행	
진단시약	확보방안	미래감염병 검사법 등 선제적 구축	질병청 자체 개발 시약 배포 및 사용 (비상생산)	긴급사용승인 추진 (분자진단 등)	긴급사용승인 추진 (신속검사 등)	
검사기관	질병청	◎	◎	◎	◎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	◎	◎	◎	
	민간	인증된 의료기관		◎	◎	◎
		진검의 상주 의료기관			◎	◎
	진검의 미상주 의료기관				◎	

- **(질관리)** 대규모 유행시에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단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질관리 체계 도입
 - 지자체 실험실 표준운영·평가체계 구축 및 지자체 표준운영을 위한 컨설팅(~'24년)

- 민관 공동 숙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시: 코로나19 위기시 안정적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기관 대상 숙련도평가 프로그램 정기 운영

○ **(검체·검사법 다양화)**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신속히 다양한 검체 및 검사법을 평가하여 유효성 입증 등 과학적 근거 기반해 검체·검사법 다양화

- 유행 감염병의 원인병원체 특성에 따른 최적의 검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평가

* 호흡기감염병은 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객담 등 활용, 출혈열바이러스는 혈액, 옴폭스 등 발진 증상 감염병은 피부병변 등 적정 검체 활용

현황	개선
■ 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진단검사 수행	▶ ■ 대규모 유행시 한시적으로 병원체 확인기관 외에도 진단검사 수행

□ 향후 계획

○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및 질 관리체계 구축('24년~)

2-3-1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역학적 특성 분석 역량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담당자	이상은 연구관 ☎ 043-719-7977 e-mail : ondalgl@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유입 초기 확진자 증가 시 전통적 역학조사 방법(전화·대면)의 한계로 신속한 역학조사·분석법 개발 및 개선 요구
- 지자체별 역학조사반 확장 구성·운영, 신종감염병 초기 역학조사 대응 표준화, 역학 정보 수집·관리 체계 및 분석 도구 필요

□ 주요 내용

◇ 역학조사반 상시운영, 역학조사 대응 표준 운영 절차 마련 및 유관 부처 합동 대응으로 유행 확산 차단·관리
◇ 초기 사례에 대한 역학지표 분석 표준화 및 웹기반 분석툴 개발

- **(신속대응)**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반 관리, 역학조사 표준운영 절차 마련, 유관 부처 합동 대응으로 유행 확산 차단·관리
 - 중앙역학조사반 감염병별 TTX 중심 소집훈련·평가('23년~, 연1~2회)
 - 지자체(시·도/시·군·구)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현황 관리('23년~, 연1회)
 - 감염병 집단사례 발생 시 '중앙역학조사반 현장대응 매뉴얼' 개발(~'24년), 유관부처*별 감염병 담당자 연수 정례화('23년~, 연1회)
 - * 교육부/교육(지원)청(학교/학원), 법무부(교정시설), 국방부(육·해·공군), 경찰청 등
- **(특성규명)** 초기 확인 사례(FFX, First Few X cases)에 대한 주요 역학지표 분석 방법 및 신속 웹기반 분석 도구** 개발을 통한 분석 역량 강화
 - * 잠복기, 연쇄발병간격, 기초/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확산력
 - ** 통계프로그램 없이 표준화된 역학정보 이용 역학지표 특성 분석 간소화 웹기반 도구
 - FFX 조사·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임상·역학정보 수집 및 역학지표 분석 웹기반 분석 도구 개발('23년~'27년)*과 중앙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실용화를 통한 유행 확산 특성 분석 고도화
 - * 역학지표 기반 감염병 유행 정보 전향적 추론·분석 기술 개발(방역연계 R&D)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자체별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기반 미비 ■ 중앙역학조사관의 역학정보 분석 체계 및 역량 제한 ■ 유관부처 감염병 담당부서와 협력 체계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역학조사반 정기 소집훈련 및 지자체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현황 주기적 관리를 통한 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 역학지표 분석 도구 개발 및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한 적시 역학적 특성 정보 제공 ■ 유관부처 감염병 담당자 연수 정례화를 통한 협력 체계 및 신속한 합동대응 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 실시('23년~, 연 1~2회)
- 질병청-유관부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23년~, 부처별 1회)
- 역학지표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및 고도화('23년~'27년)
- 역학지표 분석 도구 매뉴얼 마련 및 교육('23년)

참고 잠재적 팬데믹 호흡기 병원체 관련 초기사례 조사

□ 잠재적 팬데믹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초기 사례 및 접촉자 조사

- **(배경)** WHO*에서는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신종 또는 재출현 병원체의 초기 사례 및 접촉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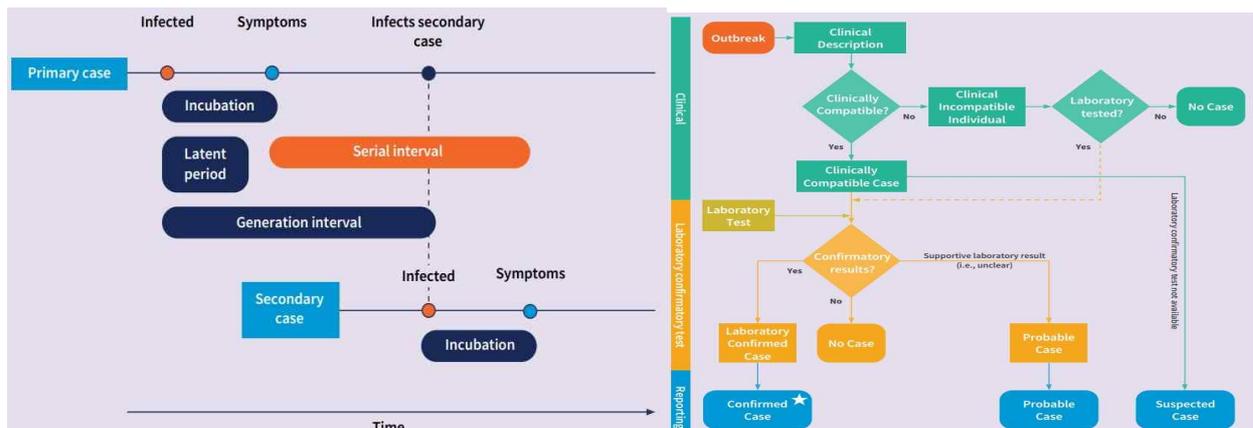
* The First Few X cases and contacts(FFX) investigation template protocol for respiratory pathogens with pandemic potential(WHO, '23년)

- 신종 또는 재출현 병원체의 검출 및 확산은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신속한 역학적, 임상적 및 바이러스학적 특성 이해 중요

- **(목적)** 신속한 역학적, 임상적 및 병원체 특성 규명을 통해 감시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위한 정보* 제공

* 사례와 접촉자 기본정보, 2차 발병률,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잠복기, 연쇄발병간격

- **(조사절차)** 초기 사례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및 진단검사 단계별 조사절차



<확진자와 접촉자의 역학지표>

<확진자의 임상적 및 진단검사>

- **(기대효과)** 신종 또는 재출현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조사(역학적·임상적·바이러스학적)를 통해 적절한 방역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 제공

< 관련 자료 >

- WHO('23년) The First Few X cases and contacts(FFX) investigation template protocol for respiratory pathogens with pandemic potential
- WHO('20.2.23.) The First Few X cases and contacts(FFX) investigation protocol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 Pandemic(H1N1) 2009 influenza in the UK: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findings from the first few hundred(FF100) cases. Epidemiol Infect 2010, 138: 1531-1541.

2-3-2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정책 효과 분석 역량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담당자	유명수 연구사 ☎ 043-719-7740 e-mail : acex01@korea.kr

□ 추진 배경

- 정책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 개발 및 고도화된 수리모델을 결합하여 중·장기 예측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억제 기여

□ 주요 내용

◇ 인공지능 등 거대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행예측 고도화 및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위기 대응 정책 효과 분석

- **(분석인프라)** 예측 고도화를 위한 계산 장비 및 인력 확보, 다학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전국민 규모 모델링 및 방대한 사회·환경적 변수 적용 분석을 위한 고성능분석장비* 도입(~'23년 12월) 및 전문 인력 확보
 - * 과기정통부 협력과제(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21~'23년) 연구성과물
 -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최신 유행예측 기법 도입 및 연구역량 강화(지속)
 - * 유럽 CDC, 대한수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리과학연구소 등
- **(유행예측 다양화)**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감염병 유행예측 기법 확대
 - **(모형개발)** 수리모형, 행위자기반 모형(개인단위의 전파모형), 인공지능 모형 등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예측 모형* 마련
 - * 코로나19 모형 외 1급감염병, WHO 지정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PHEIC) 감염 등으로 순차적 확대 ('23) 24건 → ('24) 27건 → ('25) 30건 → ('26) 33건 → ('27) 36건
 - **(모형고도화)** 개인, 집단* 등 세분화된 방역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전국민 전파 모형으로 확대(~'27년)
 - * 직장, 학교, 집 등 공간 전파를 반영한 질병 예측 모형(행위자기반모형 기반)

< 국외 주요 국가의 감염병 유행예측 모형 현황 >

국가	주관기관	플랫폼	예측값	모형 개수	비고
미국	CDC	CDC Forecast Hub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127	단기예측
유럽	ECDC	ECDC Forecast Hub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62	단기예측
캐나다	PHAC	-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3	단기·중장기 예측, 비약물적 중재효과 분석
독일	RKI	German and Polish COVID-19 Forecast Hub	확진자, 사망자	10	단기예측
미국	CDC	Covid-19 Scenario Modeling Hub	입원환자, 사망자	15	시나리오 기반 코로나19 중장기 예측
유럽	ECDC	ECDC Scenario Hub	확진자, 입원환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13	시나리오 기반 코로나19 중장기 예측

○ **(정책효과 근거)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시나리오 개발 및 유행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의 과학적 근거 제시('24년 상반기~)**

- 감염병 위기 시 유행 발생 단계에 따른 과학적 근거 제공 체계* 마련('24년)

* 코로나19 초기 영국 MRC 분석 사례(전파력 추정, 유행규모 분석 등) 복기 연구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발생 시 우선적 근거 제공 체계 마련('24년)

- 심층 정책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기반 중장기 예측 모델링 연구 및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예측 플랫폼 도입*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 R&D 사업 등을 활용('23년~'27년)

- 전국민 전파 모형을 활용하여 맞춤형 방역정책* 근거 마련(~'27년)

* 예) 영업 시간제한, 사적모임 제한, 격리수준 등을 고려한 효과 연구('21년~'23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연구진의 예측 결과 발표에 의존 ▪ 방역정책 수립시 맞춤형 방역 정책 근거 자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및 예측 플랫폼을 통해 예측 신뢰도 확보 ▪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맞춤형 방역 정책 근거 마련(전국민 전파 모형)

□ **향후 계획**

○ 예측 고도화를 위한 다학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예측 모형 개발(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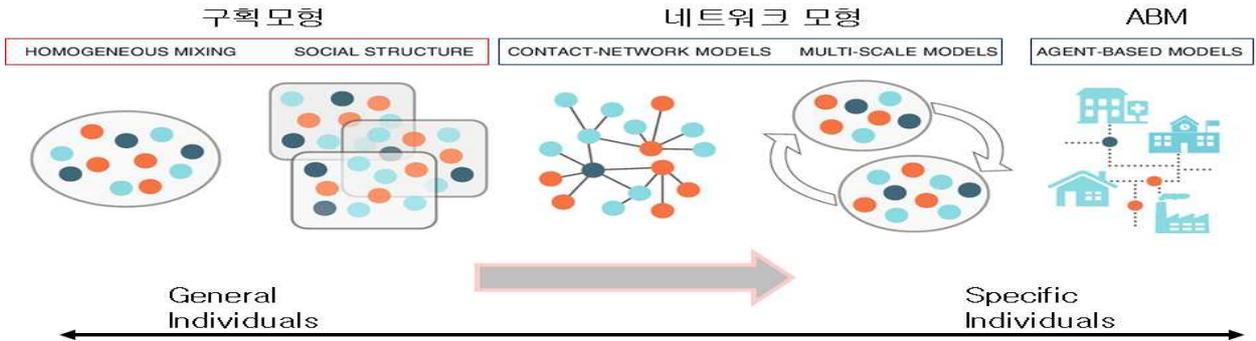
○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 제공 체계 마련('24년~)

○ 시나리오 기반 중장기 예측 모델링 연구 및 의사결정 지원 예측 플랫폼 도입('27년)

참고

감염병 유행 예측 모형 개발 전략(안)

□ (수리모형) 전파 특성에 따른 감염병 유행 모형 개발



* 구획모형: 공동체적 전파; 네트워크 모형: 집단별 특성의 전파 속성 고려; ABM: 개인의 속성을 반영

□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방역 조치 효과 분석 등 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23년~)

대표 모형	수리모형			기타모형	
	결정론적 구획모형	확률론적 구획모형	ABM (network모형)	AI 모형	통계모형
활용	단기 예측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 대응	단기, 중기 예측 및 방역 정책 대응	시간, 인원 등 미세 방역 정책 대응	단기 예측	단기 예측
추가 연구	연령구조 반영 ('23년도 정책연구용역)		-행위자 속성부여 연구 -특정 상황의 ABM 연구 ('23년도 정책연구용역)	'24년~	'24년~

□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한 사전 연구 및 대응 체계화 및 과학적 근거 생성

- 감염병 유행 시기별 필요 연구 범위를 설정, 자료 수집·산출 방법 등을 사전 목록화하여 체계적 대응

[연차별 위기 대응 중장기 연구계획(안)]



2-4-1

발생 초기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상시비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윤다솔 사무관	☎ 043-719-9152	e-mail : yoondat@korea.kr
	김정순 사무관	☎ 042-724-7209	e-mail : kimj@korea.kr

□ 추진 배경

- 방역물자(개인보호구, 마스크) 적정 상시 비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신속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국내 생산·공급기반, 방역물자 비축범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중장기 비축계획 수립을 통해 초기 6개월 대응 방역물자 상시 비축

- **(개인보호구)** 연구용역('21년) 결과* 반영, 발생 초기 6개월 대응을 위해 레벨D 보호복 300만개 등 개인보호구 10종 상시 비축 추진
 - * 4차 유행('21.12월) 확산기간 14일(Rt=6.0), 거리두기 56일(Rt=0.7)간 유지를 가정하여 초기 6개월 대응 필요량 산출
 - '23년 내 4종 비축 및 '25년 4종, '26년 2종 추가구매·비축을 통해 10종 전체 비축목표 달성 추진(~26년)
 - * (기달성) 4종(레벨D보호복, N95, PAPR, 고글), ('25년) +4종(속장갑, 겹장갑, 비닐가운, 페이스섶드), ('26년) +2종(손소독제, 마스크)

< 개인보호구 상시비축 목표량 및 현황 >

(단위: 만개, 기준일: '23.7.12.)

구분	전신보호		호흡보호			눈/안면보호		손보호		손소독제
	레벨D보호복	긴팔가운	N95	KF94	PAPR	고글	페이스섶드	속장갑	겹장갑	
목표량	300	219	580	1,828	0.1	170	351	810	328	8.9
재고량	354	171	752	3	0.4	320	158	497	150	-

- **(마스크)** 공적개입*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비축목표량 (KF94, 5,300만장)에 맞춰 마스크 비축 실시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등
 - 마스크 유통기한(3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상방출 하고, 신규 구매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당시 개인보호구 4주 최대 소요 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 초기 6개월 대응 가능 물량 (레벨D보호복 300만개 등) 상시 비축(~26년)

□ 향후 계획

- ('25년) 4종* 추가구매를 통한 8종 비축목표 달성 추진
 - * 속장갑, 걸장갑, 수술용가운, 페이스섨드
- ('26년) 2종* 추가구매·비축을 통해 10종 전체 비축목표 달성 추진
 - * 손소독제, KF94마스크

2-4-2

방역물자 및 위기대응 의료제품 수급관리 개선

소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김선영 사무관	☎ 043-719-2640	e-mail : sunyoungkim@korea.kr
	김성남 사무관	☎ 042-724-7268	e-mail : ok9023@korea.kr

□ 추진 배경

- 미지의 신종감염병(Disease-X)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 제품(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긴급조달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 백신·치료제에 대해 긴급 입찰로 신속구매 및 수급물량 상시점검
- ◇ 위기상황의 특성 및 제품 관리 필요성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 **(긴급조달)** 사업 시급성을 감안 긴급입찰(5일)로 진행하되 단일 응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추진
 - 수요기관이 긴급구매 요청한 경우 입찰생략하고 제조사(공급)와 직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감염병 예방 등)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 * **(계약방법)** 희망수량 입찰, 총액(적격심사), 수의계약 등
- **(공급물량 확보)** 질병청과 수시 협업(1주)으로 치료제 수급 물량에 대해 사전 체크하고 부족한 물량에 제조·공급사에 물량 확보 요청
- **(관리체계 개선)** 의료제품별 공급의 시급성,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분류(안) 및 관리방안* 마련
 - * **(관리방안 예시)** ①비축용 제품 : 비축정보 공유 및 관리 방안, 유효기간 연장 등,
②상시모니터링 제품 : 생산·수입 현황 모니터링
- **(시스템 구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3년~'25년) 추진하여, 대국민·범부처 포털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정보수집, 모니터링·분석 정보 제공) 마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응찰시 재공고 후 수의계약 ▪ 제품 특성, 공급 시급성 등에 대한 반영 없이 일률적 관리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통합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부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입찰로 진행하되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추진 ▪ 등급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기반 수급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통합관리·활용으로 행정력 강화

□ 향후 계획

- **(관리체계 개선)** 의료제품별 제품 분류(안) 및 관리 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 긴급사용승인, 조건부 품목허가 등 신속한 사전관리, 긴급 생산·수입명령 대응 수급관리 등 행정지원 및 정보제공

2-4-3

중환자실 등 운영에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 및 관리체계 개선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
담당자	윤성희 사무관 ☎ 043-719-9151 e-mail : yshkst@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정부(복지부, 질병청) 지원 의료장비(40개 품목, 5만 4천대)에 대해 각각 별도 지침·시스템으로 운영
- 신종감염병 대비 정부지원 의료장비의 관리주체 통합(복지부, 질병청 → 질병청), 단일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
 - * (시스템 통합관리) 지원장비의 등록, 사용보관, 이동배치, 양도폐기 등
 - ①(등록) 장비 상세정보(구입/지원일자, 장비명, 모델명, 의료기관, 보관장소 등) 입력
 - ②(사용보관) 의료기관 자체활용 장비에 대한 수리내역 입력, 점검 보고
 - ③(이동배치)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의료기관 장비 부족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장비 이동 처리
 - ④(양도폐기)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해 장비 활용이 불가할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양도 처리, 장비 고장 등으로 장비 사용이 불가할 경우 폐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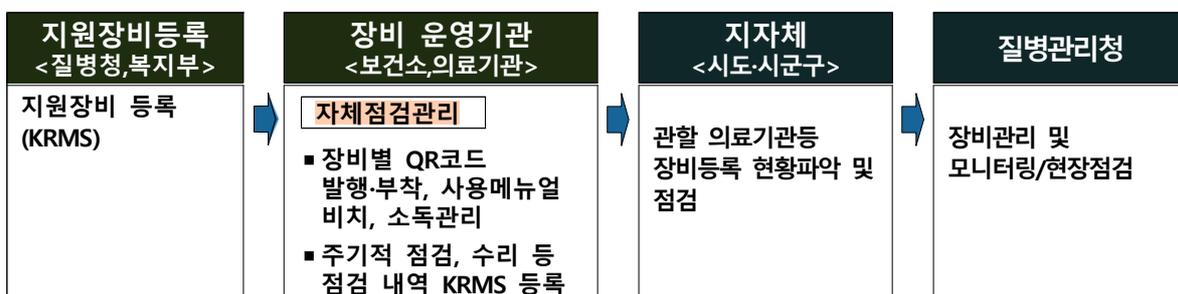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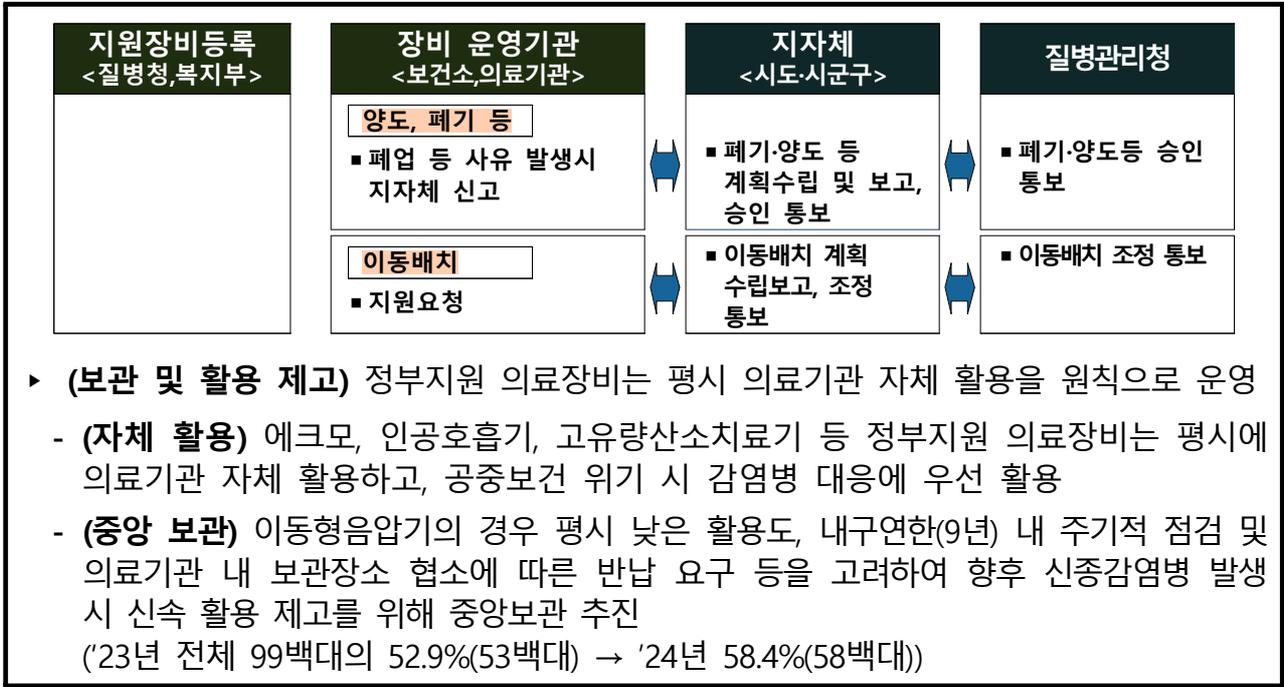
◇ 질병청에서 통합관리하고,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중증치료 의료장비 및 음압병상 설치 등 활용체계 사전 구축

- (통합관리) 정부(복지부, 질병청) 지원 의료장비(40개 품목, 4만대)에 대해 질병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재배치·양도·폐기 등) 실시('24년~)

- ▶ (통합관리 추진계획) ①관리대상 장비 품목 정비 및 입력항목 일원화('23.2월), ②통합관리지침 마련('23.3월), ③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으로 통합('23.下), ④장비관리주체 통합운영('24.~)

▶ (통합관리 운영체계)





○ (활용체계) 의료장비 활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정부 및 민간 장비 공동 활용방안 마련(’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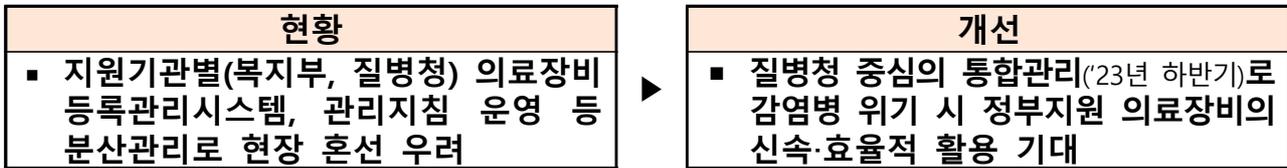
* 국내 생산업체, 수입업체, 학회, 지자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 ①의료기관 보유 의료장비 반기별 조사, ②확진자 발생 시나리오별 의료장비 수요추계, ③대규모 확진자 발생 대비 긴급 수요 대응 방안, ④의료장비 공동활용 네트워크(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체계 마련 등

< 코로나19 정부 지원 의료장비 현황 >

(단위: 대, 기준일: 복지부 ’22.10월, 질병청 ’23.10월)

구분		이동형 음압기	음압 캐리어	음압 휠체어	고유량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기타	계
복지부*	감전	1,470	182	87	1,492	941	33	20,949	25,154
	호클, 외진	683	7	6	7	7	-	2,570	3,280
질병청	의료기관	7,450	505	102	1,694	900	91	-	10,742
	선별진료소	353	61	-	-	-	-	1,002	1,416
총계		9,956	755	195	3,193	1,848	124	24,521	40,592

* (감전)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긴급치료병상, (호클) 호흡기전담클리닉, (외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 향후 계획

- 질병청 주관,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운영(’24년 1월~)
- 의료장비 활용 네트워크 구성(’24년 상반기), 운영

2-4-4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비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
담당자	황지영 연구관 ☎ 043-719-9161 e-mail : joshua51@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대비 초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축 전략 수립 및 단계적 비축 필요

□ 주요 내용

◇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비 초기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비축

- **(단계적 비축)** 중장기('23~'27년) 비축계획 수립('23년) 및 국가 비축 의약품 단계적 비축 추진
 - (치료제) 신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병 초기 유행상황 고려,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적정 비축 목표량 설정('23년)
 -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리계획 관련 연구용역 수행('23년)
 - (백신)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백신 도입('25년), 3세대 국산 두창백신 개발 완료 후 도입 추진
- **(신규도입)** 우선순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전문가 논의)등을 통해 신규 치료제·백신의 도입 추진
 - 신종감염병을 포함한 1급 감염병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 모니터링
 - 국가비축 필요 의약품 선정 연구용역('23년) 결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신규 의약품 도입 추진('24년~)

현황	개선
▪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비축 개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비축계획 수립('23년)▪ 위기시 신속대응을 위한 적정 물량 확보('24년~)

□ 향후 계획

-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신규 의약품 도입 추진('24년~)

2-4-5

ICT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자원관리과
담당자	이향복 사무관 ☎ 044-205-5273 e-mail : uly20000@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산·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피해 등 복합·대형화된 재난 발생 우려로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필요성 대두
- 특히, 재난의 대비·복구 과정에서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단체들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통합관리로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성 필요

□ 주요 내용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센터 운영

-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ISP('20년 9월~'20년 12월)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년 9월~'23년 8월)
 - 코로나19 방역·의료 물자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영 실시('23년 3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군구(읍면동) 보유 물품 등 재·본·보·자원 개별 관리■ 물품 단순 입력 등 기관별 수기 관리■ 자원 현황 파악 곤란, 동원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권역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바코드·QR코드 활용으로 자동 관리■ 통합관제로 필요 자원 적사·적소 동원

- **(정보센터 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위탁하여 시스템 및 센터 운영 수행('23년 1월~)
 - 시스템 시범 운영 및 데이터 이관 작업 실시('23년 8월~'23년 12월)

□ 향후 계획

- 재난자원관리법 제정에 따른 센터·시스템 공식 운영 실시('24년 1월~)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관련 운영 지원('24년 1월~)

참 고

기존 시스템(DRSS) 비교표

구 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RSS)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KRMS)	주요내용
이용기관		약 460개 기관	1,800개 기관 이상	현재 행정망 → 행정망·인터넷망 연계 이용기관·업무 확대 * 재난관리책임기관(약 1,400개), 감염병 대응 지정병원(약 400개) 등 이용예정
재난 관리 자원	물품/ 재산	190종 물품	3,000종 이상	고시물품 → 재난 시 필요한 전체 물품으로 대상 확대
	인력	29개 단체	재난자원 관리기관 및 29개 단체 등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 → 관리기관과 협약한 기관으로 확대
주요 기능	물품	현황, 응원, 훈련	물품수요, 공급망 관리, 현황, 응원·동원, 훈련	3단계 → 5단계 관리로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운영
	인력	-	인력자원 지역별 등록 및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자원봉 사자 인력 배분, 실적 등 통 합관리
민간 역량 활용	지원 기업	-	재난관리자원 공급·배송	국가재난자원 물류기업, 지원 기업 등 지정·관리로 민간역량 활용
	공급망 관리	-	공급망 조사, 등록, 데이터 분석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물품·인력의 공급망 조사하여 관리기관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관리
	비축 및 물류 관리	-	통합관리센터, 개별비축창고 등 비축시설 관리강화 및 물류 기능 구현	17개 시도 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재난관리물품 통합비축, 통합 관리로 효율성 극대화 *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구를 아우르는 통합비축시설로 운영

2-5-1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 개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김희숙 연구사 ☎ 043-719-9131 e-mail : nikita1025@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 인지와 초기대응, 지속적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

□ 주요 내용

◇ **감염병 유형별 시나리오와 고난도 상황 훈련 기법 개발 및 방역 대응 분야별 Disease X(DX) 도상훈련 전문화**

- **(훈련도구 개발)** 미래 해외유입 혹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DX에 대비, 감염병 특성에 따른 시나리오*와 다양한 훈련 방식** 개발
 - 감염병 유형별(위기상황별) 훈련 목표와 핵심역량 정의, 역량별 훈련 모듈 개발
 - * 치명률, 감염력, 전파경로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
 - ** 기존 토론기반 도상훈련에서 탈피, **실행기반의 기능훈련 도입** 등 훈련기법을 추가 개발하여 심도 있는 훈련 실시

< 주요 훈련 종류에 따른 훈련 내용 >

분류		훈련 내용
토론기반 (discussion-based)	도상훈련 (Table Top Exercises, TT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또는 가상의 재난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속하고 자발적 문제해결보다는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 기관의 문제해결, 정보공유, 유관기관 간 업무조정, 특정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측정
	기능훈련 (Functional Exerci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또는 여러 기능의 조합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유관기관 조정센터 근무요원 훈련에 초점을 맞춤 - 현실적이고 긴장감 있는 실시간(real-time) 환경에서 수행되지만 인력과 장비는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가상적으로만 이동
실행기반 (operations-based)	전면훈련, 종합현장 대응훈련 (Full-scale Exerci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훈련과 현장의 대응활동 및 자원의 실제 이동을 결합한 종합훈련으로 대응계획상의 기능 대부분을 포함하여 실시 - 인력과 장비가 실제로 배치,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하게 긴장감 있고 시간에 제약을 받는 환경에서 훈련 실시

- **(도상훈련 전문화)** 원인불명 감염병 초기대응을 위한 방역주체별 특화 대응체계 구축 및 도상훈련을 통한 지속 점검·개선
 - (중앙) 역학-진단 연계하여 원인불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전 최단기 원인규명을 목표로 역학조사 및 병원체 분석전략 마련
 - (지자체) 지역(기초·광역·권역), 기관 별 대응 범위·역할 사전 정비
 - (의료기관) 의심환자 방문 시 초기대응(신고, 격리, 병원 내 전파 예방)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급감염병 중 일부*로 제한적 * 중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 (훈련유형) 토론기반(discussion-based)의 도상훈련(TTX)으로 국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감염병의 전파경로·치명률 등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시나리오 마련 ※ 예 호흡기 출혈열 인수공통감염병 생물테러 유형 ■ (훈련유형) 실행기반(operations-based)의 기능훈련/종합현장 훈련 개발·적용

□ **향후 계획**

- 훈련 도구 개발(시나리오, 훈련 모듈 등 훈련 매뉴얼 등)(‘24년 4분기)
- 방역대응 분야별 훈련 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25년 하반기)
- 훈련 정례화(‘26년~)

2-5-2

국가 신종감염병 대응 범부처 종합 현장훈련(Full-scale) 체계 마련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김희숙 연구사 ☎ 043-719-9131 e-mail : nikita1025@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는 범정부적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 현장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실전대응 역량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 주관 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체계 마련 및 정기적 실시

- **(훈련체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범부처, 감염병 전주기 대응으로 확대 개편
 - (추진방식)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종합현장대응훈련(Full-scale Exercises)**으로 실시, **안전한국훈련(행안부)**과 연계 추진*
 - * 농림부·환경부·행안부 등 유관기관 훈련 적극참여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 훈련 계획 수립·운영 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되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실시**
 - (훈련내용) **방역주체별(부처(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실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기획·실시, 이를 위한 훈련 가이드**** 발간
 - * ①쏠부처 위기관리 직제 등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 시 기관별 대응매뉴얼 점검·실행실습, ②입국자 검역·진단·역학조사·접촉자관리·환자이송·진료 등 쏠주기 업무점검 및 실행실습 등
 - ** 방역주체별 필수 대응역량 도출 및 역량 기반의 훈련 모델 개발
- **(평가체계)** 평가도구 개발, 평가단 운영 등 **결과 환류·활용** 체계 마련

현황
관련 기관별 도상훈련 (Table-top, Discussion ba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위험상황을 제시하여, 상황별 기관의 대응절차 확인 및 역할점검 ■ 현장 대응훈련 보다는 문제의 인식 및 기능점검 중심으로 시행



개선
범부처 전주기 종합 실전훈련 (Full-scale, Field Operations ba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위기상황에 준하는 훈련으로 감염병 대응 흐름에 따라 실시 ■ 위기 상황 시, 부처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현장대응 역량 함양

□ **향후 계획**

- 범부처 종합 현장훈련 사례조사 및 훈련 운영·평가체계 구축('24년 2분기)
- 훈련 가이드 발간 및 훈련 도구 개발('25년 상반기)
- 훈련 시범 운영('25년 하반기)
- 범부처 종합 현장훈련 정례화('26년~)

참 고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 (개요) 감염병 유입·확산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집합훈련

구분	주요내용
주요목적	가상 시나리오 활용 모의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체계 점검 및 초동대응 역량 강화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5호 -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야 함
훈련구성	감염병 교육(강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실행기반·토론기반),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을 기본으로 한 시도별 특화 구성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청) 훈련운영안내서(참고 시나리오 포함) 보급 및 평가 (각 시도) 훈련기획 및 운영 (보건소 및 지역유관기관) 훈련 대상자로서 참여* * 각 시도별 훈련기획에 따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검역소·보건환경연구원·소방·경찰·군·교육청·의료기관 등 추가 참여

- (그간의 경과(연혁)) '04년 조류독감 국제적 유행 등에 따라 범정부 '신종전염병 위기관리훈련' 시행, '10년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영

*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

시기	'04~'05	'06	'07	'10~'19	'22**	'23***
훈련명	신종전염병 위기관리 훈련	전염병 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대응 지자체 훈련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 교육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시행 기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부산광역시 부산대병원	각 시도	각 시도	질병관리청
방식	직접사업	직접사업	보조사업	보조사업*	보조사업	직접사업

* ('16~'19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위탁, '지자체 역량개발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행

** ('20, '21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미시행, ('22년) 질병관리청 직접 추진

*** ('23년) 질병청 주관 기존 훈련 대상자(시군구 보건소) 외에 복지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 검역소, 시도(감염병관리과) 및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훈련생으로 참여

2-6-1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영미 사무관 ☎ 043-719-7721 e-mail : ymkim616@korea.kr 장정우 주무관 ☎ 043-719-7015 e-mail : force721@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 시 필요한 대응 업무와 전문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관 양성

□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학조사관 질적 역량 강화

- **(교육 체계화)** 역학조사관 필수 역량 함양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교육 체계화 및 분야별·과정별 맞춤형 교육 진행(계속)

	전문과정	일반과정
대상자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관
기간	2년(+1년 연장 可)	1년(+1년 연장 可)
필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 기본 교육(120시간 집합, 이론 및 실습 교육), 지속 교육(회당 16시간 집합, 분석 등 특화 이론 교육), 감시 분석 보고서 및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기타	논문, 보도자료 작성	

- **(국제 교류)** 글로벌 협업 경험 축적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파견(계속)

* 국제백신연구소와의 2차 협력의향서 체결('23.6.)에 따라 '24년 6월까지 6명(최대) 파견 예정

- **(교육 기관)**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관* 신설 검토

* 역학조사관 교육만으로 기관 설립은 한계,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을 지원(빅데이터 분석,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질병청 전체 교육을 담당할 기관 설립 추진 필요

- 추후 공공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위탁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 추진(~'27년)

- **(인사 교류)** 중앙-지자체 간 역학조사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추진
 - (단기) 질병청-시도 역학조사관 단기(4개월 이내) 교류(파견) 추진
 -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수요 조사 실시(~'24.上), 교류 시행('24.下)
 - (장기) 단기 교류 추진 이후 성과 및 한계점을 평가한 후 파견·교류가 가능한 일반직을 대상으로 정식 인사 교류(1년) 추진
- **(근무 여건)** 점진적인 경력직공무원 채용* 확대로 신분의 안정성을 높여 보다 안정화된 역학조사 인력 구성 추진(계속)
 - * 채용시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既수료자, 역학 분야 有경력자 등 우대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역학조사관 대폭 확충에 따라 질적 역량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교육 체계화 ■ 국제 교류 및 중앙-지자체 인사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현장 능력 강화

□ **향후 계획**

- 국제기구 훈련 프로그램 파견(지속)
- 중앙 일반직 역학조사관 확대(지속)
- 역학조사관 표준 교재 개발('24년~)
- 질병청-시도 단기 인사 교류(파견) 시행('24년 하반기)

2-6-2

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및 비상동원체계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담당자	류시익 사무관	☎ 043-719-7702	e-mail : fairy94@korea.kr
	김영미 사무관	☎ 043-719-7721	e-mail : ymkim616@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대응 인력 부족 경험, 향후 대규모 팬데믹 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및 동원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감염병 위기시 즉시 대응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 **(인력확충·양성)** 역학조사관 및 예비방역인력 등 방역 대응 인력 확충
 - * 美CDC 10만명당 1명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0만명당 1명 권고
 -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발생 초기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등 전국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토록 근거 마련('23년 4분기~)
 - * 10만명 미만 시군구 93개 100% 배치시 현 600명대에서(10만명 미만 43개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중)에서 650명대 까지 확대 전망(10만명당 1.2명 수준)

< 역학조사관 배치 법적 기준 및 배치 인원 >

구분	메르스 이전	2016년 개정	2020년 개정	전면 개정*(발의예정)	
중앙	-	3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시도	-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0만명 이상 시군구	-	-	1명 이상	1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	-	-	1명 이상	
배치 인원	전체	34('15년 기준)	100('16년 기준)	325('20년 기준)	596('23.11. 기준) → ^{max} 647(개정시)
	중앙	16	53	102	100
	지방	18	47	223	496→ ^{max} 547(개정시)

* 단, 전면 개정시 의무 배치 규모는 시행령으로 이관할 예정

-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방역관·역학조사관·감염병 실무자·예비방역 인력 등 역할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 강화(지속)

* 연간 교육인원('24년안 기준) : 방역관(기본/심화) 120명, 역학조사관(기본/지속/보수) 810명, 감염병 실무자(팀장/담당자/예비방역인력) 2,750명

- (감염병 교육 의무화) 전체 공무원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교육 의무화*

* 「감염병예방법」 개정 완료(공포 '23.8월, 시행 '24.9월), 시행령 개정 예정(~24.上)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직원 1시간, 보건소 소속 직원 4시간,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의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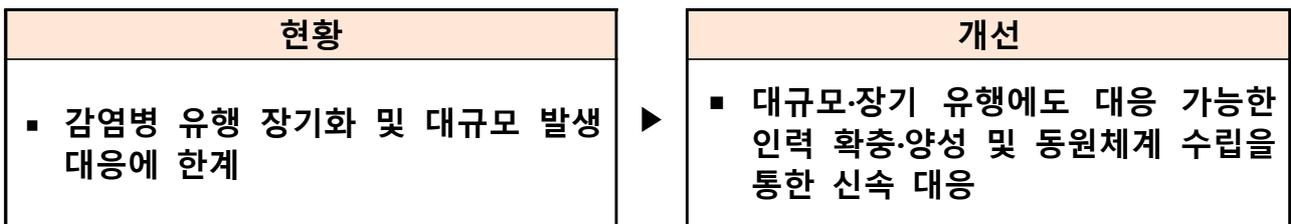
○ (동원체계) 유행 상황에 따라 非 감염병 대응 인력까지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인력풀 마련) '23~'26년(4년간) 예비방역인력* 1만명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

*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업무 인력 외 타부서 동원 인력 등

<단계별 인력 확보 및 대응체계>

	유행 초기(상시)	유행 확산	최대 유행
대응인력	중앙·지자체 역학조사반 보건소 담당팀 보건소 내 의료인력	감염병 외 타부서 동원 보건소 인력 전반 범부처 인력 동원(군·경 포함)	범부처 인력 동원(군경 포함) 지자체 전체 대응
대응수준	사례별 심층 조사	제한적 조사 (간소화된 항목)	고위험·취약집단 중심 조사항목 최소화 IT 기반자율보고 정착
인력소요	3,000명~6,000명	6,000명~10,000명	10,000명~15,000명 유지



□ 향후 계획

- 전국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근거 마련('23년.下~)
- 감염병 대응인력 역할 맞춤형 교육 실시(지속)
- 전체 공무원 대상 감염병교육 의무화 시행('25년~)
- 예비방역인력 교육 등 통한 동원 인력풀 마련('23년~'26년)

2-6-3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등의 전문인력 확충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기욱 사무관	☎ 044-202-2435	e-mail : giwok@korea.kr
	배윤영 사무관	☎ 044-202-2745	e-mail : yunyoung2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반영해, 감염병 대규모 유행 시 부족했던 중환자실, 중환자 대응 의료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교육 필요
-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전공의 배치 및 수련여건 개선 필요성 증가

□ 주요 내용

◇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등의 전문인력 확충 및 여건 개선

- **(전공의)**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분야 전공의 정원 확대 검토 및 의료계와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 위한 논의 지속
 - (정원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및 전공의 수련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 * 18세 이하(만명) ('12) 1,041 → ('21) 798(23.3%↓),
65세 이상(만명) ('12) 577 → ('21) 857(48.6%↑)
 - ** 내과 전공의 지원율(%) : ('21) 102.3 → ('22) 117.5 → ('23) 117.0
 - (수련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등 협의 구조 지속 유지
 - * (구성)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등 13인 (역할) 전공의 수련정책 관련 논의
- **(수가개선)**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 개선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원
 - * (현행) 병상 수 → (개선) 낮은 병상가동률 고려하여 환자 수 적용, 간호인력·전담전문의 추가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강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의료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 및 수련여건 개선 필요 ■ (중환자실) 간호사, 전담전문의 당 병상수 기준 수가 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의료 관련 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수련여건 개선 논의 지속 ■ (중환자실) 간호사, 전담전문의 당 환자수 기준 변경, 보상 세분화

□ 향후 계획

- (전공의) '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실시(~'24.2월말)
 - * '24년 전공의 배정안 확정(11.15.),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통보(11.16.)
- (수가개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적용('24.1.1.~)

2-6-4

의료인력 부족 시 지원체계 구축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팀		
담당자	이서연 사무관	☎044-202-2691	e-mail : lsy421@korea.kr
	이현주 사무관	☎ 044-202-1824	e-mail : titan21@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유행 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용 군의관·공보의 및 중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 양성 필요

□ 주요 내용

◇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 **(군의관·공보의)** 감염병 발생 초기 중환자 치료 등을 위한 전문의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지원체계 상시 구축
- 국방부·지자체 협조를 통해 즉시 동원 가능한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규모를 사전 협의하고,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중증병상 중심으로 배치
-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관리)** 既양성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22년 1,361명) 인력 풀(pool) 지속 관리*하여 신종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연계·매칭 지원
*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심평원) 통해 지속 관리
- **(숙련간호사 전문관리)** 전문분야별·지역별 숙련간호사 인력 풀(pool) 구성하여 필요시기(감염병 발생 등)·분야로의 연계 지원*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통한 인력 풀 구성·관리방안 검토('24년)
- **(민간의료인력)** 시스템 관리 중인 파견자 정보를 파견의료인력 풀로 활용,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등), 검사기관 등에 단기 파견 지원*
-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있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직종별 파견자 중심으로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 풀('23.3월 기준 약 1만 명) 유지
* 기관 내 자체 인력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인력확보가 어렵거나, 병상확보 명령 등에 따라 대응인력 부족 시 지원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유행 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용 간호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수요 급증 시 신속하게 역량있는 간호사 연계

□ 향후 계획

-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심평원) 통해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인력 풀(pool) 지속 관리('23년~)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통한 숙련간호사 인력 풀(pool) 구성·관리 방안 검토('24년)
-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인력 체계적 운영·관리방안 마련(~'24.下)
 - 의료인력 확보·배치 및 파견인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체계적 활용방안

2-6-5

의대생 등 의료인 대상 감염 교육 강화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진상인 사무관 ☎ 044-202-2431 e-mail : achilles0908@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대규모 유행 시 의료진이 즉각적 진료 투입, 환자 관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인 양성 단계부터 전문적 감염병 교육 필요

□ 주요 내용

◇ 미래 감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및 교육 지원

- **(실습지원)** 감염 교육에 관심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감염특화 실습 프로그램 지원('23년~)을 통해 현장 수련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감염 전문인력으로 양성
 - 의대생 감염분야 실습프로그램 지원('23년~)
- **(교육강화)** 전공의 공통역량교육 프로그램* 내 감염 관련 교육 강화
 - *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역량에 대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기초과정(인턴대상)/심화과정(레지던트 대상))
 - 감염관리 교육 내용 구체화를 위한 온라인 교안 개발 및 전공의 감염교육 온라인과정 제작 추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의 공통역량교육 프로그램 내 관련 교육 진행 <p>* 기초과정 내 일부로 감염관리(감염관리의 범위와 내용/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손위생과 격리) 교육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교안 제작 및 시스템 적용▪ 전공의 감염교육 온라인과정 개설

□ 향후 계획

- '24년도 필수의료분야(감염분야) 의대생 실습 사업 기관 공모 및 학생 선발('24.5~6월)
- 필수의료분야(감염분야) 의대생 실습 실시('24.7~'25.2월, 하계·동계 방학기간)

2-7-1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 043-719-7816 e-mail : kyd1017@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대규모 환자 발생(surge) 시 신속 격리·입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대응 상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고도화 필요

□ 주요 내용

◇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인프라 확충

- **(중증병상 확충)** 감염병 유행 급속 확산 대비 안정적 의료대응을 위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 약 3,500개 확보(계속)

*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인실 음압격리병상 최대 확보 노력

** 1주일 내 신속 확보 가능 병상으로, 평시에도 교육·평가 등을 통해 적정성 유지

- 신종감염병 발생시, 확보된 상시병상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대응, 대규모 확산시 민간 의료기관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대응
- 격리입원료 인상, 상시병상 수가 신설 등 건보수가 개편을 통해 상시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상시병상 3,500개 세부 확보계획 >

구분	코로나19	미래 팬데믹
감염병전문병원	-	1,041개(신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370개(+100)
긴급치료병상	436개	2,136개(+1,700)
계	706개	3,547개(+2,841)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관리절차 신속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조달청, 기재부 등) 협력, 사업 진도관리 등 신속 구축 추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5개소) 현황: 호남권(조선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기존 일반격리시설 리모델링 및 신규 확충을 통한 음압격리병상 추가 확보(270개→370개, '25년)

- **(긴급치료병상)**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보(복지부 추진, '24년)
* 확보예정병상: 총 1,700병상(중증 600, 준중증 800, 특수·응급 300)
- **(특수병상 확충)** 특수환자(투석, 분만, 소아 등) 및 기저질환자 등의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특수병상 확충(긴급치료병상 1,700병상 중 300개, '24년)
* 감염병전문병원과 모병원 간 역량 연계를 통해 특수환자 치료 역할 수행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유행 시 충분한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병상 부족 상황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환자 치료병상 확충으로 日100만명 발생에도 초기 안정적 대응기반 확보

□ 향후 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관기관(기재부·조달청 등)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절차 완화 및 신규(2개소, 수도권·제주권) 예산 반영시 예타 면제 등 협의 추진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미설치 지역(세종) 및 인구대비 병상부족 지역(경북, 전남 등) 수요조사('24.1月~) → '25년까지 100병상 추가 설치
- **(긴급치료병상)** 사업 공고('23.4~5월)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23년내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 및 '24년까지 긴급치료병상 구축 완료

2-7-2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거버넌스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 043-719-7816 e-mail : kyd1017@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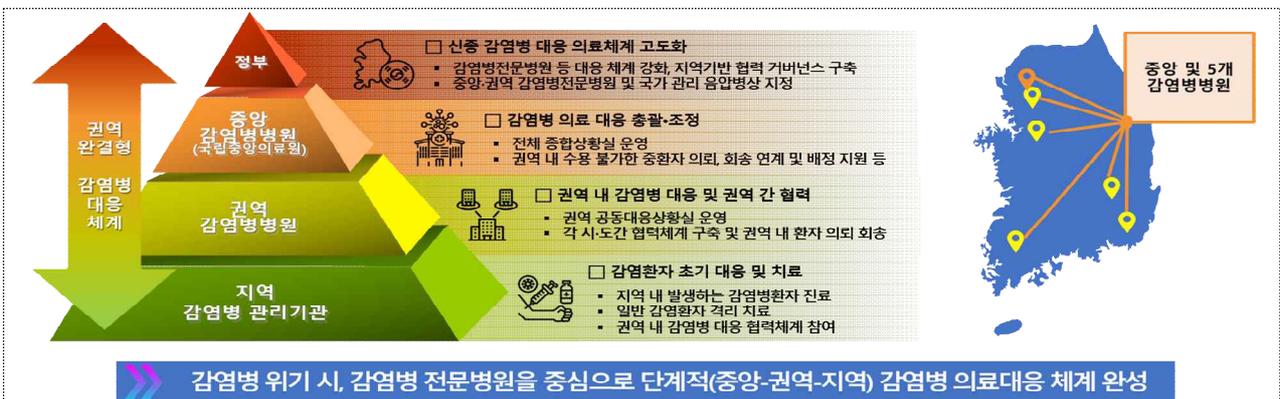
- 다원화된 운영체계(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및 중앙정부 중심의 의료대응으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중앙-권역-지역별 체계적인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일원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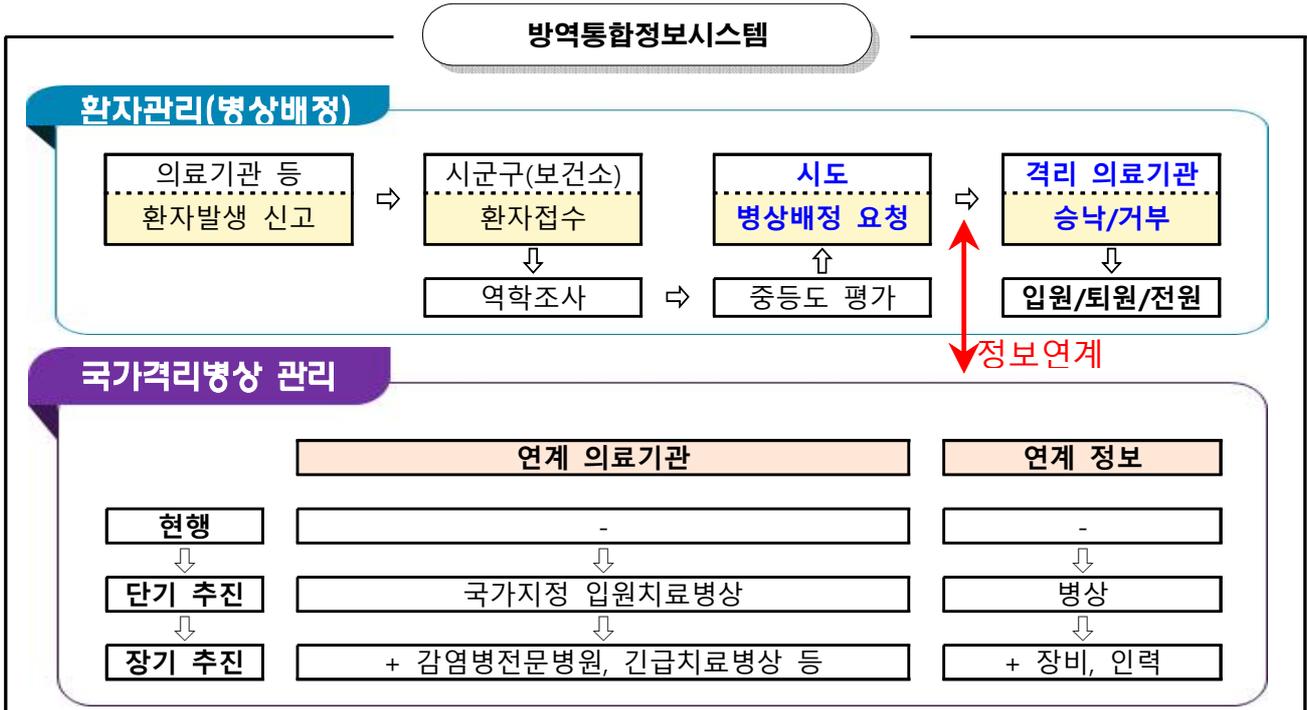
◇ 신종감염병 대비 단계별(중앙-권역-지역) 조정·협력체계 및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대응 역량 강화

- **(중앙감염병병원 기능)** 전국 단위의 감염병 환자치료 및 의료인력 교육·훈련 지침, 배정시스템 개발, 연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총괄 기능 확립
* 중앙감전 역할·기능 정립 총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22.12~'24.12)
- **(권역완결형 거버넌스 구축)**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질병대응센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 (전달체계) 중앙감염병병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능 확립(병상배정, 환자 전원 등 감염병병상의 효율적 활용, 전문인력 교육 등, '23년~)
 - (권역완결형 대응) 위기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역량 공동 활용 등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 권역 완결형 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



- **(정보시스템 구축)** 신종감염병 대비 효율적 환자관리 및 병상자원 활용 등 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3년 하반기~)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內 환자 의뢰·회송 및 병상배정 기능 구축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감염병 대응체계 부재 ▪ 감염병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상시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구축으로 위기시 신속·효율적 대응력 제고 ▪ 시스템을 통한 환자관리 및 병상자원 활용으로 감염병 위중증 환자의 사망방지

□ **향후 계획**

- **(중앙감염병병원 기능)** 감염병병상 운영기관 대상 교육·훈련 시범 운영 및 신종감염병 표준 교육프로그램 마련('24년~)을 통해 상시 기능 강화
 - **(권역완결형 거버넌스 구축)** '23년 시범사업 성과 공유('23.12月) 및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권역 맞춤형 감염병 거버넌스 구축 지속 추진
 - **(정보시스템 구축)** (단기추진)시스템 분절 문제 우선 해결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현황 자동집계 기능 구축(~'24년)
 - (장기추진)기관 및 연계정보 확대 등 단계적 기능 고도화*('25년~)
- * 긴급치료병상,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정보연계 의료기관 확대 및 추가 정보 연계

2-7-3

병상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 043-719-7816 e-mail : kyd1017@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대응인력 구성 및 역량 확보와 의료자원의 상시 가동성 유지 및 적시 활용을 위한 병상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평가체계 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를 통한 병상평가 및 질관리 강화

- **(평가체계 개선)** 종합적 관리역량 위주의 병상평가, 지정 해지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병상관리체계 고도화 및 전체 감염관리기관으로 평가 대상 확대
 - (관리체계 고도화) 질병청(질병대응센터)-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상시병상 운영기관 평가개선 및 지침개정(~'23년 12월)
 - (해지 기준 마련) 평가 결과에 따라 역량 미흡 기관(평가하위, 기준미달 등) 지정 해지 제도를 마련하여 병상 질관리 강화(지침개정, '24년~)
 - (대상 확대) 전체 감염관리기관 대상 감염관리 통합평가 제도 마련('26년)
- **(인센티브 강화)**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차등지급 및 우수기관(유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계속)
 - (운영비 현실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시설 상시 가동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설비관리,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운영 등 운영비 현실화(계속)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비 단계적 현실화('23년) 16 → ('27년) 41백만원 확대)
 - (장비 지원) 중환자·특수환자 치료 위한 필수 의료장비 지원 확대('25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비 위주의 감염병 병상 평가 시행 ■ 병상 운영비 부족, 의료장비 노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관리역량 평가로 개선 및 평가 연계 인센티브 강화로 운영 수준 고도화

□ 향후 계획

- **(평가체계 개선)** 건보 수가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지표 도입하여 전체 감염관리기관 대상 감염관리체계 통합평가 실시('26년~)
 - * **(현행)** 시설 위주 적정성 → **(개선)** 감염관리역량, 인력 등 종합역량평가 지표 추가
- 현행 병상단위(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평가에서 감염병관리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 역량평가로 확대 추진
- **(인센티브 강화)** 감염병관리기관 종합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상시 병상 지원 확대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수가 차등 지급 등)

2-7-4

중증도에 따른 환자 격리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소관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 환자관리지침팀, 상황총괄단 격리관리팀		
담당자	김희숙 연구사	☎ 043-719-9131	e-mail : nikita1025@korea.kr
	김다혜 주무관	☎ 043-719-9356	e-mail : kimda0801@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 대비, 환자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 체계(치료·격리 등) 사전 마련하여 감염전파 및 중증화 예방 필요

□ 주요 내용

◇ 발생 규모에 따른 환자 격리 인프라와 관리체계 구축 및 치료제 처방 적정화 전략 사전 마련

- **(시설 확보)** 병원(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등 임시시설(시설치료)과 같은 환자 격리시설 사전에 확보 및 도입체계 구축(~'24년)
 - * 대유행 대비 지자체별 임시시설(치료·격리시설) 확보(지자체별 권역완결형 체계 구축 및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사전 지정 및 위기 시 신속 전환 계획 등 포함, 경증환자 치료 및 병원 진료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임시 모듈형 병동 등- 구축 병행) 및 운영 매뉴얼 마련·보급
- **(격리 관리)** 중증도별 배정 원칙에 따른 환자 격리, 병원·임시시설·자가 등* 격리장소별 맞춤형 치료 및 질관리 매뉴얼 마련·보급
 - * 확진자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 고려한 분류(triage) 및 격리 기준
- **(격리이탈 예방)** 격리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격리순응도 제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 자가격리앱(자가진단·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
 - ** 적정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 생활지원제도 개선
- **(치료제 처방 적정화)** 신규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인지도 향상 위한 교육·홍보 전략 사전 확립(~'24년)
 - * 처방 관련 기관(의료기관, 담당약국) 단계적 확대 전략 등
 - ** 질병청 주관 교육 외, 필요시 제약사 인프라(학술마케팅 등)를 활용한 전방위적 집중적 교육·홍보 실시(정기적인 치료제 효과평가 및 근거 제공 체계 개발 병행)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관리) 대량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치료 시설의 신속 공급·관리에 한계 ■ (치료제) 정보 제공 부족 및 처방 인프라* 제한으로 치료제 활용 저조 * 처방 관련 기관(의료기관, 담당약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관리) 환자 관리 시설* 도입체계와 관리 매뉴얼** 마련으로 대유행 발생 시 필수 시설과 서비스 적시 제공 * 임시시설(치료·격리), ** 중증도별 배정 원칙, 맞춤형 치료, 격리 이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치료제) 적극적 교육·홍보 계획 및 처방 인프라 확대 전략의 사전 확립으로 인지도 향상 및 접근성 제고

□ 향후 계획

- 격리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24년 계획수립) 및 관련 제도 마련(개선)('24년)
- 치료제 처방 인프라 단계적 확대 계획 및 교육·홍보 전략 마련('24년)
- 격리장소별 맞춤형 치료 및 질관리 매뉴얼 마련·보급('25년)

2-7-5

유행상황 대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담당자	박소영 사무관 ☎ 044-202-2732 e-mail : soyoung6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대응 인프라 유지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활동 필요성 증대
 - 의료기관 내 호흡기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등의 확산 방지 및 상시적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의료기관 감염 대응 인프라·활동 지속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

- **(격리실)** 격리실 정규수가* 인상 추진,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검토
 - * **(일반병실)**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 **(중환자실)** 입원료+격리관리료(일반, 음압)
- **(항생제 관리)** 항생제 사용관리(ASP) 관계 법령 정비, 전담인력 배치 및 의료기관 내 활동 등 핵심 요소 마련에 따른 적정 보상 추진
- **(감염예방관리료)** 감염관리 활동(호흡기감염병관리 등)과 보상 간의 연계 통한 감염예방관리료 보상 강화 방안 검토
 - * 요양병원 의료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연계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23년 7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항생제내성관리 수가 부재 ▪ (감염예방관리료) KONIS 등 감시체계와 연계한 급성기감염예방관리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실) 격리실 입원료 정규 수가 인상 및 상시 지정음압격리병상 별도지원 검토 ▪ (항생제) 항생제내성관리 수가 신설 ▪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등 상시적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가 정비 지속 검토

□ **향후 계획**

- **(격리실)** 격리실 수가 인상 적용('24.1.1.~),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신설 적용('24.1.1.~)
- **(항생제 관리)** 항생제 사용관리(ASP) 활동 평가체계 및 보상방안 검토
 - 수가 지급을 위한 ASP 활동 자동화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질병청)
 - 건강보험 수가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및 적용(복지부, '24)

2-8-1

백신·치료제 신속 도입 기반 마련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담당자	조은영 사무관 ☎ 043-719-6825 e-mail : younga956@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국내 허가된 백신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국내외 제약사에서 새롭게 개발중인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한 국내허가 및 도입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규백신의 조기·신속 도입체계 마련

- **(국내외 제약사 협력)** 백신 연구·개발 상황 등 최신 과학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주요 제약사와 정기적인 면담 및 회의 개최
 - 개발중인 백신의 국내 도입여부, 해외 접종관련 정책 및 제약사와 협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검토 필요
 - 신속한 백신 개발, 공급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제약사와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 및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감염병 유행상황 및 방역상황에 따라 필요시 개발중인 백신 확보방안 등을 신속하게 협의·결정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 감염병 대응 백신의 개발·공급가능성이 높은 제약사 및 국가 동향 파악 및 협상을 위한 외교적·행정적 협력 필요
 - 관련부처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운영(안) 의견 수렴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추가 검토 예정
 - 협의체 산하 백신도입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정기·수시 운영*
- * (협의체 미운영시) 연2회(반기별) 개최하여 국내 감염병 유행 및 백신수급상황, 예방접종계획 등 우리청 현안 공유 및 논의
(협의체 운영시) 국내외 주요동향 수집·공유, 각 부처별 안전발굴 등 협의체 회의진행을 위한 사전협의

[범정부 협의체 부처별 역할분담(안)]

연번	부처명	담당 업무	비고
1	질병청	범정부 백신도입 TF 총괄, 백신개발동향 파악, 제약사 협의 및 계약체결, 제약사별 백신 도입물량 및 일정 협의	
2	복지부	국내생산기반 투자유치, 국내치료제·백신 생산 지원	치료제·백신개발 TF 백신허브화 추진단
3	식약처	백신의 수입 및 제조 품목 허가, 긴급사용 승인 백신의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 품질검사	
4	외교부	백신스왑 추진, 정상회담 지원 해외백신동향 파악, COVAX 수석대표	
5	기재부	백신 예산 확보, 예산 관련 쟁점 검토 예산상 절차·방법 지원	
6	국조실	부처간 협력 지원, 총리 주재 회의 개최	
7	산업부	국내생산 백신 원료공급 지원, 국내생산기반 투자유치	
8	행안부	지자체 및 중대본 협조	
9	관세청	백신 신속통관	

- **(전문인력 확보)** 백신의 신속·유연한 도입을 위해 필요시 관계부처·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 정부법무공단과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전문인력 파견을 위한 MOU 추진 등 협의('24년 상반기 내 협의 완료 목표)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사와 필요시에만 협상 진행으로 백신개발 및 각 국가 백신 수급상황 파악이 어려움 ▪ 범정부 협의체 구성체계 미흡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협력의 어려움 ▪ 계약, 협상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계약조건의 공정성·합리성 결여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사와 정기적 면담 및 회의 개최를 통해 제약사별 백신 개발, 해외 허가 및 수급상황 파악 가능 ▪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마련하여 백신도입을 위한 신속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계약, 협상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계약조건의 공정성, 합리성 강화

□ **향후 계획**

- 국내외 제약사 면담 등 회의 개최('23.11월)
-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안 마련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24.상반기)
- 정부법무공단 전문인력 파견지원 협의추진('24.상반기)

2-8-2

30일 내 전국민 백신 접종가능한 인프라 대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권승현 사무관	☎ 043-719-8371	e-mail : haramkwon@korea.kr
	박권순 사무관	☎ 043-719-8395	e-mail : gray3844@korea.kr

□ 추진 배경

- 백신 도입 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접종 과정 전산화 등 추진체계 사전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단기간 대량 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접종 추진체계 구축

-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 교육 강화와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시행비 현실화 노력* 등 대규모 접종에 대한 절차 등 마련 추진
 - * 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 포함 추진 중이며, 국회 등 협의를 통한 시행비 인상 및 소아가산 추가 적용 추진
 - 시행계획 위주의 교육 과정에서 효과성·안전성 등 근거 기반의 교육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의 접종에 대한 이해 강화*
 - * 코로나19를 포함한 위탁의료기관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39개 → 41개) 및 운영
- **(순과정 전산화)**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통해 대량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으로 전환
 -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접종대상자, 백신 유형, 실시간 백신 수급 모니터링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접종 인프라 유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의 질적·양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접종 환경을 구축·관리하여 대규모 접종 상시 대비
 - ①단기 의료역량 집중, ②충분한 백신 확보, ③현재 접종인프라 수준 유지 시 3~4주* 이내에 전국민 예방접종 시행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일평균 접종 약 100건 ▲NIP 위탁의료기관 : 약 22,000개소 ▲일 최다 예상접종량 : 2,222,000건 ⇒ 전국민 대상 약 23일 소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비) 연례적 1% 인상 ■ (교육강화) 사업 시행계획 위주 교육과정 ■ (전과정 전산화) 신종감염병 대비 대량 접속 및 신규 백신 적용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비) 소청과 경영난 해소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유도 ■ (교육강화) 근거 기반 교육을 통한 담당 인력의 예방접종 사업 이해 및 전문성 강화 ■ (전과정 전산화) 대량의 사용자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시스템 전환(27년 12월)

□ 향후 계획

- 단계적 시행비 인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 다방면의 검토**에 기반한 근거 확보 및 예산 확보(對기재부, 국회)

*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7.11월 ~ '18.5월)

**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 청취, 건강보험 급여 방식 참고 등

- 대규모 접종 인력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접종 환경 구축

* '24년 위탁의료기관 대상 교육 콘텐츠 확대(39개 → 41개)

- 클라우드 환경과 최신 IT 기술이 적용을 위한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23년 12월)

2-8-3

실시간 이상반응 감시 및 보상체계 정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진희 사무관	☎ 043-719-8391	e-mail : ropa@korea.kr
	김지애 사무관	☎ 043-719-2705	e-mail : jiaemaria@korea.kr

□ 추진 배경

- 예방접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상반응 감시 체계 운영 필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요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따라 부작용 환자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피해구제 절차 체계화 및 상담 서비스 확충 필요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2(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신설

□ 주요 내용

- ◇ 이상반응 발생 후 의료자원 이용정보 분석을 통한 예방접종 이상 반응 능동감시 체계 마련하는 연구 추진
- ◇ 신종감염병(신규백신), 국내외 보상제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 피해 보상금 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 근거 마련 연구 추진
-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절차 체계화 및 상담 서비스 확충

- **(감시강화)** 예방접종자료(질병청)와 의료이용자료(건보공단)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하여 이상반응 발생 경향 등을 분석
- ‘질병청-건보공단-민간전문가’ 공동연구로 정책연구*를 통한 이상반응 능동감시 체계 마련 중
- *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능동감시 체계 마련 연구('23년 7월~12월)

- **(피해보상제도 개선)** 국내외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제도 및 기준, 국내 피해보상금 제도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근거 마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인과성 평가 기준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추진
-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23년 8월~12월)

< 주요 내용 >

①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제도 및 심의기준, ②보상금 산정 기준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제도 전반, ③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재심위원회 구성, 운영절차 개선 방안 연구

- **(피해보상 절차 체계화)**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피해구제 신청 시 처리 절차 등 실질적 운영 시 고려사항에 대해 상세 절차 마련('23년~)
 - **(안내·상담채널 확충)** 피해구제 제도 관련 질문에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은 상담용 챗봇을 구축·운영하여 상담 원활화 및 제도 인지도 제고('24년~)
- * 누리소통망 전용 채널 챗봇 구축('23년 12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제도 운영('94년~) ■ 접종자/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이상반응 자료에 기반한 이상반응 수동감시 체계 운영('94년~) ■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른 긴급사용 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체계화 필요 ■ 피해구제 관련하여 상시 문의할 수 있는 창구 부재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평가기준, 보상제도 외 팬데믹 상황 하의 신종감염병 및 신규백신 특성이 반영된 피해보상제도 마련 ■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와 접종자 의료서비스이용 정보를 분석하는 이상반응 능동감시체계를 병행 운영하여 예방접종 안전관리 강화 ■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른 긴급사용 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운영 시 고려사항에 대한 상세 절차 마련 ■ 피해구제 관련 문의에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챗봇 구축

□ 향후 계획

- **(감시강화)** 인플루엔자/로타 예방접종 이상반응 능동감시 결과를 예방접종 이상반응 능동감시 분석 체계 운영 근거로 활용하고, 새로운 이상사례 모니터링 체계에 활용할 예정
- **(피해보상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제도 개선 방향 타당성을 확인 후 제도개선 및 관련 법 개정의 근거 마련에 활용할 예정
- **(피해보상 절차 체계화)**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상세 절차 마련 추진
 -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위기대응의료제품법)과 종전 허가의약품(약사법) 병용 투여의 경우 등 피해구제 심의 시 진행절차 등 마련
- **(안내·상담채널 확충)** 상담용 챗봇을 구축 및 운영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피해구제 안내 예정

□ 이상반응 능동감시를 위한 체계 마련

○ **(법규정비)** 이상반응 능동감시 분석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 정비('22.10월)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개정('22.10.4.)

↳ 시행령 제32조: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근거 마련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탁업무 처리 규정」 제정 완료('22.10.28.)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능동감시 업무 방향 및 DB연계 빅데이터 구축 업무 협의 중('22.11월~)

○ **(정책연구)** 위탁기관(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통해, 연구진행에 필요 사항을 사전 조율('23.3.10., 5.30.)

* 분석대상 예방접종, 자료연계 방법, 전문성보강 위한 전문가 참여 필요, 빅데이터 구축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 전문성 보강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이상반응 능동감시 계획안* 검토('23.6월)

* 국외 능동감시 제도, 능동감시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 분석 방법 등 사전 검토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선 마련

○ **(정책연구)**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 주체 및 보상 주체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전반의 제도개선 연구 추진 중('23.8~12월)

- 국내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및 인과성 판정 비교조사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인과관계 판단 주체와 보상 주체간 독립성 확보 개선안 마련 예정

*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제도 및 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 운영절차 개선 방안 등

2-9-1

사회대응 체계 정비

소관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담당자	김혜원 사무관 ☎ 043-719-9349 e-mail : khwik277@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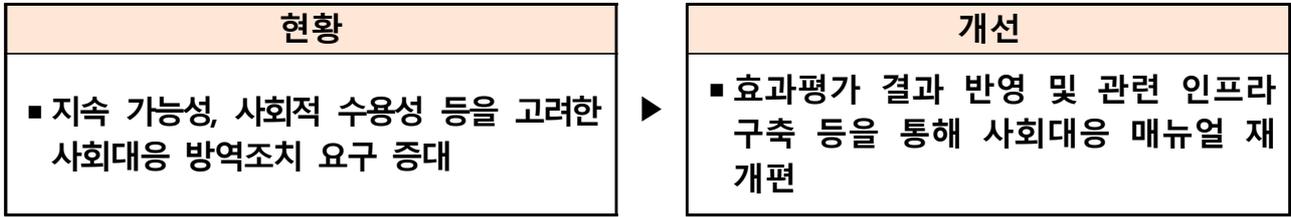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유행 확산 방지 위해 실시했던 다양한 사회대응 조치를, 정책 효과성, 국민 수용성 등을 제고하여 사회대응 매뉴얼로 재정비 필요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유행 시기 실시했던 사회대응 방역조치 체계 개편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비 사회대응 역량 제고

- **(효과 평가)** 기존 사회대응 방역조치의 정책 효과성,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 및 개편 방향 설정에 반영
 - * WHO, '23년 6월 지침개발그룹회의(GDG) 소집하여 코로나19 유행 시기 실시한 비의료적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효과 분석, 우선순위 설정 검토 및 개정 방안 논의
- **(지표개발 및 평가고도화)** 방역·의료 측면 효과 평가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정보수집체계 구축
 - * 이전 단기 모니터링 예비 연구 결과(붙임 1) 고도화세분화하여 사회경제지표 체계 구축
 - 과학적 근거 기반의 사회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정책 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방역정책 효과 예측 모델링 기법 고도화 및 전문인력 확충
- **(수용성 제고)** 사회대응 매뉴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 개편 과정에서 국민인식조사, 의료·사회·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견 반영
- **(매뉴얼 개편)** 효과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장 조치 및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사회대응 매뉴얼 마련



□ **향후 계획**

- 국내외 사회대응 방역조치 평가 및 영향 분석(~'24)
- 사회경제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 결과 기반으로 지표체계 구축(~'24)
- 분석·평가, 연구용역 추진 결과 등 반영하여 사회대응 매뉴얼 개편(~'25)

영역	지표명	상세 지표(안)	측정 내용	분석 결과
경제	소비지출 영향	- 업종별 신용카드 지출	특정 영역(예: 여가, 숙박, 식음료 업종)의 소비 지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변동
	일자리 영향	- 실업급여 수급자수	감염병 위기가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 측정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18~'19년 대비, '20~22년에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증가. 특히 여성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수 증가가 크게 관측
	소상공인 영향	- 소상공인 영업일수	소상공인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에 따른 변동이 크게 나타남
사회	위기가구	- 긴급복지 지원건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변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로 '20년 3월부터 '생계지원' 지원 건수가 빠르게 증가
	사회고립	-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사회적 고립 정도	'20년에는 간헐적으로 증가하다 '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 ,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
	의료 접근성	- 외래 방문 일수 - 응급실 이용량	감염병 위기로 취약해진 의료접근성을 측정	'20년 3월부터 급감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측됨 . '21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년 수준 회복 못 함.
	교육환경	- 대면/비대면 수업 시간	교육 환경의 변화를 측정	'20년에는 원격수업 비율이 높았으나 , '21년 3월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때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등에 대해 전면등교 실시 등 등교 제한 조치 완화
	인구동향	- 혼인건수 - 출생아수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가속화에 미친 영향 측정	'20년 3월 이후 '21년까지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 출생아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속 감소 중이나 '22년에 더욱 감소
수용성 · 위험 인식	인구이동	- 인구이동량	사회활동 변화 및 방역정책의 국민 수용성 변화 측정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여 '20년 3차례 유행에서 최저점이었으나 , '21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 추세
	위험인식	- 위험 인식도	감염병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 장기 지속 에 따라 위험인식 감소 추세

구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	향후 개선 방향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에 따른 단기적 정책 변동으로 정책 수용성 저하, 국민 불편 초래 * 3단계('20.6월) → 5단계('20.11월) → 4단계('21.7월) ▪ 단계별 적용 조치 사항 방역 상황에 따라 지속 조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기별 적용 우선순위, 적용 기간 등에 대한 논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경험과 다양한 방역 수단을 근거로 대유행 장기화 가능성 사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초기 → 백신치료제 등 의료적 대응력 제고 시기 → 일상회복기의 과정 고려 - 보다 일관성 높은 거리두기 체계 및 단계별 전환 기준* 제시 * (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평가 지표 및 단계적 조정 방안('23.12.23. 발표) ▪ 단계별 적용 우선 순위, 적용 기간 등을 설정해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예)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준의 조치 우선 적용,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발생 초기 시기에 집중 <table border="1" data-bbox="901 929 1420 1234"> <tr> <td>발생 초기</td> <td>*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21시~6시</td> </tr> <tr> <td>의료대응력 확보 시기</td> <td>*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일부 고위험시설 위주(유흥업소 등) 영업시간 제한 지속</td> </tr> <tr> <td>일상회복기</td> <td>*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관리 지원</td> </tr> </table>	발생 초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21시~6시	의료대응력 확보 시기	*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일부 고위험시설 위주(유흥업소 등) 영업시간 제한 지속	일상회복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관리 지원
발생 초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21시~6시							
의료대응력 확보 시기	*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일부 고위험시설 위주(유흥업소 등) 영업시간 제한 지속							
일상회복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관리 지원							
영향 분석 및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 보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규모/범위 등 예측 및 사후 분석자료 확보 필요 -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지표 마련 필요 ▪ 방역조치 및 방역조치 변동 등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자료 확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사회경제지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 효과 유무 분석, 거리두기 강도의 적절성 등 평가 -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거리두기의 영향력 편차 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계층별 사회적 수용성 파악 - 사회경제지표체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활용 ▪ 감염병 유행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모델링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사회대응 조치의 정책적 근거 보강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존재 ▪ 전문가 자문 중심*의 거리두기 조정 의견 수렴 (생활방역위원회, 국가감염병전문가자문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시설 내 활동별 특성 등 고려하여 위험시설 분류 체계 및 조치 내용 재정비 ▪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국민인식조사, 의료·사회경제 전문가 의견 등)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 						

2-9-2

감염예방수칙의 생활화 및 건강지킴문화 확산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원정책과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김혜원 사무관	☎ 043-719-9349	e-mail : khwik277@korea.kr
	최경선 사무관	☎ 044-202-7497	e-mail : cksun070@korea.kr
	최준하 사무관	☎ 044-203-6814	e-mail : jhchoi17@korea.kr
	강영민 교육연구사	☎ 044-203-6745	e-mail : teiresias19@korea.kr
	김병윤 사무관	☎ 044-203-6497	e-mail : bykim@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위기 시 일상 속 감염 예방 수칙의 자율적 실천에 대한 중요성 확인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을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 기제로 활용할 필요
 - 학령기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과 감염병 확산 시에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원의 재택근무(수업·업무) 운영, 학생의 출결·평가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 일상 생활에서의 기본 생활방역수칙 지속적 실천이 보편적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인식 강화 위한 안내·홍보
- ◇ 아프면 쉬는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① 방역수칙 생활화(질병관리청)

- **(생활방역 실천을 제고)** 국민이 평상시 생활방역수칙을 각종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단으로써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올바른 생활방역수칙 실천 방법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 (예) 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캠페인, 공공시설·의료기관 등 화장실에 올바른 손씻기 방법 안내문 부착 등

- 기존 홍보 채널(카드뉴스, 아프지마tv 등)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 상의 교육·홍보 사업 활용하여 실천을 제고

* (사업내용) 감염병 취약인구집단 중심 맞춤형 참여 교육·홍보 시행, 대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시행, 지자체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 평가 등('23년 3월~11월)

② 지원환경 조성(고용노동부, 교육부)

- **(재택근무 활용 유인)** 현재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에도 동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학교 교육)** 개인위생 수칙 및 학령기 빈발 감염병의 특성 등에 대한 학교 교육 및 가정과 연계한 실천 지도 강조(매년초 교육부 지침 전파)
 - 각급학교에 매주 단위로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 등 감시정보 전파로 경각심 제고, 관련 교과시간 등을 활용 보급된 자료 활용 지속 교육
 - ※ 【교육부】 '15년 MERS 계기로 유·초·중고생용, 학교관리자 및 관련교사용 교육자료 및 학부모용 홍보자료 개발 지원('23.9월 기준 116종 보급 활용 중)
 - ➔ 개발·배포된 자료는 교육부 운영 학생건강정보센터·학교별 누리집 등 탑재
 - ※ 개인 예방수칙 보건교육과 함께 소아·청소년기 빈발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 특성·예방수칙·조기진료 및 등교관리 강조
- **(교원 연수)** 매년 학교 관리자·보건교사 등 담당교원·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개설 운영*, 사례공유 및 대응매뉴얼 보완 등 역량 강화
 - * 교육부주관 연수과정 운영(기본/심화과정 구분), 교육부 및 교육청산하 연수원 내 상설 연수과정 개설 운영(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관계자, 교수 등 참여)
- **(인프라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한 유~중학교 신입생의 접종력 확인 통합연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교육부-질병청),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24년~), 학교대응 매뉴얼 보완**('23년~)
 - 유행시 학교 내 대응체계·방역물품 비축 모델 제시, 위기상황 대비 학교·교육청·보건소 연계 대응훈련 정례화 등 교육기관 대응역량 강화
 - * <초·중학교> NEIS-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 /<유치원> 확대('24~)
 - ** MERS이후 '유~대학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15년) →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고려 매뉴얼 취약사항 보완 연구(~'23년) 및 현장 적용('23년말~)

- **(교원 재택근무)** 방역수칙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원격수업 운영
 -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 사유 발생 시 등교수업 운영 시와 동일하게 수업결손 예방 조치(보결교사 확보, NEIS 시간표 조정 등) 실시
- **(출결 관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의 건강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출결 처리 및 평가 관리 지원
 - 학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기저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등교중지, 백신접종 등을 위해 출결 상황 및 평가 인정점 부여 등 관리
 -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학생건강정책과)을 바탕으로 대응하되, 상황과 여건 등에 따른 관련 내용 별도 안내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춘 생활 방역 수칙 제시 및 안내 ■ 공동체 건강관리 규범 정착에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역수칙 실천 문화 정착 ■ 아프면 쉬는 문화, 재택근무 등 공동체 건강관리 규범 활성화

□ 향후 계획

- 일상 속 생활방역수칙 실천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안내('23~)
- 생활방역 실천 현황 파악을 위한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24년)
- 방역수칙 교육·홍보 방안 발굴을 위한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 진행(~'24년)
-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홍보·안내(계속)
- 「제2차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및 교육부·교육청 등 추진('24년~)

2-9-3

분야별 감염병 예방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과정지원팀)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의료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담당자	고용부	황규석 서기관	☎ 044-202-8872	e-mail : gyuseok.hwang@korea.kr
		최정윤 사무관	☎ 044-202-8820	e-mail : ejdrmf12@korea.kr
	복지부	장태준 사무관	☎ 044-202-3975	e-mail : jtj6101@korea.kr
		박선화 사무관	☎ 044-202-3481	e-mail : parksh11@korea.kr
	교육부	최준하 사무관	☎ 044-203-6814	e-mail : jhchoi17@korea.kr
		강병혁 연구사	☎ 044-203-6717	e-mail : beautydj@korea.kr
	소방청	소방경 신혜원	☎ 044-205-7722	e-mail : shinhyewon92@korea.kr
		주무관 서수진	☎ 044-205-7723	e-mail : ssj1006@korea.kr
	국방부	강성구 서기관	☎ 02-748-6781	e-mail : cyfolove7@korea.kr
	법무부	설영웅 주무관	☎ 02-2110-3012	e-mail : snowhero@moj.go.kr
김준엽 주무관		☎ 02-2110-3885	e-mail : shine2887@moj.go.kr	
해수부	류충현 사무관	☎ 044-200-5742	e-mail : orwell1984@korea.kr	
	박찬수 사무관	☎ 044-200-5771	e-mail : parkchansoo@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전 분야별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지침 운용, 지원체계 등 보완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사업장·학교·군·소방 등 전 분야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

①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고용노동부)

- **(지침 제정)** 신종감염병 대유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업장 공기 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KOSHA GUIDE) 제정 및 보급('23년)
- * 위기경보단계에 따른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근로자 교육 및 홍보, 위험성 평가 방법 등

- **(지침 홍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의 신종감염병 관련 대응 지침* 신속 안내
* 사업장별 업무연속성계획 예비적 수립 지원, 다국어 버전 대응 수칙 전파 등
- **(교육 강화)** 감염병 위험단계를 고려, 감염병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지침 시달(~'24년)
- **(교육자료 지원)** 사업장 감염병 예방 관련 활동, 자체 교육 및 직무교육 기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장 감염병 예방 가이드' 개발·배포('24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당국의 방역수칙 관련 지침을 기반으로 사업장 관련 지침 개정·배포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시 감염병 관련 내용 선택적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 제정 및 보급 ■ 감염병 위험단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지침 시달, 가이드 개발·배포

②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교육부)

- **(감염병 매뉴얼)** 빈발·신종 감염병 특성, 교육현장 의견(기관내·기관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관련)을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완·개정*('23년~)
* 감염병별·유행단계별 모의훈련 시나리오 고도화, 학교·교육행정기관 조직의 명확한 역할·책임 분담 인식을 위한 기관별 대응 중심 서술 등 추진
- **(원격수업 운영기준)**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안내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23년~)
-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23.3.1.)*에 따라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수업과 평가 운영
*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유행상황별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 원격수업 운영 기준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완·개정 ■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③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보건복지부)

- **(지침 개정)**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필요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건강관리’ 분야 개정 추진
- **(긴급보육 실시)** 어린이집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 실시 등을 통한 보육 공백 최소화

* 지역감염 확산 양산,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원 여부 결정하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가 원내 아동 보육 실시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휴원 시 보육 공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보육공백 최소화

④ **소방분야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소방청)

- **(역량기반 강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대응)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전문화된 조직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기반 강화
 - (법적근거) 소방의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대응)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인력 및 예산, 장비 확보를 통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23년~)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 (전담조직) 감염병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는 ‘이송~자원관리’까지 일반 구급과 구분되는 특수성으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인력)* 수행 요구(24년~)
 - * 환자이송 대책 수립, 구급활동 조정·통제, 인적·물적 자원관리 등 체계화
 - (업무역량) 감염관리 담당자 및 현장대원 대상별 맞춤형 집합·사이버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을 통해 감염질환 예방·대응(24년~)
- **(인프라·제도 개선)** 음압 구급차, 다목적 감염관리실 보강 등 환자 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감염병 접촉 보고체계 등 제도 개선
 - (장비보강) 감염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23년 49대, 24년 14대) 배치(23년~)
 - (대원보호) 감염관리 장비·물품 관리체계* 및 다목적 감염관리실 보강**(24년~)
 - * 감염보호복 등 감염장비·물품 보유기준 마련, 비촉기지 지정·운영 등
 - ** 감염관찰실, 구급차 소독시설 등 감염관리 시설 보강으로 대원 보호

- (제도개선) 감염병 접촉 보고체계 개선* 및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마련(23년~)

* 기준, 서식 등 보고체계 통일 및 데이터 기반 감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 소방기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으로 119구급대 현장활동 지원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전담 조직 부재로 예산장비 한계 ■ 대원보호(지원)제도, 교육 기회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 한계 및 대원 감염 노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환자 이송 인프라 구축으로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적·체계적 예방 및 대응 가능(24년~)

5 군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국방부)

○ (컨트롤타워 강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감염병 대응전담 조직·인력 강화

- 각 군에 감염병 위협 대응 전담 조직·인력 강화 (~'24년)

- 군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안을 통한 군 내 컨트롤타워 강화 (계속)

○ (정보시스템 구축) 군 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대응·관리를 위한 전군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 추진

-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26년)

*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체계 구축·운영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밀 환경 등 감염병 위협에 취약한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26년)

⑥ **수용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법무부)

○ **(감염병 매뉴얼)** 포괄적인 감염병 특성, 소속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완·개정

○ **(점검회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정기회의*(계속, 연 2~4회) 및 소년 보호시설 자체적 수시점검회의 실시

* 교정시설 방문 및 직원 교육, 질의응답 등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경과 >

- ('22. 7. 5.)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서울동부구치소)
- ('22. 9. 2.) 감염병관리지원단 제2차 정기회의(안양교도소)
- ('22. 9. 16.)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정
- ('22. 10. 5. ~ 10. 7.) 전국 교정기관 감염병 담당 직원 양성 교육 실시
- ('23. 2.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제3차 정기회의(교정본부)
- ('23. 7. 11.) 감염병관리지원단 제4차 정기회의(서울남부구치소)

○ **(직원교육)** 직원 대상 방역 교육 실시(계속, 연 1회)

-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등 외부 감염병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교육 실시

-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정신건강복지법 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법무병원 관리자·담당자 대상 보건소 교육 적극 참석

○ **(자문활동)**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계속)

-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응답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및 관련 지식 부족 ▪ 3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과 감염관리팀장(4·5급) 1명 채용 예정 ▪ 빌딩형 교정시설 환기 설비 강화 검토 등

7 **해운·수산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해양수산부)

- **(방역관리 지속)** 터미널·여객선·외국인선원 생활시설 대상 지속적인 방역관리*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대비 관련 시설 마련·운영
 - * (여객선) 출항 전 선내소독 실시, 운항 중 주기적 환기 등
 - (터미널)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상시 방역수칙 홍보, 대책반 운영 가동 등
 - (외국인선원 생활시설) 외국인선원(E-10) 생활시설 방역 점검 지속 실시 등
- **(운영인력 관리)** 신종감염병 발생시, 국적선원 및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선원 교대 및 공급 지원 추진(상시)
 - * (국적선원) 격리면제, 백신 우선접종 등, (외국인선원) 단기체류 선원의 격리시설 마련 등
 - 또한 항만하역업 근로자 등 항만인력 대상 '항만운영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추진(상시)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시 방역관리·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방역관리 및 감염병 발생 대비 시설 운영

8 **장사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보건복지부)

- **(화장수급 관리)** 화장시설 확충 및 기존 화장로 개보수 등 국고 지원 지속, 사망자 급증 등 비상시 화장시설 집중 운영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화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24년)
- **(재난 대비 장례식장 운영)**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역할 명문화 및 운영 매뉴얼 마련('24년~)
 - * 「장사법」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의 재난대응 역할 명시 등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강제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대비 화장시설 확충 및 화장 수급 모니터링 ■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역할 강화

□ 향후 계획

-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관련 대응 지침 등 안내(지속)
- 직무교육센터(공단 플랫폼)를 활용하여 팝업창 게시 등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한 안내문구 게재 및 공문 발송('24년~)
- 사업장 자체 교육 및 직무교육기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개발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급('24년~)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수급 모니터링 기능개선(~'24년)
-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매뉴얼 마련('24년~)
- 정기방역 월례화 및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계속)
- 원활한 선원 교대·공급을 위해 신종감염병 발생 여부 모니터링(계속)
- 감염병 관리지원단 정기회의 개최,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직원 대상 방역교육 실시 등(계속)
- 군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인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속('24년~)

2-10-1

대응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김세은 사무관	☎ 044-202-3498	e-mail : eunkim@korea.kr
	조윤경 사무관	☎ 044-202-3512	e-mail : hichoc@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취약시설의 평시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점검 및 강화를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대응지침 및 평가체계 구축·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매뉴얼 고도화 및 지침 마련

- **(시설평가)**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된 평가지표를 적용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재가급여기관 감염관리 강화 지표* 평가 적용(23년~) 등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내실화
 - *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여부(주야간보호급여), 소독지침·매뉴얼 비치 및 소독제 관리 여부 등(복지용구 급여)
 - ** (정기평가) 3년 주기, ('21년~'22년)시설→('23년)재가 짝수→('24년)재가 홀수 순
- **(대응지침)**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고도화* 및 배포
 - * 담당자 지정, 위기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 반영
 - 장기요양기관의 상시적 감염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설 배포('24년)
 - *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22년~'23년, 한림대 이재갑 교수)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화재·풍수해 등)과 감염관리 통합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감염관리 파트를 분권화하고, 현장·실무위주 매뉴얼 마련('24년)

□ 향후 계획

- **(시설평가)** 감염관리 강화 지표를 적용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보완('23년~)
- **(대응지침)**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마련·배포('24.1.)

2-10-2
2-10-3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조사·보고체계 정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담당자	이상은 연구관	☎ 043-719-7977	e-mail : ondalgi@korea.kr
	류시익 사무관	☎ 043-719-7702	e-mail : fairy@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유행 중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 조직 운영 중이나, 코로나19 외 감염취약시설 관리 전담 조직 부재
-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집단발생 시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구축 및 근거 중심 정책 수행을 위한 조사·보고체계 개선

- **(조직운영)**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관리업무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자체별 기 구성·운영 중인 전담대응기구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회의 정례화를 통해 유기적 협력*·대응** 강화('23년~)
 - * 현재 방역조치는 보건소, 시설 감독은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어 유기적 협력 필요
 - ** 지자체 전담대응기구와 실무회의를 통해 조치 및 사후관리(필요시 권역센터 지원)
- **(역량강화)**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별 감염병 발생 상황 단계별* 역학조사반 대응·운영**방안 마련(~'24년)
 - * 개별사례 및 집단사례 인지 초기대응(시·군·구) → 추가전파 및 조사 확대(시·도) → 2개 시·도 이상 연관 발생 및 추가지원(권역) → 전국 확산 및 추가지원(질병청)
 - **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64.7%) 역학조사반 운영방안 마련('23년 3월 기준)
 - 방역관·역학조사관·지자체 감염병 담당자·예비방역인력 등 대상별 역할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 강화 지속('23년~)

- **(조사·보고체계 개선)**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발생 현황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조사(평가)·보고체계* 구축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보고체계(안)>

대상 감염병	보고주기	조사·보고주체	주무 부서
개별 법정감염병	신고, 보고 기준에 의거	시군구(보건소)/ 시·도	감염병별 담당 부서
법정감염병 집단발생	발생 시 / 종료 시		감염병별 담당 부서,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법정감염병 이외 집단발생	발생 시 / 종료 시		

※ 필요시,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발생 관련 기획조사 실시

- 실내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노출위험도 평가 프로그램(K-VENT) 실용화('23년~) 및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공기전파 위험도 현장 평가 추진('24년~)

- **(지침개정)** 필요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포함한 법정 감염병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개정('23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외 감염취약시설 관리 전담 조직 부재 ▪ 지자체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 필요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집단발생 조사·보고 체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합동대응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례화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대응 강화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지자체 간 역할 및 대응 방안 마련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집단발생 조사(평가)·보고 체계 구축 및 개선을 통한 고위험집단 피해 최소화

□ **향후 계획**

- 감염취약시설 대상 공기전파 위험도 현장 평가 및 제도화('24년~)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관리 및 조사·보고 체계 구축('24년~)

□ 운영현황

- (배경) 코로나19 등급조정(2급→4급)으로 인한 전수감시 중단에도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대비·대응 체계 지속 유지
- (필요성) 지자체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지속 필요
- (목적)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운영·관리를 통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유지
- (구성 현황) 총 677개팀, 2,778명 (‘23.8.10. 기준,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세부 구성 현황 참고)
 - * (시도) 전담대응지원팀 57팀(250명),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6팀(65명)
 - (시군구) 합동전담대응팀 594팀(2,463명)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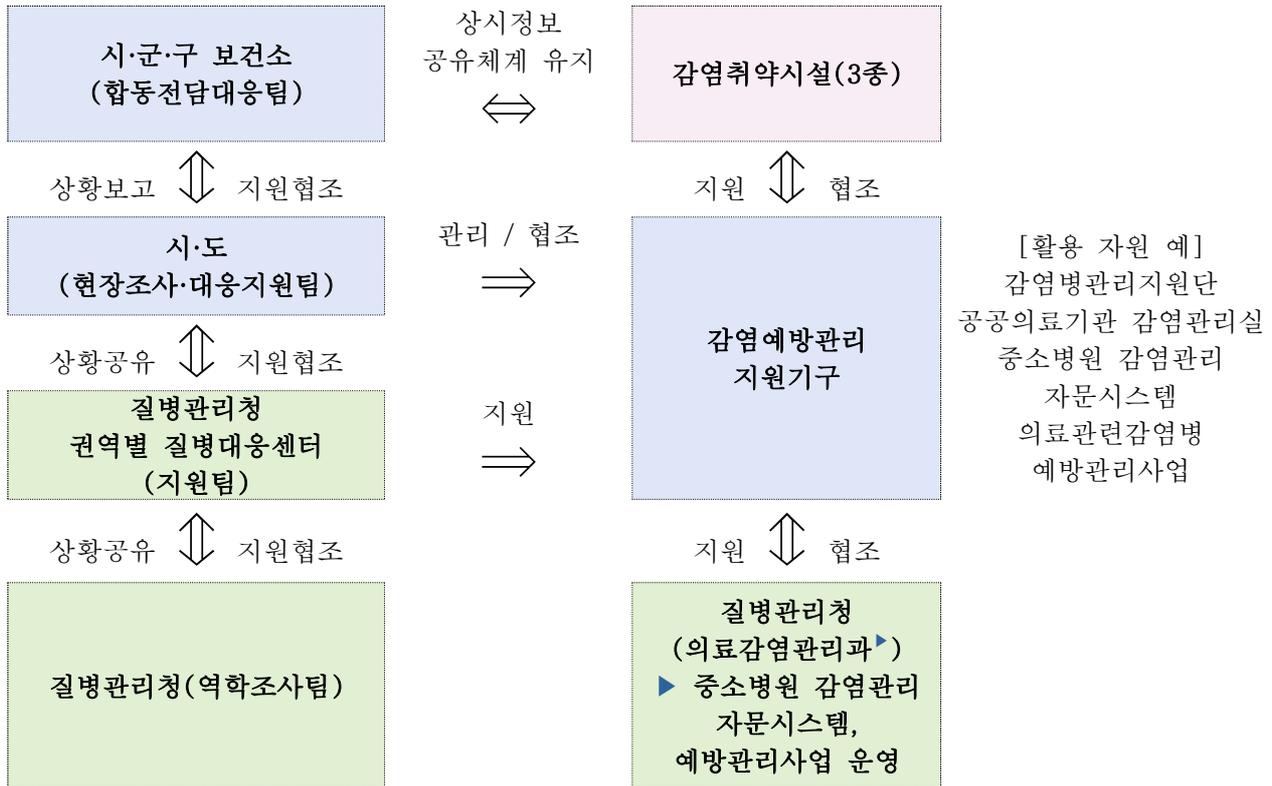
분류	주요내용	주관*
집단감염 발생감시 및 협조체계	시설, 보건소 및 시도 담당자 간 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	시설, 보건소
상황평가·기획	기초정보 바탕 신속한 상황평가 회의 및 필요시 조사 계획 수립	보건소
현장조사·대응	신속한 현장조사 및 대응조치*(필요시) * 노출위험평가, 확진자 환자관리·이송 및 접촉자 분리·관리, 방역물품 관리·지원, 상황보고 등	보건소

* 평상시 시·도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협력체계 유지하고 필요시 합동 대응

□ 기관별 역할

- (감염취약시설) 시설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 현 코로나19 집단발생 기준 10명 유지
-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지속 운영 및 적극 대응
 - 집단발생 인지 시 전담대응기구 적극 대응
 - 집단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공유(주 1회)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관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취합 관리 및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 위험평가, 위험요인 및 특성 분석, 환기평가 등

□ 대비 · 대응체계 구성



□ 그간 운영 현황

- ('22.5)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매뉴얼' 개발·배포
- ('22.5) 1차 지자체(시도/시군구)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구성·운영
- ('22.5~6) 제1차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대응 현황 정기 상황평가 회의(6회)
* 지자체 방역상황 및 전담대응기구 활동 현황, 정보공유 등
- ('22.8~9) 제2차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대응 현황 정기 상황평가 회의(11회)
- ('22.9) 2차 지자체(시도/시군구)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현행화
- ('22.11~23.2) 제3차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대응 현황 정기 상황평가 회의(15회)
- ('23.1)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전담대응기구 활동 현황'(주간건강과질병, 2023년 제16권 제4호)
- ('23.8) 3차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구성 현행화 및 적극 운영 협조 요청('23.8.8)

※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세부 구성 현황('23.8.10. 기준)

시도	합동전담대응팀			전담대응지원팀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계	총원	소속	계	총원	소속	계	총원	소속
소계	594	2,463	시군구	57	250	시·도	26	65	지원단 등
서울	77	290	구	8	15	시·도	1	2	지원단
부산	45	153	구	4	34	시·도	2	4	지원단
대구	26	168	구	4	23	시·도	2	4	지원단
인천	35	90	구	4	14	시·도	1	2	지원단
광주	25	69	구	5	15	시·도	2	8	지원단
대전	5	24	구	1	7	시·도	1	7	지원단
울산	26	53	구	5	10	시·도	2	4	지원단
세종	4	8	구	2	12	시·도	2	4	지원단
경기	46	408	시군구	5	15	시·도	1	4	지원단
강원	27	84	시군구	2	8	시·도	1	2	지원단
충북	19	105	시군구	1	19	시·도	2	6	지원단
충남	22	94	시군구	1	3	시·도	2	4	지원단
전북	21	75	시군구	1	4	시·도	-	-	-
전남	62	207	시군구	2	12	시·도	3	6	지원단
경북	95	373	시군구	6	24	시·도/ 지원단	-	-	-
경남	41	199	시군구	3	14	시·도	3	6	지원단
제주	18	63	시군구	3	21	시·도	1	2	지원단

* 경북은 시도 전담대응지원팀 내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지원단) 포함 운영 중

2-10-4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담당자	최새롬 연구사	☎ 043-719-7597	e-mail : csr341@korea.kr
	배성진 사무관	☎ 044-202-2471	e-mail : bb8566@korea.kr
	조윤경 사무관	☎ 044-202-3512	e-mail : hichoc@korea.kr
	도혜진 서기관	☎ 044-202-3866	e-mail : gumpjw@korea.kr
	홍명기 사무관	☎ 044-202-3864	e-mail : mk7069@korea.kr
	박소영 사무관	☎ 044-202-2732	e-mail : soyoung61@korea.kr

□ 추진 배경

- 고위험군이 많고 3密(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전파에 취약한 감염취약 시설의 환경개선 및 유행 조기 차단·신속 대응 역량 확보 필요
- 이에, 감염관리 교육 이수 방안 마련, 의료법령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의 감염병관리활동 의무화 등을 고려한 보상(안) 등 검토

□ 주요 내용

- ◇ 환기기준 강화, 환기 설비 설치 지원 추진
-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대응지원체계 운영 지속

① 환경개선(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환기시설은 급·배기가 가능해야 하고, 시간당 외기도입 2회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능 요건 강화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확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3개 이상 확보
 - * (현행)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확보
 -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3.9.12.~10.23.) 후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

- **(요양시설)** 시설 내 집단감염을 사전 방지하도록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
 - *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 3년간('23~'25) 분할지원
- **(정신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단계적 강화('23.1.1.시행),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및 요양·재활시설 환기 설비 확충 지속 지원('23년~)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이행현황 모니터링(연중)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23년 15억원, 34개소 선정)
 - * 병실당 10→8→6병상, 손씻기.환기시설 의무화, 병상 이격거리 신설 등

② 교육·훈련(질병관리청)

- **(역량강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감염관리 지원인력 대상 감염관리 교육과정 마련, 모의훈련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교육운영) ①주요 종사 직종(요양보호사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과정, ②간병인 등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방안 마련
 - * 장기요양기관 대상 감염예방관리 기본교육 실시('23년 4~9월, 총 4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에 감염관리교육 실시('23년 8월),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24년 7월)
 - (모의훈련) 감염취약시설의 자체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현장 컨설팅 및 지자체 교육 실시
 - * 코로나19 상황별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배포(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정신시설 등, '22년 8~9월), 모의훈련 독려 및 현장지원('22년 12월 ~ '23년 2월, 134개소)
- **(대응지원)** 현 코로나19 지자체 전담대응기구 운영·유지를 통한 중앙-지자체-취약시설 대응체계 지속 관리, 시설 특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점검항목 개발* 및 시설 평가지표 등과 연계 검토
 - *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점검표 개발(('23년 9월~'24년 3월)

③ 수가개선(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급성기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특성·현황을 반영하여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23년 7월 시행)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취약시설의 환경 개선, 교육·훈련 등 지원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상시 환기관리체계 구축,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훈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역량강화 · 대응지원)** 감염취약시설 점검항목 개발 및 비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 추진
 - 취약시설 감염관리 점검 항목 개발·배포(~24년 하반기)
 - 비의료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배포(~24년 하반기)
 - 의료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체계 개선안(비의료인 포함) 마련 연구 추진 및 개선 방안 검토(~25년 하반기)
- **(요양병원)** 환기시설 세부기준 규정 및 격리병실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4년 상반기 공포 예정)
- **(요양시설)** 시설 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 ('23년부터 3년간 순차적 지원)
 - 1차년도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지원 ('23. 1 ~ 12월)
 - 2차년도('24) 및 3차년도('25)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지원
- **(수가개선)** 요양병원의 상시적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가 지속 검토
- **(정신병원 · 시설)** 환기시설 개선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환경개선 사업 지속 지원('23~ 계속)

2-10-5

집단감염 발생시 진료·돌봄 체계 구축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관 서비스자원과,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최세종 사무관	☎ 044-202-2474	e-mail : csj5658@korea.kr
	홍명기 사무관	☎ 044-202-3864	e-mail : mk7069@korea.kr
	조윤경 사무관	☎ 044-202-3512	e-mail : hichoc@korea.kr
	윤민수 사무관	☎ 044-202-3309	e-mail : yoonminsoo@korea.kr
	정윤아 사무관	☎ 044-202-3252	e-mail : yoona14@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대유행 시 집단감염에 가장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평시 감염관리·교육 강화 및 유행 대응시 지자체 역할 정비 필요
-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주요 내용

◇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 환자 이송 및 돌봄체계 사전 구축

- **(환자이송)**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 하여 발생초기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시설 내 추가전파 방지
- **(돌봄체계)** 종사자·간병인 다수 감염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감염 발생 시 별도 이송체계 부족 ▪ 종사자·간병인 집단감염 시 돌봄 공백 위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 가능한 병원 사전 지정 ▪ 대체인력 풀(Pool) 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 향후 계획

- **(환자이송)**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감염병 유행 시 진료·이송 등 지원 가능한 연계 체계(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 구축('24년~)
- **(돌봄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속 추진

**3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

3-1-1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담당자	구현숙 연구관	☎ 043-719-9081	e-mail : hyunsook.koo@korea.kr
	고한슬 사무관	☎ 043-719-7132	e-mail : hslui@korea.kr
	신희성 사무관	☎ 044-202-2505	e-mail : heesung908@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대응 기반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효과적이고 신속한 범부처 대응 기반 마련

- **(협력체계)** 방대본 설치·운영 법적 근거 정비*,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을 통한 질병청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및 부처 협력체계 강화

- ① **(설치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근거를 질병청 훈령*에서 감염병 예방법으로 강화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② **(의료대응)**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질병청 간 의료대응 역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기반, 부처 역할 재정립하고, 부처 고유 업무 기반의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24년)*

* 부처 역할 조정 및 협력 관련 '24년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추진

<감염병 의료대응 관련 질병청-복지부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안)>

구분	질병청 (평시~경계)	복지부 (심각 이상)
유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에 국한된 감염병 발생 상황 ■ 상시 인프라로 대응 가능한 경우 ■ 다른 질병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상황 ■ 병상·인력의 추가 동원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외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대응 방향	상시대응 인프라(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 감염병관리기관) 중심	전체 병원 대상 병상 등 동원 행정명령, 손실보상 및 요양급여체계 개선
협력 사항	질병청이 상시대응 인프라를 체계적 평가, 관리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질병청 의료대응인력을 복지부(중수본)으로 일부 파견·업무 연속성 확보

③ (정보 거버넌스) 방역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질병청 중심 통합 체계 구축

* 중증도, 사망률, 병상이용 현황 등 각 부처(복지부, 통계청 등) 정보시스템 일부 자료를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방역 정보 일원화

○ (중앙-지자체) 당면한 사안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 집권적, 분권적 의사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역할 정립) 위기 시 중앙-지자체 역할 정립 및 법제화 등 명료화

- (중앙-지자체 역할 정립) ▲중앙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물자 배분 주도 등, ▲지자체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 (지자체 역량 강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재정 메커니즘 개발 및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 민관-협력체계(지역협의체 등) 강화 등 병행

- (중앙-지자체 협의 체계) 비상시 많은 경우 중대본 등 협의기구를 통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제도적 역할 규정 어렵거나 모호한 상황에 대한 협의 체계 마련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간, 중앙-지자체간 의료분야 대응 역할 및 부처별 대응 내용 모호 ▪ 중앙-지자체 질적 역량 여전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대본 법적 근거, 부처 협력체계 및 정보와 R&D 거버넌스 구축(~24년) ▪ 중앙-지자체 역할분담, 지자체 위기 대응 강화 기반 마련(~25년)

□ 향후 계획

- 기관 간 역할분담·정보통합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24년 上)
- 감염병예방법 개정 수요 제출('24년)
-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별 부처 역할 조정 관련,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반영('24년)

3-1-2

방역·의료 대응 핵심기관 기능 강화 및 역량 확대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		
담당자	홍성준 사무관	☎ 043-719-7685	e-mail : hsj1030@korea.kr
	김성규 사무관	☎ 043-719-7129	e-mail : ksgtj@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위기대응의 주도적 역할 수행 위한 지속적 기능 보장 필요
- 해외 공중보건청 조직강화 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은 조직 개선·기능 강화에 활용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이후 해외 공중보건청 조직강화 사례 벤치마킹하여 기존 직제·기능상 취약성 보완 추진

- **(해외 벤치마킹)** 우리 정부의 조직 운영 기초, 질병청에 갖는 국민 기대 및 인식, 국가 경제환경 및 시장규모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직 기능 개선·강화 방안 마련
- **(본청)** 감염병 대응 기능 포함 정책기획·지원부서 기능 전반에 대해 정책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활용한 분석
 - 조직 인력의 직렬·직급·보수 등 인사 정책 분석을 통해 전문분야 필요 역량 및 인력수요 도출
 - 확대·축소 필요 기능, 확보 필요한 인력 분야 및 수준, 조직 관련 변화가 필요한 제도·규정, 보강해야 할 시설·장비 등 검토
- **(권역센터)** 취약시설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지역 중심 신속 현장 방역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 **(보완방향)** 정보수집 감시역량 제고, 감염병 대응 위기소통 강화, 근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호흡기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 대응 기능 확대 등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긴급 대응 상황 속에서 조직 개편 추진 ▪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지자체 단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 지원체계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환경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직 기능 개선·강화 방안 마련 ▪ 지역 감염병 사전대응계획 수립, 상시 협력 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조직 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한 업무분야별 역량 파악 및 기능개선, 조직발전 방향 제시 등 자체 조직 진단 지속 추진
 - * 질병관리청 조직역량 강화 방안 연구('23.6~11월, 한국능률협회)
- **(전문가 소통)** 행정환경에 유연한 조직체계 개선과 역량 강화 위해 정책학회, 행정학회 등 주요 학회 전문가와 소통 및 교류 지속 확대
 - * 기획세미나 개최(정책학회 6.7., 행정학회 10.20.)
 - 정기학술대회 참석(정책학회 4.21./6.14./12.1.예정, 행정학회 12.7.예정) / '24년 MOU 체결, 세미나, 학술대회 등 소통·협력 지속 확대
- **(조직문화 개선)**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과제 도출*, 실천 후 환류하는 기관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인사고충 신고·상담 내실화, ▲직렬 간 상호 이해 증진 ▲부서 간 협력 및 소통 창구 마련 등

3-1-3

과학 자문체계 개편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구현숙 연구관 ☎ 043-719-9081 e-mail : hyunsook.koo@korea.kr

□ 추진 배경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경계~심각)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주의 이하)로 분산된 위기대응 자문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필요
- 자문기구의 독립성·투명성, 근거기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감염병 위기 전 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방역·의료 자문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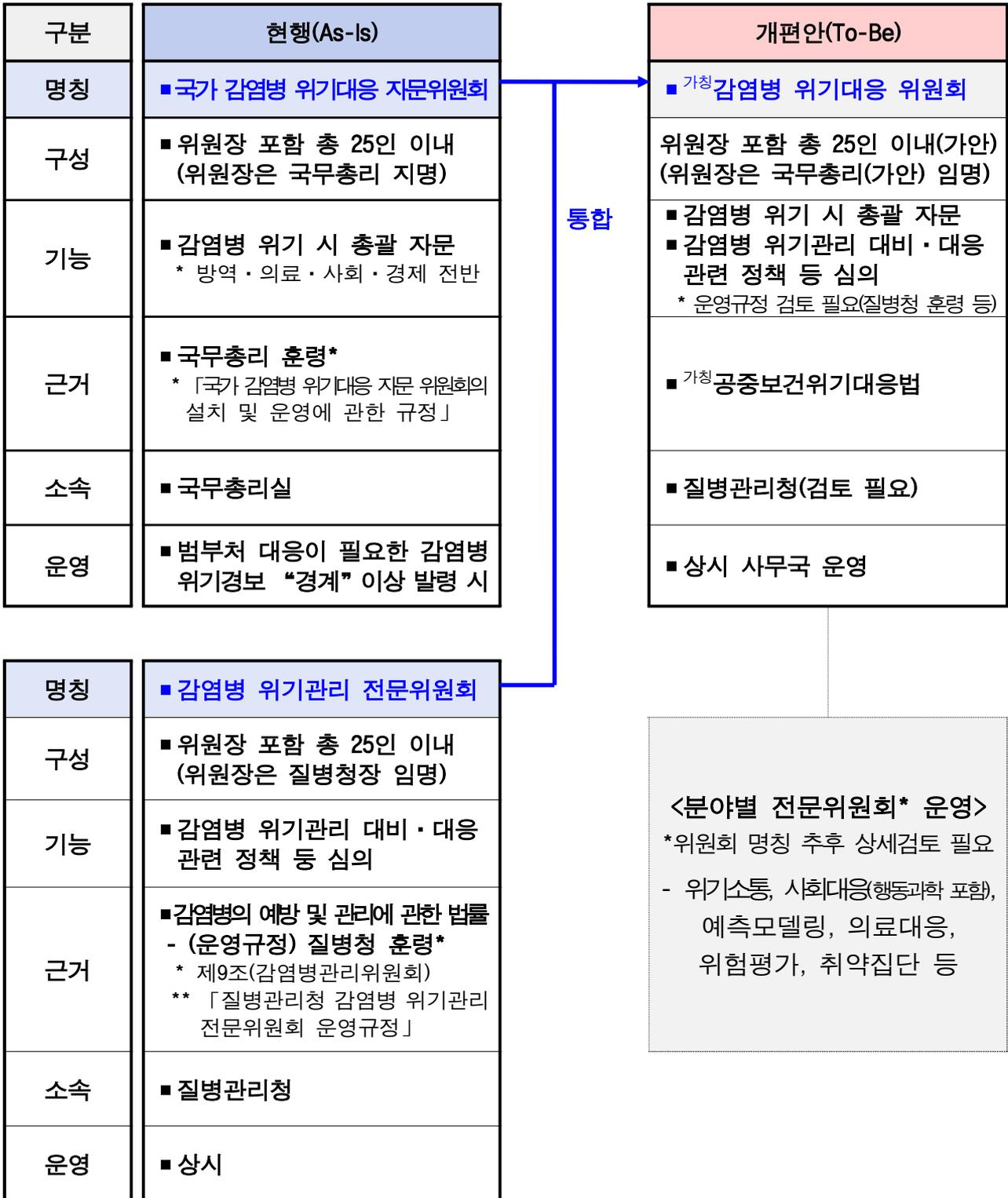
- **(자문기구)**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가칭}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 기존 2개 위원회를 통합, 감염병 위기사 최상위 자문기관의 지위 부여하고, 연속성 있는 자문체계 확립
 - (전문위원회) 위기소통, 사회대응(행동과학 포함), 예측모델링, 의료 대응, 위협평가, 취약집단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
 - (사무국)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질병청에 설치, 위기사 확대* 운영
- * 정부부처(복지부, 질병청, 행안부, 과기부 등) 파견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
- **(운영체계)**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권고안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 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 자문에 대한 정부(중대본 등)의 공식 환류 체계 마련
 - 위원회 권고문, 의사결정 근거자료(근거평가 보고서 등)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권고문에 소수 의견도 충실히 기재하는 등 투명성 보장

- 위원회가 정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추가적인 근거 생산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 강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 이원화 및 소수 워킹그룹 운영 ■ 운영체계 - 독립적 운영 근거기반 자문 위한 지원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24년) - '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로 통합 운영 및 다수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정비 ■ 운영체계 - 예산 등 지원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으로 독립성, 투명성, 근거기반 의사결정 강화

□ 향후 계획

-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및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참여 위원의 정책 참여·자문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전략 수립('24년 상반기)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5개 분야 워킹그룹에 법·제도·윤리 분야 추가하여 확장('24년~)
 -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공중보건위기대응법(가칭) 제정 시까지 현 자문위 워킹그룹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24년~)
- '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가칭) 운영안 마련('24년~)
 - '공중보건위기대응법(가칭) 제정 전, 운영체계·규정 등 가안 마련('24년 下)
 - 법적 근거 마련 시, 운영체계 가안 반영하여 내용 조율(~'27년*)
 - * 감염병 위기대응법 분법 법제처 제출(~^{잠정}'25년)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확장(~^{잠정}'27년) 일정에 따라 동시 진행 예정



3-1-4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원 조달 기반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김우정 사무관 ☎ 043-719-7221 e-mail : orion3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유행 시, 예비비·추경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는 지속·탄력적인 운용에 한계

* (국회 지적)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 자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한정애의원, 상임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8.30.))

□ 주요 내용

◇ '24년 이후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신속·안정적 지원을 위한 자원 기반 마련

- **(자원기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시적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마련
 -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감시 분야의 소요예산 확보중
 - * 역학감시체계 구축(+10억원),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14억원) 등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소요예산 추계 및 예산 확보('23년~, 지속)

참고 : 해외감염병 대응기금 설치 사례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긴급대응기금(WHO Contingency Fund for emerge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즉각적 자원 제공을 위한 내부 자금 마련('15년~) • (용도) 감염병 발생 시 위험평가 실시, 비상사태 확대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US\$ 749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글로벌 콜레라 발생, 나이지리아 디프테리아 집단발생 등) • (재원확보) 국가·단체 등의 기부금 ■ 이 밖에 WHO Health Emergency Appeal('23년 기준 US\$2.5B) 등 운영
C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위기대응기금(Emergency Response: Public Health Cri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국 내 공중보건위기사태에 대한 신속한 국가적 지원('17년~) • (용도) 공중보건위기 준비 및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마약성진통제 중독 등 • (재원확보) 연방·주정부 지원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시, 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 긴급한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예산 확보(지속)

□ 향후 계획

○ ('23년)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 이행을 위한 '24년 예산 편성

- 역학조사 분석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체계 확대 등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확보

* ▲새로운 역학조사감시체계 구축 ('23) 6.5→ ('24) 10.5억원, ▲역학조사관 표준 교재 개발 ('24) 2억원(신규),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 ('23) 9→ ('24) 15억원

○ ('24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예산 지속 확보

- 감염병 위기 시 활용 가능한 자원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복지부 등) 협의 계속

3-1-5

감염병 재난 시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국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담당자	최기수 사무관 ☎ 044-205-6157 e-mail : cks0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영향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된 방역 정책 적용
-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역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맞춤형 위기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 지자체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 정량적 분석
- ◇ 데이터 기반 지자체별 감염병 재난 대응 의사결정 지원

- **(데이터 분석)** 지자체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100여개)하여 데이터 기반 종합분석 수행
 - ※ 통계청, 공공데이터 포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
- **(지역별 방역정책 도출)** 지자체별 비교분석 및 역량강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염병 역량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출
 - 취약성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 대응 체크리스트 제시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감염병 취약성 및 대응역량 정량적 분석 불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감염병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지자체별 취약성 및 대응역량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역량강화 가능

□ 향후 계획

- 지자체 감염병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24년 2월)
- 질병청에서 개발중인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추진(계속)
- 지자체 대상 질병청·복지부·행안부 합동 교육 및 컨설팅 추진('24년~)

3-2-1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고한슬 사무관	☎ 043-719-7132	e-mail : hslil@korea.kr
	정혜원 사무관	☎ 043-719-9061	e-mail : jgh46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유행 대응을 위한 법 규정의 체계정합성·현실적합성·대응경직성 개선 필요
- 감염병 위기뿐 아니라, 생물테러와 같은 사회적 위협을 포함한 국가 공중보건안보 대응·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령 신설 추진

□ 주요 내용

◇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 위기 대응 부문 별도 구분(단기) 및 공중보건안보를 포함하는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신설(장기)(‘24년~)

- **(법을 체계 정비)** 코로나19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팬데믹 대응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효율적인 법체계 마련
 - ①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②감염병 위기 대응 부문을 감염병 위기대응법으로 분법 추진, ③그 이후 타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으로 확장

* 국내외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관련 법제 비교·분석, 공중보건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사항 등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예정(‘23.12.~, 5개월)



- **(전면 개정 방향)** 현안 중심의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인한 법률체계 부정합을 일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현실적합성·대응경직성 제고
 - (법 재구조화)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기본법 형태의 ‘감염병법’ 마련, 예방접종, 감염병 위기 등 특정 분야별 분법·장 분리 추진
 - (현실 적합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경직적 규정을 실제 현장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 시 한시적 조치 근거 마련
 - * (기존) 새로운 대응 수단 필요시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한 법개정 필요
→ (개선) 감염병 분류체계 개선(법률→하위법령)하여 대응의 유연성 제고
 - (기본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권,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권 등 인권 이슈를 고려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 * 위험수준보다 과도한 방역조치로 국민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병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법령 체계 정비
 - (인프라 체계화) 감염병관리기관, 역학조사관 등 인프라(인력, 기관, 시설 등) 규정을 체계화하여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의 법적 근거 보완
 - (거버넌스 정비) 국가(복지부·질병청)-지자체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
 - * 질병청에서 사전 대비부터 경계 단계까지 방역·의료 대응 총괄하되, 일반진료 병상 동원·건강보험 지원 등이 필요한 심각 단계부터 복지부가 의료대응 총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체계의 부정합성 및 위기 시 법령의 현실 괴리로 인해 감염병 대응의 경직성 등 한계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정밀적인 법체계 정비를 통해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기반 마련

□ 향후 계획

-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 정부입법 계획 법제처 제출(‘23년 11월)
-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법제처 제출(‘24년)
- 감염병 위기대응법 분법 법제처 제출(~^{잠정}’25년)
-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확장(~^{잠정}’27년)

3-2-2

감염병 재난의 탄력적 대응 위한 위기경보·평가 체계 개선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담당자	구현숙 연구관	☎ 043-719-9081	e-mail : hyunsook.koo@korea.kr
	신희성 사무관	☎ 044-202-2505	e-mail : heesung908@korea.kr

□ 추진 배경

- 現 위기경보 체계는 감염병의 지역적 분포만을 고려, 감염병 특성, 유행상황 및 대응역량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려운 한계
- 위기평가회의를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행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수준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 내포
 - * WHO, 미국 등은 위기평가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 비상사태 연장 여부 결정

□ 주요 내용

◇ 탄력적인 위기경보체계 및 정기적인 위기평가회의 체계 마련

- **(위기경보체계)**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24년), 질병 중증도·대응수준·사회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 반영 체계로 개편
 - 현재 위기단계 하향 시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 적용토록 개선* 하였으나, 위기단계 상향 시에는 보다 강화된 조치 필요함에도 일정 기준 만족해야 상향이 가능한 경직된 구조
 - * **(기존)**위기단계 하향 시 위기유형에 있어 일정 기준 만족 필요 → **(개선)**위기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되는 대응체계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 시, 위기단계 하향 가능
 - 변이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영향 및 대응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재난의 특성상 유연한 경보 체계 구축 필요
- **(위기평가회의)** 유행 시기동안 주기적(3-4개월)으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고 위기경보 단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24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단계 - 조정을 위해 해당 단계의 위기 유형 만족 필요 		
	위기 유형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발생
주의 (Yellow)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되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 -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단계 - 현재 위기단계와 더불어, ▲감염병의 특성, ▲유행상황,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기단계 상향 가능 * 백신·치료제 확보, 의료대응체계, 정부 대응 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 - 유행 중 3~4개월마다 실시하여 위기 단계 유지 또는 조정 여부 결정, 방역 정책 결정의 적시성 확보

□ 향후 계획

- 위기경보체계 유연화, 위기평가회의 정례화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24.)

□ 감염병 위기경보 체계

- (현행) 감염병의 확산 및 중증도에 따라 4단계 구분 체계 운영*

* DORSCON, Disease Outbreak Response System Condition

- 싱가포르 감염병법(Infectious Disease Act) 상 평시(~ORANGE)와 감염병 비상사태(RED) 두 가지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어, 모임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선포 필요

* 코로나19 대응 시, 비상사태(RED) 선포 없이 임시법안으로 부분적 제한 조치

< 싱가포르 현행 감염병 대응 단계 >

구분	GREEN	YELLOW	ORANGE	RED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이 경미하거나, ▶ 심각하더라도 쉽게 확산되지 않음 (MERS, H7N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국내유입 되지 않은 경우나 ▶ 국내 유입 후 발생 중이나 증상이 가볍거나 통제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증상이 심각하고 사람간 전염이 쉽게 발생하는 상황이면, ▶ 국내 광범위한 확산 없이 통제 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심각하면서 ▶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발열체크, 의료기관 방문자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교,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자택 대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자택 대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자택 대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 기타 방역 조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자택 대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 기타 방역 조치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 (개선안)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공중보건 위협(Public health threat) 등 분류 세분화하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위기경보 체계로 개편 추진 중
- 감염병 위기경보 기준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감염병 대응 단계 개선안(잠정) >

구분	Baseline	Outbreak managemnet	Public health threat	Public health emergency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가 감지되고 발병 관리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통제 조치 및 제한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통제가 곤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추적 및 격리 검사 ▶ 국경 통제 및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규모 제한 등 안전관리 조치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금지 및 공중 보건 자산·인력 징발 등

3-3-1

전략적 위기소통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담당자	구용민 서기관 ☎ 043-719-7793 e-mail : himnaerat@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유행 초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위기소통 관리 이외에 유행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소통 전략 수립
- 지자체별 위기소통 대응 역량 차이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을 편차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의 소통 한계

□ 주요 내용

- ◇ 국민 의견수렴 체계 구축 및 조사·분석에 기반한 상황별 전략 수립
- ◇ 지역사회 감염병 소통 역량 향상 및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

- **(조사·분석)** 국민인식조사 및 분석을 통한 상황별 위기소통 전략 수립
 - (조사기반 구축)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기적 조사체계 구축('24년 상반기)
 - * 주요 정책 만족도, 기관 신뢰도, 소통 만족도, 질병 인식 등 조사(연 4회 수행)
 - (소통 전략) 유행 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소통 분야별 지침 개발
 - * 인포데믹 대응('23년), 메시지 전략('24년), President Identity 전략('24년) 등
- **(지역사회 소통)** 지자체 감염병소통담당관 운영 및 표준 가이드 개발
 - (지자체 연계) 17개 시·도 대상으로 감염병소통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 상시 정보 공유 및 감염병 소통 지원체계 운영('23년 하반기)
 - (표준 가이드 지원)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기소통 표준 가이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공유 및 정기 교육 추진('24년 상반기)
 - *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외국인, 고령층, 도서산간지역, 노숙인 등 소통 관리
 - ** (커뮤니티) 종교단체, 동호회, 성소수자 등 오피니언 리더 및 커뮤니티 소통 관리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 장기화에 대한 소통 전략 부재 ■ 지역사회 위기소통 편차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별 지침을 통한 주도적 소통 관리 ■ 지역사회 위기소통 대응 역량 향상 및 소통 편차 완화

□ 향후 계획

- 감염병소통담당관 지원 체계 운영('23년 하반기)
- 인포데믹 대응 지침 개발('23년 하반기)
-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기 조사체계 구축('24년 상반기)
- 감염병 위기소통 대응을 위한 메시지 전략 개발('24년 상반기)
-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취약계층 소통 가이드 제공('24년 상반기)
- 위기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소통 가이드 제공('24년 하반기)
- 기관 신뢰도 관리(PI) 전략 개발('24년 하반기)

3-3-2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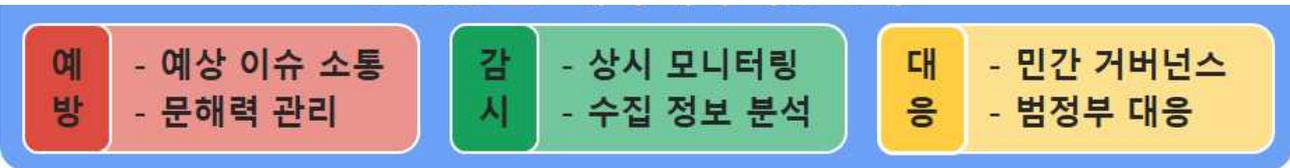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대변인
담당자	구용민 서기관 ☎ 043-719-7793 e-mail : himnaerat@korea.kr

□ 추진 배경

- 잘못된 감염병 정보는 사회혼란 및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방역정책을 불신하게 만들어 정부 신뢰도를 훼손하는 등 추가적 피해 유발

□ 주요 내용

◇ 민간 거버넌스 중심의 인포데믹 예방·감시·대응 추진



- **(예방)** 국민들의 감염병 이해도(Literacy) 향상을 위한 사실정보 소통 확대
 - (예상이슈 관리) 백신 등 인포데믹 예상 이슈에 대한 정기적 소통 추진(23년)
 - * 인포데믹 내부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이슈 점검, 팩트체크 카드뉴스 제작
 - (문해력 관리) 오정보 예방 위한 국민 눈높이 소통 지침 개발(24년 상반기)
 - *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지침 개발(23년 연구용역)하여 국민 눈높이 소통 관리
- **(감시·분석)** 인포데믹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확산 가능성 및 예상 피해 분석 등 인포데믹 전문 감시·분석 체계 구축(24년 하반기)
- **(대응)** 민간 거버넌스 중심의 인포데믹 대응 체계 마련(23년 연구용역 수행)
 - (거버넌스)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운영(24년 하반기)
 - * 유통되는 인포데믹 관련 전문가 팩트체크 및 국민소통, 사실정보 확산 등 수행
 - (범정부) 인포데믹 게시물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23년)
 - * 경찰청(수사), 방송통신위원회(게시물 조치), 문화체육관광부(탐색, 확산) 등
- **(포털 연계)** 포털사이트, 언론사 등 연계를 통한 사실정보 확산(24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포데믹에 의한 사회혼란 및 인명 피해 ■ 방역당국 신뢰 하락으로 정책효과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포데믹 피해 예방, 정부 신뢰 유지 ■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도 향상

□ 향후 계획

- 내부 협의체를 통한 인포데믹 예상 이슈 정기 소통('23년 하반기)
- 인포데믹 대응 범정부 협업을 위한 부처 연계 구축('23년 하반기)
- 오정보 예방을 위한 쉬운언어 지침 개발('24년 상반기)
- 인포데믹 감시·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4년 하반기)
- 민간 거버넌스 구축·운영('24년 하반기)
- 사실정보 확산을 위한 포털, 언론사 연계 체계 구축('24년 하반기)

3-3-3

백신·치료제 이상반응 불신에 대한 안정적인 소통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예방접종기획과		
담당자	이우건 사무관	☎ 043-719-8365	e-mail : nvws1996@korea.kr
	김유리 사무관	☎ 043-913-2309	e-mail : glasskim@korea.kr

□ 추진 배경

- 백신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미흡하여,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안전성에 대한 불안 발생 우려
 - 백신 예방접종 정책 신뢰도 저하 및 정책집행시 애로발생 가능성
- 대국민 대상 예방접종 관련 정책 신뢰성 및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소통의 전략적인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 이상반응 불신에 대한 안정적인 소통 추진

- **(전문가 협업)** 전문가 집단의 협업을 통해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 주기적 포럼 개최 및 인식개선 교육 추진
 -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민간위탁사업)를 통해 분기별 이상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 포럼 개최(~'23년 4분기)
 -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 관련 의협 보수교육 영상 제작 및 게재 예정(~'23년 4분기)
 - **(홍보 강화)** 정보 파급력이 강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백신 및 치료제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로 허위 정보 차단 및 정부 신뢰도 제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추진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올바른 예방접종 정보 확산, 전문가를 통한 특집 브리핑·기고문 등 과학적 근거의 소통 기반 마련
- * 영상, 보도자료 요약 이미지, 안내문, 카드뉴스 등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 정책 시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안전성 관련 포럼·교육 진행 (~'23년 4분기) ■ 백신 홍보 강화(~'23년 4분기)

□ 향후 계획

-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 포럼 개최(~'24년 상반기)
- 백신 이상반응 관련 소통 포럼 개최(~'24년 상반기)
- 백신 안전성·효과성 전문가 자문 및 소통·홍보(~'27년)

3-4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담당자	최상미 사무관	☎ 043-719-8596	e-mail : csm222@korea.kr
	박종현 사무관	☎ 043-719-7095	e-mail : python@korea.kr

□ 추진 배경

-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빅데이터 기반 연구분석 필요성 대두
- ①시스템 분절로 효율적 정보 관리 곤란, ②인적정보 검증 부재로 정합성 미흡, ③수집 항목 비표준화 등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분석 한계

□ 주요 내용

- ◇ 감염병 대응 효율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감염병 정보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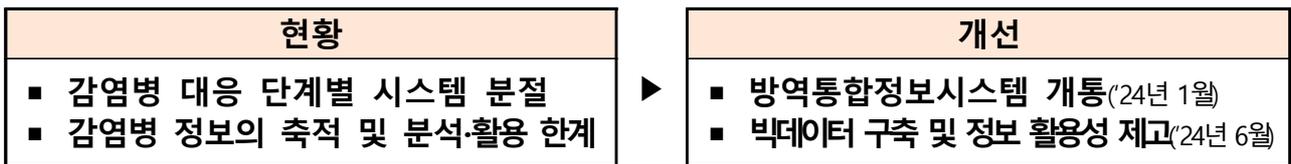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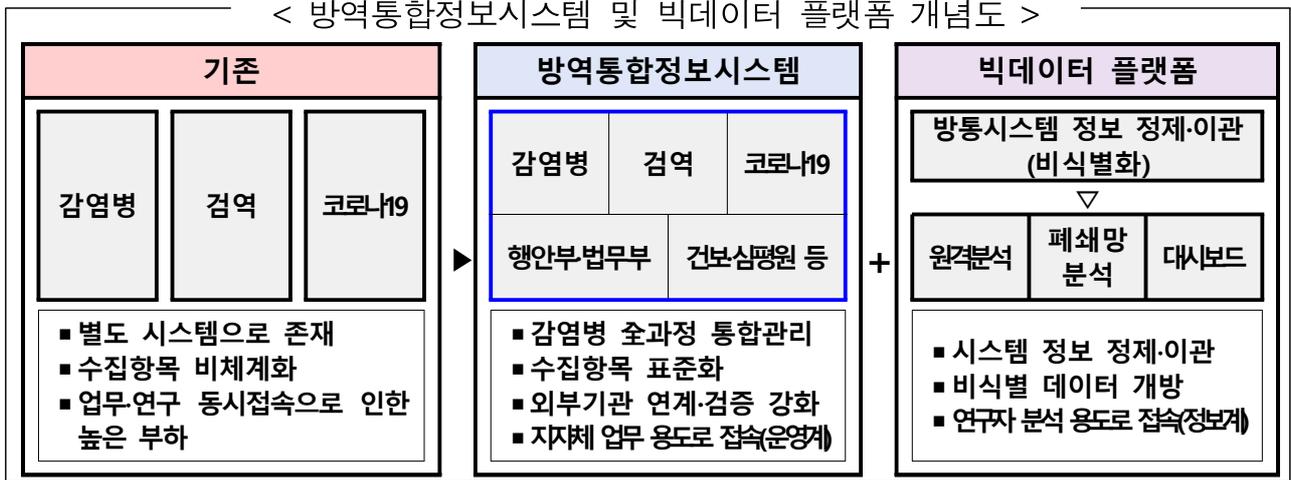
- **(방역통합시스템)** 감염병 유입·발생에 대한 적시·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검역(입국)-감염병신고-역학조사 등 쏘과정 시스템 연계
 - 분절된 시스템 통합*(~'24년 1월)으로 데이터 분석·활용의 효율성 제고
 -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검역정보관리시스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 데이터 인적정보 검증을 위한 공적정보 연계('23년 4분기)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임상정보 추가 연계 추진*(~'24년 상반기)
 - * (인적정보)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 (임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성과 >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시스템 분절 및 과거 감염력 관리 곤란 ■ 개인 진술 의존, 복수 시스템에 동일 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단위 감염병 이력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신고 및 서류제출 ■ 대응 단계별 정보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CODE 정보 수집 강화, 검역정보 지자체 공유 등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강화 ■ 대응 단계별 정보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정보 파편화·비표준화 ■ 감염병별 주요 수집항목 비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역학조사 정보 분류체계 정립·용어 표준화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민간 정보개방, 대시보드형 누리집 운영

- **(빅데이터 플랫폼)**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타 법정 감염병까지 확대하고 민간 감염병 정책·연구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자료 제공을 위한 예규 개정('23년 6월), 「제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참여하여 시범사례 운영 및 활성화 추진(~'24년 하반기)
 - 코로나19 전수감시 데이터 정비하고('23년 하반기) 감염병 정보 및 시각화자료 등의 대내외 제공 기반 마련('24년 6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 **향후 계획**

- **(교육)** 청 내 제도 및 시스템 개편방향 보고(11월)
 - 권역별 사용자 대상 교육 및 감염병 컨퍼런스 참여(11~12월)
- **(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수행 산출물 관리(10월~)
 - 사용자(통합) 테스트(11월) 및 개통 전 최종테스트(12월)
- **(운영전환)** 시스템 운영 전환 공문 발송(11월), 신규 시스템 전환('24.1월)
- **(빅데이터)** 분석·설계(~12월), 개발 및 테스트('24.1~5월), 오픈('24.6월)
 - 제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운영(~'24년)

**4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4-1-1

돌봄체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김민혜 사무관	☎ 044-202-3229	e-mail : givemeyes@korea.kr
	최은미 사무관	☎ 044-202-3344	e-mail : cem1011@korea.kr
	오성남 사무관	☎ 044-202-3194	e-mail : osmprince@korea.kr
	윤재성 사무관	☎ 044-202-3460	e-mail : yjs0923@korea.kr
	류재현 사무관	☎ 044-202-3361	e-mail : rjh00179@korea.kr

□ 추진 배경

-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및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팬데믹,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 내용

◇ 돌봄체계 개선 · 신설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

- **(긴급돌봄 신설)** 갑작스러운 주돌봄자 부재, 긴급한 부상·질병 등 코로나19 외 다양한 돌봄공백에 대응(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예시: 2주~1개월 내외)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즉시 제공('24년~)
- **(장애인) 활동지원(정규)서비스 내 긴급활동지원 및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 방지**
 -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구축하고 주요 감염병별 장애인 감염 취약 요소를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24년)
- **(아동·영유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내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임의 휴원 지양 및 휴원 시 일부 종사자 정상근무 등을 통한 돌봄 제공 유지
 - 어린이집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 실시 등을 통한 보육 공백 최소화
 - * 지역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원 여부 결정하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가 원내 아동 보육 실시

- **(노인)** 독거 등 취약노인 대상으로 복지관 등 수행기관 종사자를 통한 안전·안부 확인, 고립·우울감 완화를 위한 정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

*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및 말벗, 영상을 통한 운동 및 문화 활동 등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긴급돌봄은 한시사업(~'23)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 지원제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서비스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돌봄불안 경감

□ 향후 계획

-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역 공모(2월) → 사업 수행(5월~)
- **(장애인)** 감염병 상황에서 긴급활동지원·특별지원급여 제공 사유 해당시 서비스 연계 적극 지원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24. 2월),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28병상) 구축('24년)
- **(아동)** 다함께돌봄센터 확충('24년 129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제고 등 아동의 방과후 돌봄 역량 확충 지속 추진
- **(노인)** 독거 등 취약노인 대상 안전·안부 확인 및 정서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강화 제공

4-1-2

감염병 위기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혜선 사무관	☎ 044-202-3058	e-mail : hsunny13@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위기사유 확대,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 주요 내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지원방안 마련

-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강화 방안 마련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 * '23년 대비 '24년 생계지원금 13.2% 인상(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적극 지원

현황('23년 생계지원금)	▶	개선('24년 생계지원금)
▪ (1인 가구) 623,3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1인 가구) 713,1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향후 계획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23.12월)
- 긴급복지 '24년 생계지원금 적용 및 지원현황 관리('24.1월~)

4-2-1

감염병 치료로 인한 소득공백 방지체계 마련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		
담당자	윤석범 사무관	☎ 044-202-3054	e-mail : yoon1113@korea.kr
	신형원 사무관	☎ 044-202-3094	e-mail : shwj@korea.kr
	전하윤 사무관	☎ 044-202-2729	e-mail : junhayoon@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위기 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지원 필요
-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 격리 의무 폐지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화 요구 증가 예상되며,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도 대비 필요

□ 주요 내용

◇ 감염병 유행에 따른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소득·재산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 보장성 강화
 - * 기준중위소득의 30% → 35% 목표로 단계적 상향(「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3.9월)
- **(상병수당 추진)** 도입 전 시범사업('22.7~'25.6)을 통해 정책효과 및 수요 분석, 운영체계 점검 등 추진('22년 7월 6개 지역 → '23년 7월 10개 지역)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모형별 비교, 분석·평가를 거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추진할 계획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외 상병 발생시 소득 공백 지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외 상병 발생시 소득 공백 지원 有

□ 향후 계획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완화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추진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24.1)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 및 생업용자동차 기준 완화('24.1)하고, 자동차·주거용재산 기준 지속 완화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24.1월)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추진('24.2월~4월)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24.7월)
- 중증장애인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완화('24)
-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의료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검토 추진('25~)

4-2-2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취약분야 지원체계 개선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 044-201-2318	e-mail : ghd14@korea.kr
	김선하 사무관	☎ 044-200-5431	e-mail : sunha929@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대유행·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취약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하여 회복탄력성 강화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경험 토대로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

- **(농축산업)**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정상운동을 위해 지역별 거점 유통체계 운영지원 및 新 유통플랫폼 구축 등
 - 생산-가공-판매가 일원화된 패커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별 거점 도축·가공장을 구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물량분산, 수급상황 모니터링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반 축산물 유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공간적 제약조건 개선
- **(해운·수산)** 소비·수출 위축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어업인, 무역업체 등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 * 신종감염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수출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검토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유행 시 해운·수산분야의 소비·수출 및 인력난 해소 방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 향후 계획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확대(~'24)
 - * ('24년 예상) 축산물 도축장·도매시장 플랫폼 구축·운영(누적 7개소)
- 감염병 대유행 시,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검토
 - * 예산: ('23) 200억원 → ('24 정부안) 1,000억원
-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어업인 금융부담 가중 시,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기재부 협의 실시

4-3-1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박강수 사무관	☎ 044-202-3873	e-mail : meehak@korea.kr
	나상명 사무관	☎ 044-202-8893	e-mail : hallamount@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 재난 피해자, 사회취약계층 및 대응인력 등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 필요
-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직장인 마음건강 회복지원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심리불안 근로자에 대한 마음건강 회복지원 추진

-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공공·민간 합동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병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심리지원 제공
 - * (공공)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 (민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민간학회
- **(지원 방식·서비스 다양화)** 방문서비스 실시 등 대상자 수요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요 시 민간 연계 등 지원 방식 및 서비스 다양화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한 방문서비스 활성화
 - *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5대, 정신건강복지센터 45대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심층 심리상담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민간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대상자별 지원)** 다양한 상담창구를 통해 심리취약계층(청소년·청년·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계부처 합동)

- **(근로자 심리지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23개소(분소22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 14개소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
 - 근로자 마음건강회복 지원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1개소) 및 트라우마센터(9개소) 확대 추진(~'24년)
 - * ('23년) 건강센터 23개소, 트라우마센터 14개소 → ('24년) 건강센터 24개소, 트라우마센터 23개소
 -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앱(App)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상담, 찾아가는 이동상담 솔루션 실시 등 접근성 강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심리상담 및 접근성 강화 인프라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24년) ■ 비대면 상담서비스, 이동상담서비스 등 접근성 강화

□ 향후 계획

- 재난 심리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 심리지원 인력 교육·훈련 실시('23.下~)
 -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자 워크숍 추진(12월)
- 마음안심버스 및 소진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실시
- 근로자 심리지원 인프라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근로자건강센터(1개소) 및 트라우마센터(9개소) 신규 설치(~'24년)
 -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하여 심리지원 접근성 강화

□ **설립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관리, 건강상담 등을 통한 직업병 예방

□ **현황**

- '11년 최초 설치(3개소), 현재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22개 분소),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8년 최초 설치 후 현재 전국 14개 운영
 - * ◦ <근로자건강센터> 12년('11~'22년)간 약 180만명의 산업보건분야 건강상담 지원
 - <직업트라우마센터> 5년('18~'22년)간 약 1.2만명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지원
- (운영방식) 3년 단위로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 1년 단위로 운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 (운영인력) 운영책임자, 의학전문가, 간호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등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21년 운영인력 67명 확충(전국 23개 센터 각 2명, 21개 분소 각 1명)

□ **기능**

-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상담, 사후관리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제공
-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 건강상담, 건강 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대상 사후관리
- (직업트라우마 관리) 중대재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제공, 신속한 일상 복귀지원
 -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호소하는 우울증 등 트라우마

□ **예산 및 물량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예 산	20,450백만원	20,810백만원	22,060백만원
물 량	센터 23개소 분소 21개소 (트라우마센터 13개소)	센터 23개소 분소 22개소 (트라우마센터 14개소)	센터 24개소 분소 22개소 (트라우마센터 23개소)

4-3-2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마련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박강수 사무관 ☎ 044-202-3873 e-mail : meehak@korea.kr

□ 추진 배경

- 의료종사자 등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향후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및 홍보 강화

- **(심리지원 지속)** 집단상담·교육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마음안심 버스를 활용하여 대응인력 대상 심리지원 지속 실시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진관리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 실시
- **(고위험군 관리)** 심리평가·상담 결과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은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연계 등 추가 심리지원 실시
- **(홍보 강화)** 보건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감염병 우울 예방 캠페인, 심리지원 안내 등을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

현황	개선
■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 미흡	▶ ■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 향후 계획

- 마음안심버스 및 소진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지속)

4-4-1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혁신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담당자	이화영 서기관	☎ 044-202-2531	e-mail : ehwayoung@korea.kr
	박하나 주무관	☎ 044-202-2537	e-mail : phn1129@korea.kr

□ 추진 배경

- 감염병을 비롯하여 응급, 산모·신생아 등 지역사회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필요

*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주요 내용

◇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운영 ('23년)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여, 원내·외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필수의료 현안 발굴 및 대안 모색

* 부자치단체장 주관,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참여

- **(총괄조정 강화)** 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원장 직제 신설('23년 상반기)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운영 중 ■ 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원장 직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로 확대

□ 향후 계획

- 권역 책임의료기관(17개)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70개)을 확충하여 필수의료의 지역 균형적 인프라 구축(~'25)

4-4-2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신현준 사무관 ☎ 044-202-2412 e-mail : presence7@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3년여간 비대면진료 경험 축적*
* 1,419만 명 대상 25,998개소 의료기관에서 3,786만 건 실시('20.2.~'23.5.)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20.2.23.),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20.2.24.),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20.12.15.)
-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닌 일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주요 내용

◇ 국민 건강 증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 **(시범사업)** 주기적 평가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준비
 - 의·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개선사항 논의
 - ▲청구자료 심층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수가 적정성 평가 등 실시
- **(제도화)** 「의료법」 개정 추진
 - * 이종성,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2건), 김성원 의원 등 총 6건 발의, 법안소위 상정('23.3.21, 4.25, 6.27, 8.24)

현황	개선
■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운영	▶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향후 계획

○ 시범사업 평가 실시, 지침 지속 보완

- ▶ 민원, 질의사항 등 모니터링, ▶ 자문단 논의, ▶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 환자, 의료기관·약국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 의·약계, 환자·소비자단체, 앱업계, 전문가 등 참여하여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지속 개선 추진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4-4-3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대형 종합병원 체질 개선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배성진 사무관	☎ 044-202-2471	e-mail : bb8566@korea.kr
	김영국 사무관	☎ 044-202-2472	e-mail : imuk324@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유행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내 중환자실 1인실 설치 및 음압격리병실 확충 등 중환자실 구조 개편 필요

□ 주요 내용

◇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대형 종합병원 체질 개선

- **(중환자실 강화)** 팬데믹 시 중증 환자 진료체계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확충 및 ‘중환자 1인실’ 설치기준 도입(‘24년 상반기)
- **(중환자 중심 평가)**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 검토
 - 제5기(‘24~26년) 지정기준에 환자구성상태 지표 강화, 경중환자 회송체계 강화, 중증입원환자 가점 신설,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신설 등 지표 반영(‘23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환자실 내 1인실 설치의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병상의 일정 비율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24년 상반기)

□ 향후 계획

- **(중환자실 강화)**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대상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강화 및 중환자 1인실 설치의무 부여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4년 상반기 공포 예정)
- **(중환자 중심 평가)**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검토 시 중환자 진료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강화 및 개발 지속 검토(‘24년~)

**5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5-1-1

대비 단계: 팬데믹 발생 전 신속 개발 체계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수 연구관	☎ 043-719-8497	e-mail : djsimson77@korea.kr
	김미영 연구관	☎ 043-913-4151	e-mail : mkim2612@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백신·치료제 주권 및 보건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팬데믹 대응 국산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주요 내용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예방·대응 가능한, 백신·치료제 선비축을 위한 사전대비 인프라 강화

- **(실행전략 마련)** 백신·치료제 개발 선진 플랫폼 및 추진전략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취약영역 및 난제 해결, 추진방향 및 로드맵 정립
* 우선순위 선정 자문('23년)
- **(사전확보)** 시급성이 요구되는 백신(9종)·치료제(8종)에 대한 시제품 사전확보를 위한 라이브러리 비축,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 (라이브러리) 항원을 개발·발굴하여 프로토타입을 사전에 생산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질병청 산하 재단법인) 설립('23년)
 - (한국형PREMISE)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학적 감시체계 구축('23.9~)하여 신속 개발 기반 확보
- **(플랫폼 확보)** mRNA 백신 핵심 요소기술 및 신기술 국산화,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핵심기술 및 플랫폼 고도화
 - 항체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약물재창출을 위한 연구자원 확보 등 국제공동연구 수행('23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후 사후 개발 ■ 플랫폼 등 핵심기술 확보 미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확보 연구체제로 개편(계속) ■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수립('24년.上) ■ 플랫폼 등 핵심기술 확보(계속)

□ 향후 계획

- **(로드맵)**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수립 정책융역연구 추진
 - * 신종감염병 우선순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23.11~'24.上)
- **(사전확보)** 시제품 라이브러리 및 검체분석체계 등 운영
 - (라이브러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23)에 따라 운영 계획 수립('24), AI 항원 설계 기술 등 활용하여 후보물질 발굴·개발하여 라이브러리 운영('24~)
 - (한국형PREMISE) 환자 검체,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및 검체 분석체계 강화('24~)
- **(플랫폼 확보)** mRNA 핵심요소기술 및 신기술 국산화, 플랫폼 고도화
 - (mRNA) mRNA 전달체, 벡터 등 핵심기술 확보* 지속(~'25)
 - (백신플랫폼) 기존 플랫폼 개선 및 기술* 고도화 추진('24~)
 - * 항원 나노입자 기술, 새로운 바이러스 유사입자 및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개발
 - (치료제플랫폼) AI 기반 치료제 평가 및 발굴 기술 개발연구 착수
 - * SFTS, 라싸바이러스 등 2개사업 치료제 개발 플랫폼 연구 추진('24. 1분기~)
 - (신기술) 국내외 협력을 통한 효능 및 안정성 향상 항원디자인 및 면역증강제 등 신기술 확보('24~)
- **(글로벌 협력)**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국제협력 강화
 - 美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모더나社, 국제백신연구소, 호주 피터도허티연구소 등과 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추진('23~)
 - 국외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병원체자원 교류
 - * 페루(INS), 독일(DSMZ),싱가포르(NCID), 세네갈(파스퇴르연구소) 등

참고 1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우선순위 백신 개발 계획(안)

□ 추진 내용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계획 수립, 우선순위 선정('23)
- 백신 선제 개발('23~), 백신라이브러리 구축('23~)

○ (신종감염병 대비 전략) 팬데믹 위기시 100/200일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 구축

- 유행 100/200일 이내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사전에 대비하여 우선순위 감염병 선정하여 시제품 생산

< 백신 개발 전략(안)>

	팬데믹 발생시점		백신 개발	
시기	팬데믹 발생 전	팬데믹 (팬데믹 발생 ~ 개발 전)	팬데믹 (백신 개발 후)	
구분	대비	대응	평가·보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감염병 선정 -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 구축 - 백신 플랫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일/200일 내 개발 - 신속 비임상·임상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면역원성 평가 - 치료제 효능평가 	

○ (우선순위) 국내·국외(WHO, CEPI) 등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호흡기 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대상(9종) 선정*

*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RSV

○ (선제개발) 우선순위 병원체(9종) 중심으로 단계적 개발, ①국내 자체개발 및 ②글로벌 개발공조의 투트랙 전략

① (국내 자체개발) 국내 위험도 높은 병원체*의 백신 후보 발굴, 임상1상으로 안전성 등 검증 후 비축** → 임상2상 신속 진입 또는 품목허가

* 예: 국내 유행률, 사망률 등 높은 병원체(SFTS, 한탄,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RSV)

** 질병청,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mRNA백신사업단, 글로벌백신선도사업단 등의 성과물 연계

② (글로벌 공조) 국내 유행률이 비교적 낮은 병원체*는 CEPI, 해외기관 등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국내기관 참여** 확대

* 예: 라싸, 뎅기, 니파, 치쿤구니아

** ① SKB社, CEPI와 mRNA 백신개발 협약('22), 라싸열 등 mRNA 백신 개발

② 질병청 미 모더나사와 mRNA 백신개발 협약('22), SFTS mRNA 백신 개발

< 우선순위 백신 개발 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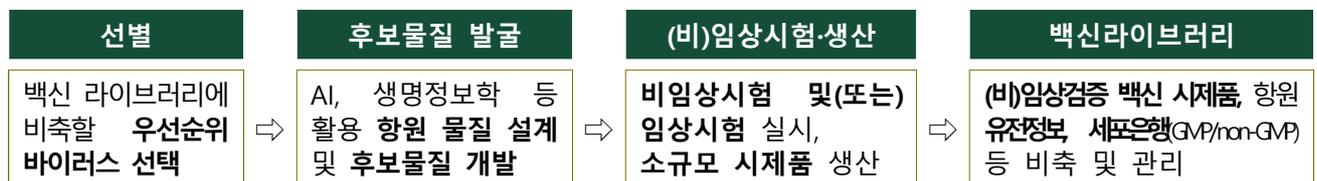
연번	병원체	실용화 목표	후보물질 플랫폼	현 개발단계	국제 협력	해외 허가
1	SFTS	품목허가	mRNA DNA	비임상	모더나	
2	신증후군 출혈열(한탄)	품목허가	viral vector mRNA	비임상	IVI 등	
3	신종인플루엔자	품목허가	재조합, mRNA	비임상	-	미국 등
4	코로나19	품목허가	mRNA	임상	-	미국 등
5	RSV	품목허가	재조합	비임상	-	미국 ('23.5)
6	라싸	임상1상	mRNA	비임상	IVI,CEPI (세네갈)	
7	뎅기	임상1상	재조합, mRNA	비임상	IVI	EU ('23.3)
8	니파	임상1상	재조합	후보물질 개발	IVI	
9	치쿤구니야	임상1상	미정	후보물질 개발	-	미국FDA 허가검토 중

○ **(라이브러리 구축)** 인공지능(AI) 등 활용한 항원 설계 및 백신 시제품 비축을 통해 위기시 신속대응

- 우선순위 병원체 선택 → 항원 설계(인공지능, 생명정보학 전문가* 협업) 및 후보물질 개발 → (비)임상시험 → 소규모 시제품 생산·비축

* 스탠다임, 인세리브로(조은성 교수, 고려대), 백민경 교수(서울대), 김동섭 교수(카이스트) 등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안 >



참고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우선순위 치료제 개발 계획(안)

□ 경과사항

- 국외(WHO, CEPI, NIAID) 및 국내 치료제 개발 추진 사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병원체(8종) 선정
 - ('22.10)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신변종 분과회의 자문
 - ('23.4)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자문
 - ('23.4) CEPI, 미 NIAID 치료제 개발 우선순위 자료 분석
 - ('23.5)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치료제 개발 우선순위 발표
 - ('23.7)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우선순위 치료제 개발」 추진계획 청장님 보고

< 우선순위 선정 과정 >

CEPI(감염병혁신연합)	NIAID(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100 day mission('21.11)	팬데믹대비 계획 ('21.12)
25개바이러스 과 호흡기바이러스과 대상 저분자항바이러스제25개 후보 확보(임상 1상 완료)	7개바이러스 과 Bunyaviridae, Coronaviridae, Filoviridae, Flaviviridae, Paramyxoviridae, Picornaviridae Togaviridae

▼ 비교·분석을 통한 치료제 개발 우선순위 선정

6개 바이러스 과 (8종바이러스) 라싸, SFTS, 코로나19, MERS, 뎅기, 조류인플루, 니파, RSV
--

□ 추진내용

- 우선순위 병원체 대상으로 치료제 신속개발 체계 구축

시기	팬데믹 발생 전	팬데믹 (팬데믹 발생 ~ 개발 전)	팬데믹 (치료제 개발 후)
단계	대비	대응	사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개발플랫폼 및 핵심 기술개발 • 후보물질 라이브러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제 플랫폼 선정 및 평가 • 임상 시료 대량생산 및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치료효능 모니터링 • 변이 대응 분석
목표	임상진입 후보물질 선제 확보	100/200일 이내 치료제 확보	치료제 유효성 평가

- **(후보발굴)** 치료후보물질 발굴(항체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라이브러리 구축
 - 타겟 항원 및 기전 발굴, 신속선별 등 치료제 개발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 다원화
 - * 항바이러스제 약효평가 거점실험실 활용('23~), 복지부 사업 (Disease X 등) 연계
- **(생산)** 국내 대량 생산 바이오 공정 체계 구축을 통한 비임상·임상 시료 선제적 확보(비축)
 - * GLP 기반 생산기관 구축 추진 중('23-'24), 복지부 사업(Disease X 등) 성과 연계
- **(평가)** 질병청, 출연(연)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동물 효능평가 등 (영장류 등) 지원
- **(협력)** 치료제 개발 연구자원* 확충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확대
 - * 아프리카(탄자니아, 라이베리아, 남아공 등) 고위험바이러스 발생국 협력을 통한 국내 미발생 바이러스 확보 추진 등('23~)
 - ** 美 NIH(PREMISE 프로그램)등 기술 선도국과의 AI 활용(타겟 발굴, 신속선별 등) 연구 확대

< 우선순위 치료제 개발 전략(안) >

연번	병원체	목표	플랫폼	현 단계	연구과제	협력기관	해외허가 사례
1	SFTS	임상 1상 (1단계)	항체	후보물질 발굴	질병청(내외부)	미 NIAID 민간(팬젠)	-
			약물재창출				
			합성화합물				
2	메르스	항체	비임상	질병청(내부)	민간(프로티움사이언스)	-	
3	코로나 19	임상 1상 (2단계)	항체	후보물질 발굴	복지부 질병청(내외부)	민간 (셀트리온, 스크립스항체연구원)	미국 등
			약물재창출				
			합성화합물				
4	니파	항체	후보물질 발굴	질병청(내부)	민간(진원생명과학)	-	
약물재창출	-						
5	라싸	임상 1상 (2단계)	항체	후보물질 발굴	질병청(내부)	남아공 NICD 민간(한국화학연구원)	-
			약물재창출				
6	렙티	합성화합물	후보물질 발굴	질병청(내외부)	민간(한국화학연구원)		
7	RSV	항체	후보물질 발굴	질병청(내부)	민간(셀트리온)	미국 등	
8	조류 인플루엔자	임상 1상 (3단계)	약물재창출	연구자원 확보 추진	-	-	미국 등
			합성화합물				

5-1-2

대응 단계: 팬데믹 발생 시 신속 개발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수 연구관	☎ 043-719-8497	e-mail : djsimson77@korea.kr
	김미영 연구관	☎ 043-913-4151	e-mail : mkim2612@korea.kr

□ 추진 배경

- 팬데믹 위기대응 시 신속 개발 체계 가동하여 의료현장에 실제 백신·치료제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총력 지원

□ 주요 내용

- ◇ **대비 단계에서 확보한 백신·치료제 시제품 등을 활용하여, 대응 단계에서 다기관 협력 (비)임상 총력 지원**
- ◇ **백신·치료제 개발 민간지원 행정규칙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신속개발)**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200일 이내 신속 개발 추진
 - ①(100일, Track 1) 타겟 병원체에 대한 임상1/2상 정도의 안전성·용량이 확인된 시제품 **확보** 시
 - ②(200일, Track 2) 타겟 병원체와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 **확보** 시(예시: SARS-CoV-3)
- **(비임상)** 백신·치료제 개발 민간지원을 위한 질병청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이 요청하는 시험·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 「감염병 백신 시험·분석 의뢰 등에 관한 규정」 및 「감염병 치료제 시험·분석 의뢰 등에 관한 규정」 제정('23년12월)
 - ** 과기부 출연(연) 협력·연계(질병청-국가전임상시험센터 업무협약, '23년 6월)
- **(임상)** 국내외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신속임상 실시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 임상연구 및 면역학적 감시 체계 가동을 통한 임상 기간 단축 추진
 - * 백신안전기술센터(식약처 산하기관) 업무협약('23년 6월), RSV, SFTS, HPV 등 표준물질 제작 추진('23년 하반기~),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협력 추진('24년~)
 -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신종감염병 치료제의 임상 효능평가 기획 및 지원, 임상 특성 규명 등 신속 임상연구 체계 마련
 - * 한-미 코로나19 치료제 공동임상시험 식약처 IND/중앙 IRB 승인('23년 3월), 임상시험개시(3개기관, 5~7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지원 중심 ▪ 임상시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생산·임상·허가 통합 총괄 지원(계속) ▪ (비)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운영(계속)

□ 향후 계획

○ (비임상) 민간 기업등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동물실험 등 비임상 시험 지원

- (민간지원) 「감염병 백신 시험·분석 의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 선정, 시험·분석 추진('24년~)
- (시험법) 우선순위 병원체 중심으로 비임상 연구역량 강화로
^①세포내(in vitro) 분석법 ^②동물 감염모델 ^③신속 평가법 구축
- (백신지원) 비축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

○ (임상) 임상 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주도 신속임상 실시

- (전략) 기획 과제* 및 주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24년~)를 통한 국가차원의 신속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개선 방안 수립

* ^①백신·치료제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과제('23.9.~'24.4.)

^②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추진방안 연구('24.4.~12.)

- (협력체계) 전세계 주요 임상연구기관과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체계 지속 및 국내 참여 네트워크 확대 추진('24년~)

* 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국제 임상시험(STRIVE) 협력

- (임상 코디네이션) 감염병 신속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국가 임상 연구 코디네이션 역할 지속 수행('24년~)

5-1-3

평가·보완 단계: 면역원성 및 치료임상 효능평가에 따른 적용 결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수 연구관	☎ 043-719-8497	e-mail : djsimson77@korea.kr
	김미영 연구관	☎ 043-913-4151	e-mail : mkim2612@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변종·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병 모니터링 지속 및 백신·치료제 유효성 분석 필요

□ 주요 내용

◇ 백신 면역도 장기추적 및 치료제 효능유지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
◇ 시설·자원 지원 활성화 및 체계화

- **(면역원성 평가)** 국내 도입 백신 접종군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하여 면역도 장기 추적 조사 실시하고 예방접종 정책 등에 반영
 - *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자 및 접종 후 감염자에 대한 면역원성 장기 추적 조사('21년~)
 - *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22년 7월~), 면역도조사 기획 연구 실시('23년 5월~)
- **(효능평가)** (비)임상 효능평가 민간지원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GCLP) 운영 및 활용 체계 강화, 치료제 적용 후 임상효능 평가, 변이발생시 유효성 분석 등 사후평가
 - * 감염병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임상연구 체계 구축('22년~)
- **(민간지원)** 치료제 비임상 효능평가 지원 확대를 위한 약효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 * 코로나19 오미크론 신규변이 등에 대한 주요 치료제 효능유지 분석(상시)
 - * 세포(2개소) 및 동물효능평가(1개소) 3개소 신규 협약체결('23년 7월)
- **(시설·자원)** 생물안전 3/4등급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지원 활성화 및 체계화
 - * 공공백신개발/국가병원체자원은행 정보시스템 고도화('23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면역원성 평가(단기) ■ 치료제 임상·비임상 효능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추적조사, 다양한 변이주 효능 평가 ■ (비)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운영

□ 향후 계획

- **(면역원성평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면역반응 등 관련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정책 지원('24~)
 - *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4~5차 조사('23.12~'24.8)
- **(네트워크)** 질병청-지역 거점 센터 연계 협력을 통한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 네트워크 구축하여 중장기적 효능평가 체계 운영('24~)
 - * ①기술전수 및 인력양성, ②표준시험법 및 표준물질 제공, ③물질 및 시설관리 메뉴얼 제공 등 연계 협력 지원 확대
- **(효능평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주요 치료제 비임상 효능 평가 지속 및 항바이러스제 약효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강화('24~)
 - * 오미크론 등 (총 43종, ~'23.10.) 주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의 효능유지 확인(세포수준)
- **(시설·자원)** ^{질병청} 생물안전시설 및 병원체자원은행의 민간 이용 활성화
 - (생물안전시설) 민간의 질병청 생물안전3/4등급 시설 이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24~)
 - (병원체자원) 표준절차서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병원체 특성분석을 통한 패널자원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24~)

5-2-1

임무중심 감염병 R&D 총괄기획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치훈 연구관 ☎ 043-719-7351 e-mail : lee495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3차 국가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22~’26)」을 수립(‘21년 10월 국과심)에 따라
 -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중점로드맵, 거버넌스 강화, 신속대응 연구 등 R&D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임무중심 감염병 R&D 총괄기획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임무중심 R&D)** 「제3차 추진전략」에 따라 임무중심 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관리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목표지향적 사업 및 전략 기획 추진
 - 제3차 추진전략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 수립시 신변종 감염병 R&D 포트폴리오(R&D중장기 로드맵 등)를 마련하여 보고(‘23년 6월 감염병특위)
 - * (위기대응매뉴얼) 감염병연구기관협의회 실무자회의(‘23.6월)를 통해 감염병위기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역할정립 및 세부 실행방안 기획 추진중
 - * (기술분류체계) 제3차 추진전략 로드맵(안) 연계하여 KISTEP 표준분류체계 개정 수요조사(‘23년 8월~)에 따라 감염병 기술분류체계(안)을 신설하고자 기획 추진중
 - * (성과관리고도화) 주요 현안별 국가 R&D 정보시스템(NTIS R&D TAB)에 감염병 분야 대시보드를 신설하고자 KISTI와 협의하여 실시간 성과관리 고도화 기획 추진중
 - *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 제3차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 이행과제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R&D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백신사업단과 공동개최(‘23년 9월)
- **(신속대응 R&D)** 감염병 위기 시 선제적인 기술 확보와 기존 개발된 시스템 및 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연계·적용 될 수 있는 신속대응 R&D 마련 추진
 - * (예산) 보건안보 위기시 신속 R&D 대응 체계 확보(Fast-Track)(총 10년간 500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현안중심 분절적 R&D 추진 ▪ 감염병 위기시 연구기관별 협력 부족 ▪ 위기시 감염병 신속지원 R&D 부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임무중심 R&D 로드맵 구축(23년 6월) ▪ 위기대응 매뉴얼 및 성과관리 고도화(계속) ▪ 위기시 신속지원 R&D 체계 구축(계속)

□ 향후 계획

○ **(임무중심 R&D)** 「제3차 추진전략」에 따라 임무중심 R&D 포트폴리오를 마련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목표지향적 사업 및 전략 기획 지속 추진

- * (위기대응매뉴얼) 제2차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워크숍(23.11.23)를 통해 감염병위기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역할정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추진
- * (표준분류체계) 제3차 추진전략 로드맵(안) 연계하여 감염병R&D표준분류체계(안)을 마련하여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에 보고(11.1) 및 개정수요조사 제출(~12월)
- * (성과관리고도화) KISTI와 협의하여 감염병분야 9대 분야별 실시간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 국가 R&D 정보시스템(NTIS R&D TAB)에 감염병 분야 대시보드를 신설하여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에 보고(11.1)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24.1월~)
- * (다부처신규기획)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대응사업 예타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질병청 등 5개부처) 실무자회의(워크숍 등) 추진(11.23) 및 공청회 개최 예정(~12월)

○ **(신속대응 R&D)**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대응 R&D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논의 추진중

- * 현재 "보건의료 및 감염병에 특화된 다부처사업"으로 위기상황시 긴급현안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 예정

사업명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사업	
사업기간/예산	10년 간(2025~2034) 총 500억 원(연간 50억 원)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중심의 다부처사업 (협의중)	
사업목적	보건안보(감염병, 바이오테러 등) 분야의 현장 연계·적용 기술개발 및 실증과 혁신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위기상황 신속대응	
사업방향	<p>상시위기 ↔ 긴급위기</p> <p>상존 또는 신규출현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대응</p> <p>통제불가능한 신종감염병에 의해 국가 보건안보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응</p>	
	<p>유형① 현안해결 신속개발</p> <p>• 보건안보 및 감염병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단기 연구</p>	<p>유형② 현장적용 고도화</p> <p>• 현재 개발되어 있는 보건-의료 및 감염병 대응기술을 방역현장에 신속적용 위해 실증, 고도화, 검증이 필요한 연구</p>
	<p>유형③ 다부처 협력대응</p> <p>• 보건-의료 및 감염병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다부처 협력으로 중장기적 개발이 필요한 연구 중 추진이 시급한 연구</p>	
	현장수요에 기반한 보건안보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 연계·적용	
지원대상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 중심(+관련 산학연 연구자, 해외연구기관 등)	
수혜대상	기술적 애로를 겪고 있는 보건안보대응 현장기관 (정부부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질병대응센터, 감염병전문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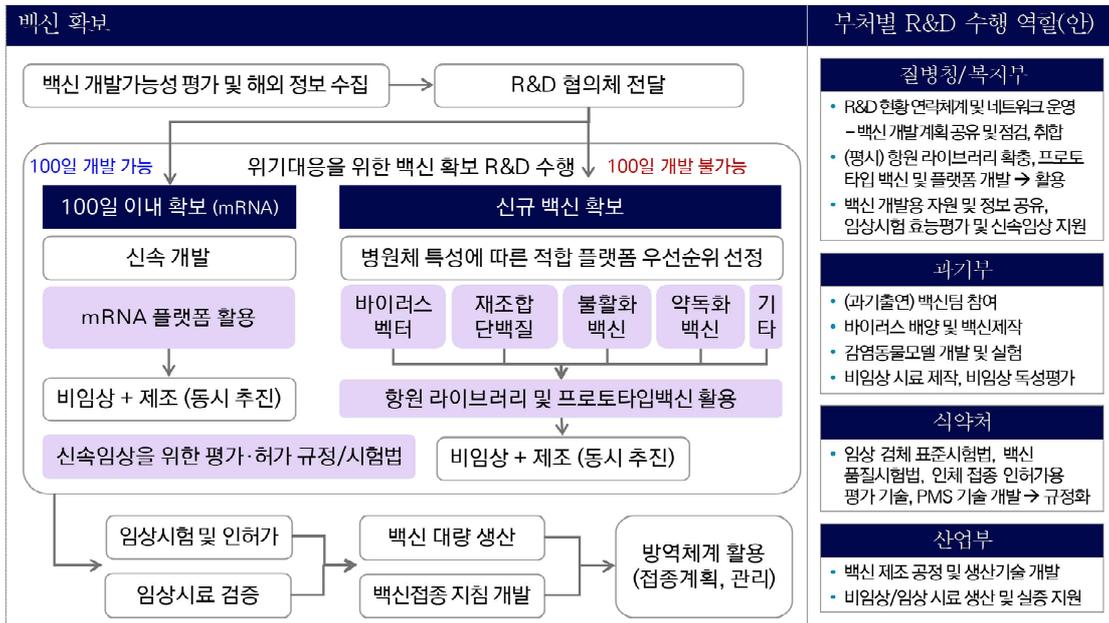
참고 1

위기대응 매뉴얼-기술분류체계-중장기 로드맵(안)

□ 감염병연구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안)_수립중

- 감염병 위기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R&D 성과물(진단제/키트, 백신, 치료제) 조기 확보를 위해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한 긴급대응 절차 마련

< 위기 시, 백신 확보를 위한 감염병연구기관 역할수행 방안(안) 예시 >



II. 추진방법(안)

01 [추진체계] 감염병연구기관실무협의체 역할분담 및 운영

참여부처 (범부처추진위 + 협의체 참여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운영위원회

간사: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기획위원회

<p>협의체 연구자 중심</p> <p>총괄협의체 15개 기관 (MOU 참여기관) 담당자 및 연구자</p> <p>실무협의체 참여기관</p>	<p>산학연병 전문가 (필요시 의견수렴)</p> <p>감염병연구포럼, 감염병연구 기획전문위원회 등 소속 + 협의체 기관 추천 전문가</p> <p>자문/의견수렴</p>
---	---

실무협의체 역할

조사 응답 및 논의 참여

- ① [현황] 기존에 취합된 투자/인프라/성과 최대한 반영 → 기능 구분자로 제시되는 보유기술, 자원, 인프라, 파이프라인 및 가능역할 조사 응답 및 회신
- ② [의견-협의] 로드맵/매뉴얼 대응체계 이행 상, 구체적으로 주도/참여 가능한 역할, 가용 예산 등
- ③ [제안] 로드맵/매뉴얼 대응 시, 다부처-다기관 협력 아이디어 및 의견 ※ 단, 긴급 R&D 수요는 별도 움직임에서 조사

추진 방법 및 일정(안)

- ① (6월말) 수행계획 공유
- ② (7~8월) 서면조사 → 양식 배부/취합
- ③ (9~10월) 초안 마련 및 협의체 의견 취합
- ④ (11월) 의견반영 수정(안)을 토대로 대면 워크샵 추진 → 최종 협의결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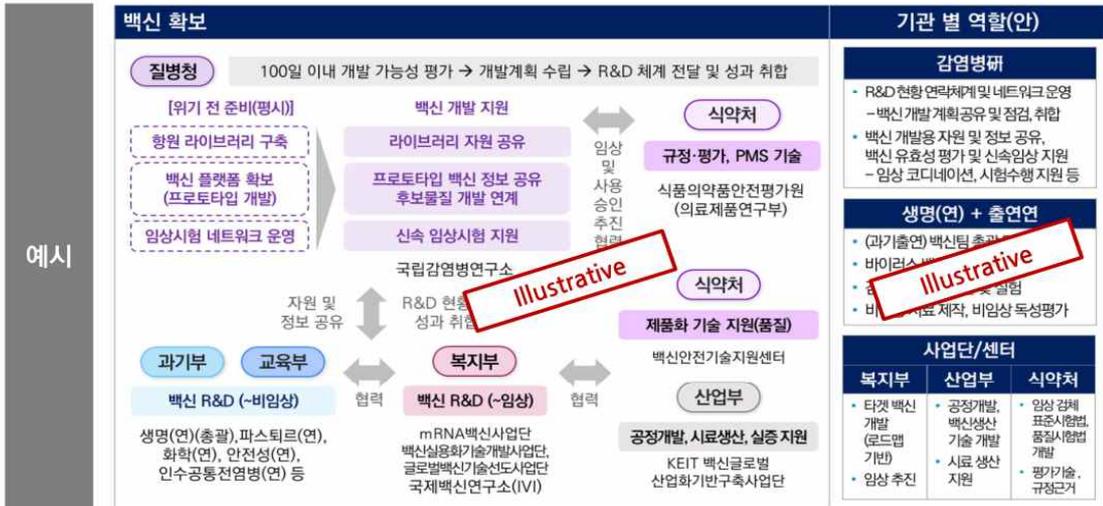
02 [산출 목표 1] 위기대응 매뉴얼 구체화

포지셔닝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 감염병 R&D 역량을 가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전주기 협력·대응 체계 마련

핵심방향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 100/200일 Track에서 기관별 R&D 대응 절차, 수행 및 협력 조치 사항을 프로토콜 형태로 마련



예시

02 [산출 목표 1] 위기대응 매뉴얼 구체화

필요 사항

(현황) 어느 기관에서 현재 어디까지 파이프라인을 확보 했는지 확인 필요
 (의견)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참여할 수 있을 지 확인 필요

핵심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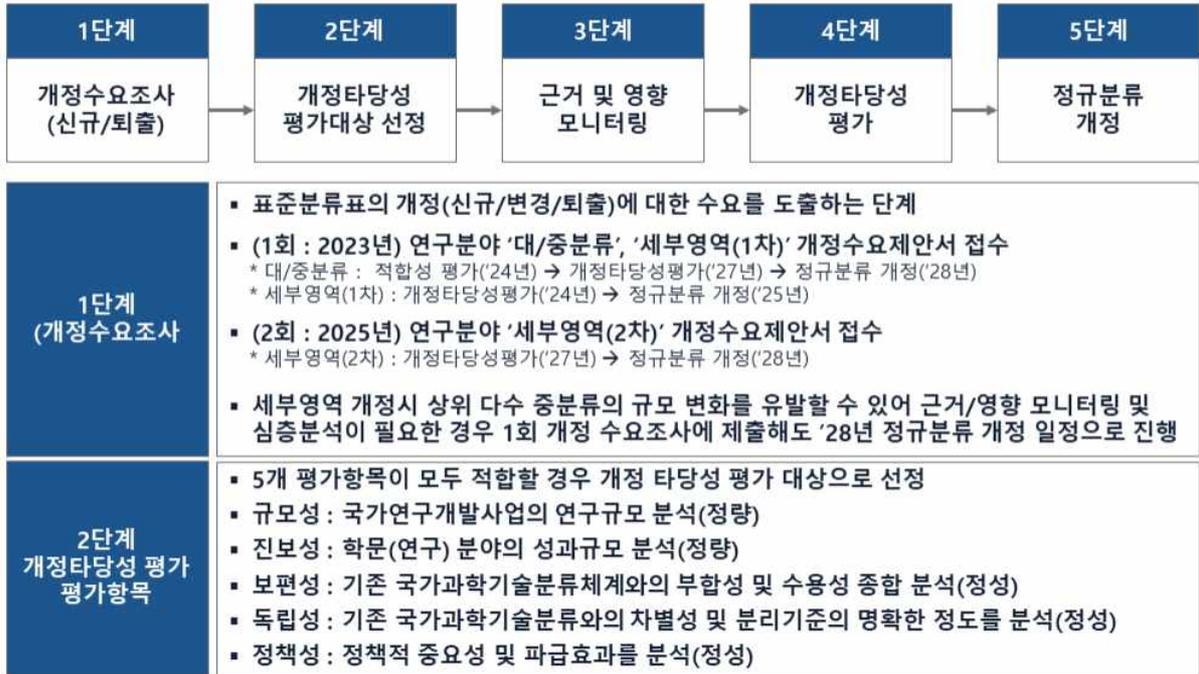
각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어도, 한 기관의 전담은 사실상 어려움
 → 중복되어도 사전에 역할분담해 두고, 위기 시 범정부 총력 투입에 참여



□ 감염병 R&D 기술분류체계(안)_수립중

- (분류체계) 기존 감염병 기초·원천연구 기술분류('21)와 연계하여, 연구 범위(병원체 타겟, 임상/방역 등)을 보완하고 제3차 추진전략 로드맵(안) 연계 추진

[참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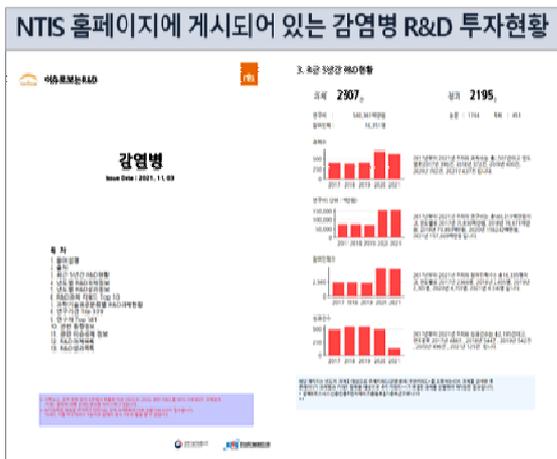


[참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보건의료분야 중분류 및 세부영역 반영 예시

중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영역
LC01 의생명 과학		LC10 치의과학	
LC02 임상의학	LC0207. 감염학	LC11 감염학 (또는 감염병 관리)	LC1101. 감염병 감시/예측 LC1102. 감염병 임상/역학 LC1103. 감염병 기조·기전 LC1104. 감염병 진단기술 LC1105. 감염병 치료기술 LC1106. 감염병 백신 LC1107. 감염병 방역/방제 LC1108. 감염병 인프라 LC1109. 감염병 정책/지침 L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감염병 대응
LC03 신약의약품개발	LC0316. 백신	LC11 식품안전 관리	
LC04 의료기기		LC12 영양 관리	
LC06 의료정보/ 시스템		LC13 의약품안전 관리	
LC07 한의과학		LC14 의료기기·s/w 안전관리	
LC08 보건학	LC0802. 감염병역학	LC15 독성안전성 평가·관리	
LC09 간호과학		LC99 기타 보건의료	

- (성과관리) 기술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주요 현안별 국가 R&D 정보시스템 (NTIS R&D TAB)에 감염병 분야 대시보드를 신설하여 성과관리 고도화 추진중

NTIS에서 제공하는 감염병 R&D 정보의 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청과 KISTI이 협력하여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까지 모두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추진



- NTIS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질병청의 2023년 시행계획 수립시 파악된 감염병 R&D 예산·과제수와 상당한 차이
- 이러한 차이는 과제 추출과정에서 이용된 **키워드의 차이, 노이즈 제거 과정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감염병 R&D 투자분석 결과 통일

특정기관에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까지 모두 수행

- 특정기관에서 감염병 R&D 투자분석 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분석한 후 공유함으로써 현황정보의 일관성 확보

노이즈 제거와 기술분야 분류 자동화 솔루션 활용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노이즈 제거와 기술분야 분류(데이터 전처리 과정)를 자동화하는 솔루션 적용

KISTI와의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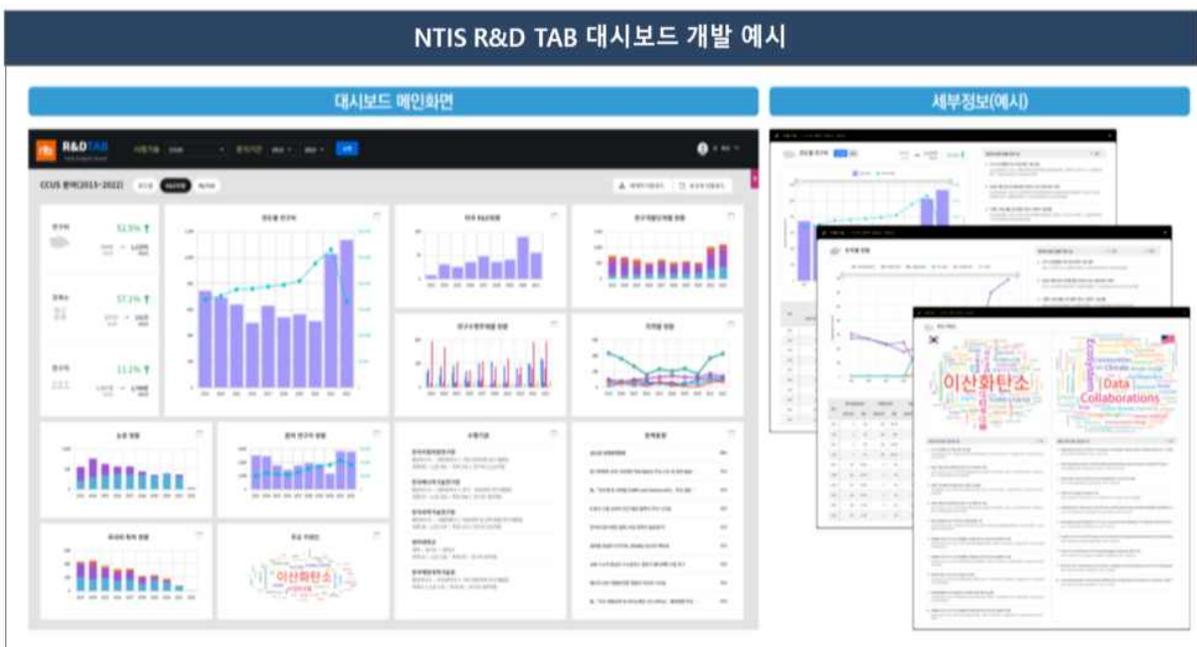
질병청 : 키워드 셋과 데이터 전처리 결과 공유

- 통일된 감염병 R&D 키워드 셋 제공으로 rawdata 일관성 확보
- KISTI로부터 받은 rawdata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수행

KISTI : rawdata 제공 및 분석결과 공유

- 질병청에서 제공한 키워드셋을 토대로 rawdata 추출
- 질병청으로 제공받은 데이터 전처리 결과를 토대로 분석 수행

KISTI의 주요 현안별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는 “NTIS R&D TAB”을 통해 감염병 R&D 분석결과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 개발



□ 제3차 추진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안)

○ WHO 및 CEPI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 병원체를 참고 하되, 국내 발생·위협 가능성 및 임상현장 이슈를 고려한 제3차 추진 전략 로드맵 수립

- * (질환 분과) ① 신·변종 감염, ② 기후변화·인수공통, ③ 세균 및 항생제 내성, ④ 결핵, ⑤ 급·만성 감염
- (미션 분과) ⑥ 국제협력, ⑦ 방역기술 및 대응, ⑧ 백신개발 및 임상, ⑨ 치료·임상

○ 기초·기전 - 진단

5대 질환분과	신·변종 감염	기후변화·인수공통	세균 및 항생제내성	결핵	급·만성 감염
4대 미션분과	국제협력	방역기술 및 대응	백신개발 및 임상	치료·임상	

기술 분류(안)	제3차 추진전략 수행기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기초·기전			신·변종 바이러스 오믹스기반 특성, 변이예측, 감염경로, 면역병리기전 연구			
	병원성, 특성분석(SFTS, JE 등)		기후변화 감염 원인병원체 유전자 변이 구조, 멀티오믹스 분석, 병원성, 치료표적 연구			
	원헬스 전파양상, 내성균 전파기전		다분야 항생제 내성전파 통합분석, 전파 중재모델 개발, 내성발현 비교 연구			
			병원기반 위험요인분석	병원기반 전파제어-관리방안 연구		
			급·만성 바이러스 멀티오믹스 대사체, 바이러스제어 타겟, 복제/전파기전 연구			
			미해결 급·만성 바이러스 질환 발병요인(병인기전 등),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동시감염 기전 규명			
진단			코호트 구축 및 운영 (기존 + 신규), 코로나 후유증 조사 등			
			임상검체 및 데이터 확보 → 질환모델링(데이터 기반) → 중개임상 연구			
			신·변종 바이러스 진단 바이오마커 라이브러리, 첨단 진단/검사 기반기술 개발			
			신·변종 고감도 정밀진단 기술 개발 및 실용화			
			매개체감염 진단기술(PCR 동시진단, 다중진단, 신속진단 등) 고도화, 표준화, 평가 및 인허가			
			신기술 기반 기후변화·인수공통, 해외유입 매개체 감염 진단 플랫폼 개발 및 실용화			
	항생제내성균 유전체 분석기반 확립		다양한 진단타겟 발굴(멀티오믹스타겟) → 신규 타겟을 반영한 기존 진단기술 고도화			
			신기술 기반 신속-다중 항생제 내성 진단 플랫폼 개발			
	현장진단, 분자진단 기술 자동화		진단기기 적용실태 조사	현장검사기반 진단 네트워킹 및 정도관리 기술, 실용화		
	호흡가스/소변/단백질 진단 기술		결핵 및 NTM 신규진단기술 개발 및 임상유용성 평가 (진단법, 기기, 키트)			
		혈액기반 결핵/NTM 진단기술, 비객담기반(소변 등) 진단기술				
		급성호흡기감염 동시진단 바이오마커	동시진단 신기술 실용화			
		만성감염 질환예측/내성진단 바이오마커 개발 및 신기술 표준화				
		감염병 진단법 임상평가기술 개발				
		진료지침 근거 창출 임상연구 →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 치료

5대 질환분과 신·변종 감염 기후변화·인수공통 세균 및 항생제내성 결핵 급·만성 감염

4대 미션분과 국제협력 방역기술 및 대응 백신개발 및 임상 치료·임상

기술 분류(안)	제3차 추진전략 수행기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치료	저분자 화합물 / 항바이러스	신변종 호흡기 타겟 발굴	저분자 화합물 기반 치료제 선도-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상 (동시 진행)	
		고위험 출혈열 우선순위	타겟발굴	저분자 화합물 기반 치료제 선도-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상 (동시 진행)
		광범위 항바이러스 치료후보물질 고도화 (SFTS, 플라비)		항바이러스 선도-후보물질 / 비임상 / 임상 1상 (동시 진행)		
		HIV, HBV 치료제 개발		신규 타겟 및 유효 Hit 물질 발굴		선도물질
				기존 유효 후보물질 비임상 연구		
	바이오 기반 / 항체치료제		SFTS 치료용 중화항체 개발	타겟발굴	바이오기반 선도-후보물질 / 비임상 / 임상 1상 (동시 진행)	
		RSV 치료제 개발	치료항체 후보발굴 평가, 항원구조 분석		항체 효력 고도화	
				비임상	임상 1상 (동시 진행)	
	약물재창출		기존 치료물질 재평가, 스크리닝 고도화	선도-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임상 1상~
		뜨뜨가무시 약물사용효능 분석		기후 변화 감염병 치료용 약물재창출 후보물질 평가 및 라이브러리 구축		
	항생제 항결핵제	분리균주대상 시너지 약제 검색		항생제내성 대상 약물재창출 치료후보물질 라이브러리 구축		
			우선순위	신규 항생제 개발 타겟 발굴		
			항생제 내성 억제물질 및 신규 항생제 등 원천 후보물질 개발	최적화 및 비임상 평가 / 신규치료제 인허가 기준 마련		
			국내 미도입 신규항생제 도입 전략	분리균주 대상 효능검증 및 국내 임상		
				신규 치료제 인허가 기준 마련		
		다제내성결핵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신기술 활용 혁신적 신약 후보물질 탐색/평가			
항결핵제/내성결핵치료제		NTM 치료타겟 및 평가기술 개발	선도-후보물질 / 비임상			
신규 모달리티 / 플랫폼			비객담 기반 치료 신기술 개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플랫폼 확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플랫폼 확보			
		AI기반 후보물질 발굴 최적화 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항바이러스성 펩타이드 이용 매개체전파 치료제 개발	후보물질 최적화 및 비임상	임상 1상			
치료법	비전통적 치료후보물질 개발(파지 등)		박테리오파지 치료제 개발			
		대체 치료제개발/파지 등 라이브러리구축	후보물질 / 비임상	임상 1상		
		급만성 항바이러스 치료제 신규 플랫폼		신규 플랫폼 활용 치료제 후보발굴		
		소규모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연구	치료법 비교 및 개선 연구 → 가이드라인 개발 및 효과적 치료법 실용화			
	특정균종 치료효과 연구	치료예후/임상분리군 DB 구축	분석	치료제선택/임상예후 예측모델		
	중증도 기반 치료법 개선	다양한 치료요법(병합, 재사용, 신치료기법 등) 적용 계획 수립 및 적용 연구				
	다제내성 최적치료법, 치료보조/증강제	병합요법 검증, 치료기간 단축 임상연구 / 가이드라인 연구				
		치료보조면역요법 후보물질	비임상 효능평가			
		임상기반 치료제 부작용 원인 규명 및 마커 개발		비임상		
			감염병 치료제 및 치료법 임상 평가기술 개발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표준 개발				
		비임상 통과 치료제개발 연구수요 대상 국내외 임상시험 (임상 1~3상)				

○ 백신

- 5대 질환분과
- 신·변종 감염
- 기후변화·인수공통
- 세균 및 항생제내성
- 결핵
- 급·만성 감염
- 4대 미션분과
- 국제협력
- 방역기술 및 대응
- 백신개발 및 임상
- 치료·임상

기술 분류(안)	제3차 추진전략 수행기간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백신	BCG	임상 3상 완료				국가예방접종 백신	
	DTaP 혼합백신	비임상		임상 1상			
	DTaP/JE/HAV	신규플랫폼 검증, 지표발굴		비임상			임상 1상
	JE mRNA	mRNA 백신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HPV(다가)	비임상		임상 1상			임상2상
	범용코로나mRNA	신규항원		비임상			임상 1상
	범용인플루엔자 mRNA	물질검증		비임상			임상 1상
	Disease X	우선순위		위기대응 프로토콜			후보확보
	니파/치쿤구니아	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엥기열	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라싸			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한탄(불활화)	후보물질		효능검증		면역원성 증강	신종 감염병 대응형 대비·대응 백신
	엠콕스/아데노55	비임상		임상 1상		임상2상	
	탄저	임상2상		허가			
	차세대 결핵(신규)	파이프라인 다양화		글로벌 검증 및 비임상			
	차세대 결핵(재조합)			임상 1상			
	차세대 결핵(mRNA) SFTS(재조합)	물질검증		비임상		임상 1상	
	RSV(재조합)	물질검증		비임상		임상 1상	
	SFTS(mRNA)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상	
	노로(VLP 다가)	비임상		임상 1상		임상2상	
수족구/이하선염	물질도출		물질 검증		비임상		
지카(mRNA)	비임상						
말라리아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대상포진	비임상		임상 1상				
코로나인플루엔자	비임상						
HPV(NIP 외)			비임상		임상 1상	고부가가치 백신	
백신개발 기반 기술	mRNA 요소기술 개발 (IVT 벡터, Cap, LNP 등 전달시스템, 보관기술)		mRNA 백신 적용 연구 및 평가			mRNA 백신 플랫폼	
	mRNA 관련 제작/생산기술		면역증강제 백신 적용 연구 및 평가(TRL4-5)			신기술	
			항원디자인 기술확보		백신적용연구		
	마이크로니들 비임상		임상 적용			백신 임상시험	
	임상시험 네트워크 및 효능평가 지원 인프라 구축 - 운영						
	체액성/세포면역원성 분석		신변종 감염병대응 백신 면역연구 확대				
	우선순위 대상 면역도 조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다양한 감염병 면역도조사			생산 기반	
첨단백신기술센터(생산기반) 설계 및 건립							

○ 임상인프라 - 국제협력 - 방역

5대 질환분과 신·변종 감염 기후변화·인수공통 세균 및 항생제내성 결핵 급·만성 감염

4대 미션분과 국제협력 방역기술 및 대응 백신개발 및 임상 치료·임상

기술 분류(안)		제3차 추진전략 수행기간					이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상 인프라	네트 워크	코로나19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	우선순위 코로나197판 에후예측플랫폼	임상네트워크 운영 (바이러스, 세균, 항생제내성, 특수감염, 국제협력)				
	인프라	다제내성균 전문은행, 항생제내성포털		신·변종 국내 미유입 병원체, 검체 자원화 (고위험 BL4 자원 확보) 현지거점 기후변화·인수공통감염병 모듈러 실험실 구축 → 현지 병원체자원 बैं킹시스템 다제내성균 전장유전체 데이터 구축, 내성균주 자원화 → 데이터 활용 및 자원 분양 항생제사용조사, 양적·질적평가 체계 구축 조사/평가시스템 운영 [질환분과 공통] 진단·치료 비임상 지원 : 감염모델, 평가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국제 협력		코로나19 BL3 민간지원 (바이오뱅크, 효능평가 시설 등)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설계계획	분석·검사인프라 구축·운영 BL3 시설 구축·운영 BL4 시설 구축·운영 임상데이터 축적/모델링/분석 지원 공공기반 임상시료 생산지원(GMP)			
		코로나19 범정부 임상지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인력양성)			임상시험 공용 IRB 운영·지원 / 비임상→임상진입 지원센터 구축·운영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수탁기관 확보 및 관리 국가 감염병 임상연구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교육			
방역	예측· 예방	예측 모델 개발	해외유입 위험도/감염병 예측모델	인구이동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	복합질환 유병 인구집단 예측 기술개발			
	대비	감시·검역	인·수/하수역학/민관협력 감시 기술	검역현장(공항/항만) 검역 기술	감염병 이상징후 조기감시·경보 시스템			
대응	대비		정보관리 통합·실시간 공유/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감염병 재난 대비 통합 플랫폼 개발, 구축 및 매뉴얼 고도화				
	지원		대중교통 확산 예측, 의료·방역자원연계, 교육훈련	지역 기반 실증				
복구	대응	검사·진단	고성능(정밀) 진단 기술 및 신속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진단 장비 및 정도관리 매뉴얼, 무인 자동차 기술 개발				
	대응	역학추적	현장 중심·실시간 정보, 지역내 인구집단 특성 기반 역학조사	역학 추적 기술 개발 역학·임상 정보 통합 시스템 개발				
복구	대응	확산 차단 오염 제거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확산 차단	지역기반 실증				
	대응	격리	오염 제거 자동화 기술개발, 항바이러스 제품 검증 표준화	맞춤 방역소독, 경로·시설별 감염제어, 오염 폐기물 처리, 정책 적정성 평가				
복구	대응		의료시설 긴급전환, 응급의료시설 운영, 안전성 강화 시스템 개발	이동모듈형/격리시설, 비대면·공조·의료인력보호·취약 집단 관리 기술				
	대응		이송·특수환자치료	확진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이송 특수장비, 집중 의료시설 구축				
복구	대응		위기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국민 여론 분석 및 전달, 대응 인력 간 소통 기술				
	대응			후유증 예방·관리, 감염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스트레스 관리 기술 재난 비용·효과·편익 개발, 지원 적절성·효과성 평가 방법론 감염 재난으로부터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개발				

5-2-2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R&D지원 강화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치훈 연구관 ☎ 043-719-7351 e-mail : lee4951@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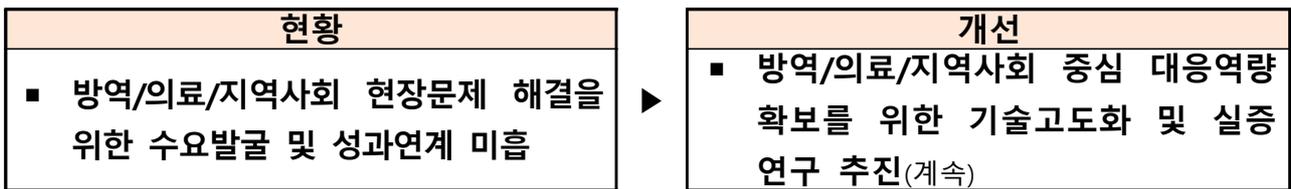
- 코로나19에 따라 방역현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역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성과의 현장연계·활용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기술고도화 및 실증연구 필요

□ 주요 내용

◇ 방역현장 문제해결 및 K-방역 고도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수요 발굴, 기술개발 및 실증, 성과확산 등 R&D 수단계에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 **(방역현장)**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감시, 예측·차단, 진단, 방역물품 개발·검증 기반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및 감시차단 기술 첨단화 추진
 - 방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고도화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방역 기술의 현장·연계를 위한 실증연구 추진
 - * **(연구개발과제 선정)**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11개 연구개발과제 선정(’23년 6월 협약) 및 현장중심 맞춤형 착수보고회 추진(’23.8월~9월, 11회, 질병관리청 7개 부서 참여)
 - * **(실증연구)** “신종감염병대응체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감염재난 대응·차단기술 연구성과의 현장연계를 위하여 실증연구 추진(역학조사 자동지원 실증연구(광주TP, ’23년 6월~12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증연구(영천시 보건소, ’23.5월/고려대안암병원 감염병동 환자 대상, 8월~9월), 연구성과물 실증연구지원 및 시연, 홍보 등을 위한 실증박람회 개최(’23.10.24~25))
- **(의료현장)** 신종 감염병 재난 대비 의료안전강화를 위하여 구조·치료시스템·장비·인력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 연구지원 추진
 - 방역공조기기, 공간 멸균기기 등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성 높은 장비(시제품 등) 개발 추진
 - * **(기술개발)** 음압기기, 원내 감염병대응 의사결정시스템, 감염병 병상추계 시스템, 공간멸균 장비, 음압챔버, 방호복 착탈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추진

- * **(현장컨설팅)** 개발 연구성과의 의료현장 활용·확대를 위한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현장 컨설팅 추진('23년 8월~9월, 16회)
 - * **(수요실증위원회)** 사업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수요/제도/인증 등 관련 실증연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수요실증위원회 구성·운영('23년 1월~8월, 7회)
 - *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연구개발성 성과 증진 및 실질적 가치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 성과 인증방법 및 실증방안 조사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실시('23년 6월~7월)
- **(지역사회)**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역학·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감염병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지원 추진
- 지역사회 기반 국가 감염재난 위기대응 역량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및 다부처 추진계획 수립**
 - * (사업기획)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는 감시·예측, 역학조사와 이동 경로에 따른 대중교통 및 다중생활시설 및 취약시설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현장 중심 방역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기획('22년 ~ '23년 4월, 행안부 주관)
 - * (다부처) 다양한 방역기술의 연계·확산을 위해서 관계부처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다부처 추진가능성 검토 중('23년 9월~10월)



□ **향후 계획**

- **(방역현장)** 미래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성과 현장적용·활용을 위한 실증연구 지속 추진
- 방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고도화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및 방역기술 실증연구 추진
 - * 방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고도화 연구개발과제 연차점검 및 과제별 워크숍('23.11월) 개최, 산학연관 방역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23.11월), 부처협업회의('23.11월) 추진

참고 1

(다부처)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 2023년 추진 연구개발과제

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감시	해외 신변종 감염병 유입감시 데이터 통합 기반 AI 감시 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안인성	'23~'26년 (총4년)	31억원
	박쥐류 전주기 감시체계 기반 구축 및 차세대 탐색기술을 통한 신변종 감염병 정보공유체계 개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연수	'23~'27년 (총5년)	46억원
	선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기반 병원체 감시 표준작업 지침 및 신속 고감도 현장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김성표	'23~'27년 (총5년)	36억원
	검사기반 민관 협력 병원체 감시체계 개발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고운영	'23~'26년 (총4년)	21억원
예측 차단	다양한 감염병 모델 기반 통합 분석 예측 시스템 구축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은옥	'23~'27년 (총5년)	37억원
	Digital Surveillance 기반 실시간 현장 중심 역학조사 대응 기술개발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성낙명	'23~'27년 (총5년)	42억원
진단	3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현장 검출을 위한 500nm 이하급 나노 웰 구조 기반 디지털 진단기기 개발	나노종합 기술원	박유민	'23~'26년 (총4년)	20억원
	신변종 감염병 현장 대응을 위한 이동식 모듈 통합형 자동화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주)진스랩	정진욱	'23~'26년 (총4년)	24억원
	신속 임상검증-사용 기반을 위한 표준물질 생산시스템 개발	한국생명기술 연구조합	차영주	'23~'27년 (총5년)	79억원
생활 방역	방역물품의 감염력 차단 효능 평가기술 효율화를 위한 비감염성 SARS-CoV-2 대체 바이러스 개발 및 실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기순	'23~'26년 (총4년)	18억원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과학적 성능 검증과 실증 기반 구축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조진식	'23~'27년 (총5년)	56억원

참고 2 [행안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신종 감염병 유행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해외 유입에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격리치료시설 효율적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역학조사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투자예산) 2021~2024년(총 4년), 국고 185억원
- (주요내용) 신종 감염병 유행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에서부터 국내의 자가격리자 및 격리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다양한 방역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주요 연구성과 및 실증연구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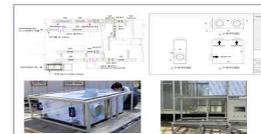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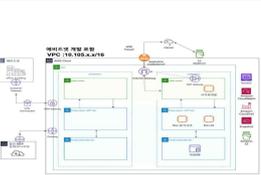
구분	주요성과			실증지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 기술개발	 방역터널	 수화물자동소독장치	 대민서비스로봇	부산TP * 항공/항만 (부산/청주) 추진 검토 중
격리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 첨단화/효율화 기술개발	 병실로봇	 물류로봇		한국과학기술연구원(리빙랩), * 분당서울대 병원 추진예정 ('24)
안전역이 좁은 격리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AIOT(AI+IOT) 기반 스마트 비대면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가슴패치형 디바이스	 손목밴드형 디바이스	 시콜센터	영천시 보건소, 고대안암병원
감염병 대응 다중이용시설 지능형 관리 기술개발	 EO/IR 카메라			광주TP 조인트리 기업사옥(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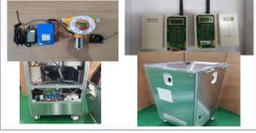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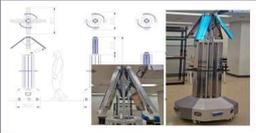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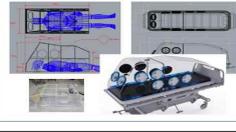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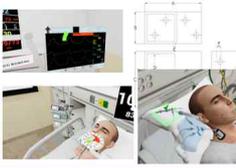
참고 3 (복지부)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감염병 재난 시 환자 및 의료진의 환경 개선 및 역량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K-의료체계 구축
- (사업기간/투자예산) 2022~2024(총 3년), 국고 400억원
- (주요내용) 감염병 재난 대비 및 원내감염 제어에 대한 의료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조·시스템·장비·인력 최적화 기술개발
 - * ① (구조) 의료현장 공간구조의 감염 제어 기술개발, ② (시스템) 치료기반 강화, 감염 환자 대비·대응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③ (장비) 감염병 대응 및 보호 장비 고도화, ④ (인력) 의료 종사자 대응력 확보 기술개발

□ 주요 연구성과 및 실증연구 추진(안)

구분	연구개발과제	실증대상 성과	실증 Mock-up 및 테스트베드 장소(안)
구조	응급의료 최적화 다중감염제어 기반 응급의료시설 방역강화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현장 감염병 안전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환경데이터 기반 AI 방역공조 시스템 개발		국립마산병원
	Free-plan 기반형 One-day 모듈러 음압병동 개발 연구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가천대 의료원
	감염병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 의료시설 긴급 전환 기술 개발		인천광역시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시스템	원내감염확산의 다수준·다중 위험 요인 데이터와 단계별 방역 대응 표준 프로세스가 반영된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실증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의료기관 5개소
	OMOP-CDM 기반 감염병 환자정보관리 통합 시스템: PHAROS System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구분	연구개발과제	실증대상 성과	실증 Mock-up 및 테스트베드 장소(안)
	신종 감염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배정 시스템 개발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과학적 방역 및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의사결정체계 개발		가천대학교 길병원
장비	포터블 훈증 방역기 모듈 기반 비대면 자동화 방역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임상평가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고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의료 환경 정화를 위한, 자동화된 자체멸균 기능을 장착한 과산화수소 멀티플라즈마제트-기반 환경 소독 시스템 개발 및 임상 평가를 통한 오염제거 수준 평가 표준 개발		고려대의료원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의료환경 자동화 공간 살균소독 기술 개발 및 평가 표준 수립		수도권 인근 응급의료센터 18개소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자외선(UV-C) 소독기 개발과 임상평가		(예상) 인천의료원, 서울아산병원, 한강성심병원
	호흡기 차단을 위한 가변형 음압 터널의 개발		수요기관 조사 중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쾌적기류제어 기술기반 가변형 메디컬 음압챔버 개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 등
인력	보건의료기관의 감염재난 대책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체계 구축		종합병원, 영양병원, 보건소
	의료진 감염병 임상경험 확보를 위한 차세대 가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XR 교육 시뮬레이션 센터

참고 4

지역사회 감염재난 대응역량강화 기술개발사업

□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 기대효과

지역사회 감염 재난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건강·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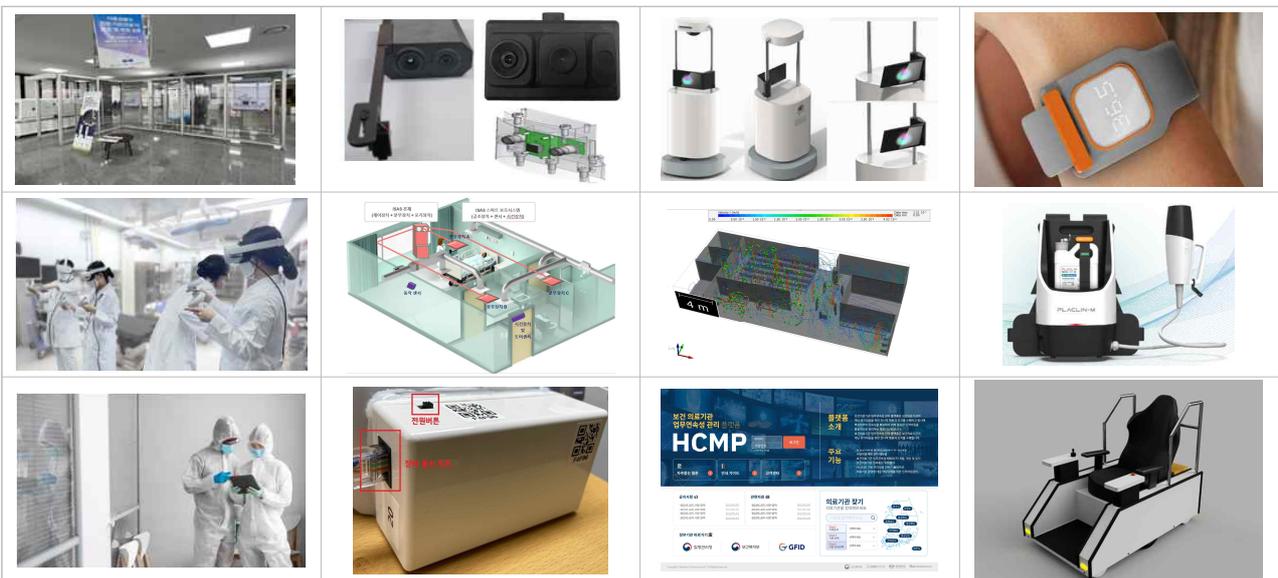


□ 박람회 개요

- (목적) 재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증연구 및 홍보
- (기간/장소) 2023.10.24.(화)~25.(수) / 충북 C&V센터 2F 대회의실
* 준비 및 철수 기간: 10.22.(일)~23.(월) / 26.(목)
- (주최/주관) 8개 참여부처(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행안부, 환경부)/(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 (지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참석대상)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기업, 학계, 일반관람객 등
- (주요내용) 연구성과 전시 및 현장실증, 학술 컨퍼런스

□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 방역기술 분야 연구성과물 전시, 전시관/현장실증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전시관) 의료현장, 방역현장으로 테마를 구성하여 연구성과물 전시
 - * (현장실증관) 연구과제별 리빙랩을 구축하여 현장실증 추진
 - * (포스터) 재단 MOU 기관 등과 함께하는 관련분야 포스터 전시 및 발표



- (학술 컨퍼런스) 사업 및 연구과제 성과홍보를 위한 컨퍼런스 및 현장연계를 위한 협력세미나 개최 등

5-2-3

대유행 대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치훈 연구관 ☎ 043-719-7351 e-mail : lee4951@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방역·보건 조치만으로는 한계 봉착,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등 대내외협력 및 연구기반 확대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 글로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허브역할 강화

- **(對 선진국)**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확보, ▲미해결 감염병 대상 신규 치료제 발굴 등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 미국 NIAID,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 등 감염병 연구기관 간 협약체결에 따른 국제행사 및 공동연구 등 추진중

< 주요 내용 >

- ①(국제행사) 한국NIID, 미국NIAID, 덴마크SSI, 싱가포르NCID 등 백신·치료제 관련 감염병연구기관 간 제1회 감염병연구기관(IDRIC) 국제심포지엄 개최('23년 2월),
- ②(공동연구) 미국NIAID와 결핵백신 개발을 위한 면역증강제 적용 공동연구, 일본뇌염 및 플라비바이러스 mRNA백신 항원설계 관련 공동연구 등 신규협력 기획추진중,
- ③(국제기구) WHO WPRO TDR(열대성질환연구·교육 특별프로그램) 합동조정위원회(JCB)에 한국대표(NIID 소장) 선정 및 1차 회의참석('23년 6월 제네바)

- **(對 중저소득국)**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통한 자원·정보 확보(병원체·검체) 및 연구지원 등 국내외 기관 간 창구역할 수행

- 베트남 NIHE, 필리핀 RITM 등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3년 7월)에 따른 세부이행방안(공동연구, 인력교류, 거점구축 등) 협의중

< 주요 내용 >

- ①(업무협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지원, 기술·인력 파견 및 교육 지원, 자원·정보 수집 및 교류 지원, 공동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 협력 지원, ②(공동연구) 베트남NIHE와 차세대 결핵치료제 개발을 위한 효능평가 등 공동연구 추진중, ③(해외거점) MOU 체결에 따른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추진중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과제중심 산발적 국제협력 추진 ▪ WHO·CEPI 등 국제기구와 공조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및 해외거점 구축(계속) ▪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허브역할 강화(계속)

□ 향후 계획

- **(對 선진국)**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선진 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제심포지움 등 지속 추진
 -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EID*)의 한국 개최 추진(美 NIAID 요청)
 - * '24년 한KNIID-미NIAID-일AMED 공동개최('24.3. 그랜드하얏트인천) 추진중
- **(對 중저소득국)** 해외연구거점센터 대상국 선정(전문가 의견수렴 중) 이후 맞춤형 특화전략으로 방역당국(ODA와 연계)과 국내 연구자/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창구(허브)역할을 수행
 - 향후 고위험 출혈열 바이러스(에볼라, 원숭이두창 등)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 등 거점대상국(연구기관)을 권역별로 확대 추진
 -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아프리카CDC), 남아공(NCID), 세네갈(IPD) 등

□ **추진개요**

- (추진목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기존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중·저소득 국가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연구 (공동개발, 임상) 및 자원확보
- (소요예산) : '24년 300백만원
 - * (주요내용) ①국제공동연구 추진·지원, ②기술·인력 및 민간협력 지원, ③자원·정보 수집 및 국내활용 지원(허브구축)

□ **추진계획**

① **국가 감염병 해외연구거점(실험실) 구축 및 운영**

- (추진목적)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조 및 허브 역할을 위해 실험실 포함 해외연구거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활동내용) △해외연구거점 운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해외연구거점 운용 매뉴얼 개발, △실험실 시약 지원,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 수리비 지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고정비 지원
 - * (해외연구거점 운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해외연구거점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사업 운용 매뉴얼 개발을 위한 양국 간 이해관계자 워크숍 (화상), 해외연구거점 현지 담당 인력 교육 및 인건비 지원
 - * (해외연구거점 운용 매뉴얼 개발) 해외연구거점 운용을 위한 인력, 예산, 장비 활용, 공동연구 추진 절차 등이 포함되어있는 매뉴얼 개발
 - * (실험실 시약 지원) 공동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험실 시약 지원. 단, R&D 예산으로 사용한 품목과 중복 수혜 불가
 - *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 교체비 지원) 실험실 자원·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약품처리, 폐기물 처리, 공기 필터 등의 비용 지원
 - * (실험실 운영을 위한 고정비 지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제반비 지원
- (연도별 예산) 68.4 백만 원/year ('24년)

② 국제협력 공동연구 활동비 지원

- (추진목적) 신·변종 및 미해결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 (활동내용)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국제 공동연구(감시·진단·치료·백신 등) 프로그램 지원
 -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국제 공동연구 수요 발굴 및 연구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워크숍 진행
 - * (국제 공동연구) 발굴된 공동연구 수요 기반 연구 추진
 - * (IRB 지원) 현지에서 추진한 공동연구의 IRB 승인을 위한 절차(예산) 지원
- (연도별 예산) 93.0 백만 원/year('24년)

③ 인력교류 및 자원교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해외연구거점센터 운영 및 신·변종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국 간 전문인력 및 자원정보교류 프로그램 구축
- (활동내용) △해외거점센터 인력 파견 및 파견인력 교육, △해외 현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국내·외 검체 이송 시스템 구축 지원
 - * (인력 파견 및 파견인력 교육)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문가 파견 비용지원, 인력 대상 교육과 파견 인력의 R&R 정립, 파견, 모니터링
 - *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해외연구거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육 훈련 진행(초청연수, 현지연수 병행)
 - * (국내·외 검체 이송 시스템 구축 지원)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등 필요 시 외국으로의 검체 운송을 위한 예산 지원
- (연도별 예산) 120.7 백만 원/year('24년)

④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추진목적) 해외연구거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감염병연구기관 간 협력 및 연구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
- (활동내용) 해외연구거점 기반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 하고, 국내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연구자까지 초대하여 감염병 연구자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함
- (연도별 예산) 17.9 백만 원/year('24년)

참고 2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베트남 해외연구거점 구축시 기대성과(예시) >

구분	정보 및 자원 기반 확보	신기술 확보 및 임상검증
국립감염병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병원체의 수집·관리 및 활용 해외유입 가능 감염병에 대한 환자 검체 및 병원체 수집 해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학적, 면역학적 분석 연구 수행을 통한 향후 백신 개발 연구 사람-진드기-동물 간 유전형별 특이적 감염/전파/병인기전 연구 국가별 유행형 유전체 비교분석 및 진단 후보물질 개발 고위험군에서 활동성결핵 발병예측 바이오마커 평가
기타 /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자원 및 기술교류(K-방역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술) SFTS 및 쯔쯔가무시증의 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전염성 높은 고위험성 바이러스의 신속, 대량 검사를 위한 검사시스템 개발 신변종바이러스 감염 환자 유래 B세포를 활용한 항체 치료제 개발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기법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 신변종 출혈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 필리핀 해외연구거점 구축시 기대성과(예시) >

구분	정보 및 자원 기반 확보	신기술 확보 및 임상검증
국립감염병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병원체의 수집·관리 및 활용 해외유입 가능 감염병에 대한 환자 검체 및 병원체 수집 해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학적, 면역학적 분석 연구 수행을 통한 향후 백신 개발 연구 지카, SFTS 등 매개체 전파 바이러스 특성 조사 및 진단제 효능평가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대질환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 감시 연구 소외열대질환에 관한 조사 및 진단법 개선 연구 필리핀 내 플라비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및 유행을 조사 열대지역 인수공통감염병 및 매개체질환 병원체 조사연구 협력 항생제내성균 조사 지카 바이러스 억제와 면역반응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을 통한 열대병 백신 이상 반응 예방을 위한 진단 시스템 개발과 구축 결핵진단키트의 해외 임상평가 및 검체확보 결핵 원치여부 및 질병진전 예측을 위한 평가 표지자 검증 및 적용 연구 동남아 결핵 고위험군 대상 결핵균 진료, 치료, 진단 체계 수립 결핵백신의 임상시험

< 해외연구거점 구축시 활용방안(예시) >

- **(준비 단계 : 해외연구거점 구축 및 감염병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공조 네트워크 형성 및 국가 간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연구거점 구축
 -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통한 자원·정보 확보(병원체·검체) 및 연구지원 등 국내외 기관 간 자원정보교류 플랫폼 역할 수행
 - **(대비 단계 : 팬데믹 발생 전 신속 개발체계 구축)** 국내·외에서 우선 순위*로 선정한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자원정보 확보 및 선정 및 진단
 - * (백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치료제) 코로나19, 메르스, 니파, 라싸, 뎅기, SFTS, 조류인플루엔자, RSV
 - **(대응 단계 : 팬데믹 발생 시 신속 개발)** 우선순위 병원체 또는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을 사전 확보 하고,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200일 이내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추진
 - 항원을 개발·발굴*하여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사전에 생산하고, ‘국가 첨단백신기술센터’ 활용하여 백신라이브러리에 비축 추진
 -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변종mRNA백신사업단, 글로벌백신선도사업단 등의 성과물 연계
 - 국내외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백신 및 치료제 신속임상 체계* 구축
 - * (국내) 시제품 확보로 임상진입 및 실용화를 통한 환자적용체계 마련
(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 임상연구 및 면역학적 감시 체계 가동을 통한 임상 기간 단축 추진
-

5-2-4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담당자	김영은 사무관 ☎ 044-202-2876 e-mail : 0equal2@korea.kr

□ 추진 배경

- 보건의료 기술(백신·치료제) 확보 여부가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증가

□ 주요 내용

◇ ARPA-H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마련

- **(사업목적)**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한 위기 대응 등 보건 안보 확립('24년~)
 - 위기 대응 및 국민 건강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적시적 연구개발 지원
- **(추진체계)** 위기대응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적시성·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임무 트랙(Mission-Track)과 신속 트랙(Fast-Track) 마련
 - * 적정성검토(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3.8.~12.) 이후, 사업내용 최종 확정
 - **(임무트랙)**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달성해야 할 임무 중심의 도전적 문제를 도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도전적 문제) 해결 시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 투자가 필요하여 민간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보건의료·복지 분야 도전과제
 - **(신속트랙)** 팬데믹 발생시 치료제·백신 개발에 R&D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구조 마련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증된 개념에 대한 추격형 연구 반복■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에 주요국 대비 늦은 연구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 적시 투자■ 신속 연구 체계 도입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향후 계획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착수('24년~)

5-2-5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	김영준 민간전문가 ☎ 044-202-2972 e-mail : yj1205@korea.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안보 개념으로 인식,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발표('23년 4월)
- 생산·규제과학 현장 전문인력 및 첨단·융복합 연구 인재 등 특화 분야별 중장기 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분야별 인력 양성을 통한 백신 개발·생산 역량 강화

- **(인력양성)** 기초부터 응용개발, 임상연구,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 특화분야별 인력 육성으로 백신 개발·생산역량 고도화
 - (임상전문인력)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생산공정) 실습시설 신규 구축 및 연계로 대학·민간 실습역량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생산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 임상시험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전주기 실무역량 갖춘 전문인력(데이터관리자, 임상 시험 감독 등) 양성 교육과정 운영 → 복지부 매년 1,030명 ('21년~)
규제과학	▶ 백신 품질관리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 양성, 해외 규제기관(WHO 등) 인허가 지원교육 수행 → 식약처 600명 ('21년~'25년)
생산공정	▶ 백신 특화 생산·공정 교육과정 개발, GMP 시설 활용한 산업현장 핵심인재 양성 → 복지부한국형NIBRT 3,500명 ('21년~'25년), 복지부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1,100명 ('19년~'23년), 산업부백신실증지원센터 1,500명 ('22년~'26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BRT) 항체·백신생산공정교육 lab scale 단계 시범교육 실시 ▪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 연간 250명 규모 생산전문인력 양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K-NIBRT) 항체·백신생산공정교육 pilot scale 단계 교육 실시 및 학위과정 운영 ▪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 센터 구축 및 연간 1,200명 규모 양성 확대

□ 향후 계획

-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직능별 찾아가는 교육확대*('24~)

* '24년 권역별 교육 요구 파악을 통한 지역교육 확대

-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장비구축 및 K-NIBRT 교육과정 다변화*('24~)

* 고교생·재직자과정 및 학위과정 교육프로그램 확대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인력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25)

* (인천-송도) K-NIBRT, (충북-오송) K-BIO 트레이닝 센터

5-3-1

신속 규제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

소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신속심사과, 생물제제과		
담당자	조아람 사무관	☎ 043-719-3783	e-mail : ramu0223@korea.kr
	정명아 연구관	☎ 043-719-2927	e-mail : mychung702@korea.kr
	정주연 연구관	☎ 043-719-5060	e-mail : jjjung@korea.kr
	이연희 연구관	☎ 043-719-3469	e-mail : yhvet@korea.kr

□ 추진 배경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인 치료제·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 속도가 중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규제 지원 필수

□ 주요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적극적 심사·제품화 지원

- **(신속심사)**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여 신속심사* (허가심사기간 단축 : 평시 120일 → 40일)
 - * 심사분야별(총괄, 품질, 비임상, 임상심사) 전담심사팀 구성·운영하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허가·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신변종 감염병 대응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심사*, 신속심사 대상 의료제품 전주기 심층 상담 체계(R-OTC)** 운영
 - * 일반품목 대비 허가심사기간 25% 단축
 - ** Right On Time-Consult 상담 : 초기 개발물질 스크리닝부터 임상시험 진입 까지 감염병 특화 주기·지속적 제품화 지원 상담(연중)
- **(자금화)** 긴급필수 위기대응 의료장비 국산화 위해, 민관공동개발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임상시험, 허가, 사용까지 제품화 지원
- **(백신·치료제)** 백신 임상지원협의체 운영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 마련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대상 신속심사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의 높은 수입 의존률, 낮은 자급력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심층 상담 제공 및 상담사례집 마련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협의체 운영 ■ 코로나19 백신 개발시 고려사항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종 감염병 백신·치료제별 전담 심사팀 구성 등 신속심사 확대 운영 ■ 공중보건 위기대응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관리 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심층상담 제공 및 상담사례집 마련 ■ 국내 개발 신·변종백신으로 임상지원 협의체 확대 운영 ■ 신규 백신 안전성·유효성·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제공

□ 향후 계획

- **(신속심사)** 팬데믹 발생 시, 신·변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신속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력, 전담심사팀 구성 및 긴급사용승인 신속심사로 백신·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지원
- **(자급화)** 긴급필수 위기대응 의료장비(에크모) 국산화 목표로 임상·비임상 관련 컨설팅 제공(~'24.12)
- **(맞춤형 지원)** 백신 임상지원 협의체 운영 지속 및 신규 백신의 평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 제공으로 국내 백신 개발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

5-3-2

신·변종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소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담당자	신승철 사무관	☎ 043-719-3310	e-mail : scshin1210@korea.kr
	노항식 연구관	☎ 043-719-5469	e-mail : 72notul@korea.kr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개발·제품화 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 주요 내용

◇ 백신 개발·생산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확대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초기부터 인허가·수출까지 전주기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 구축·운영
 - (개발·생산) 백신 개발·생산에 필요한 원료 세포(세포주) 기원, 특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여 벤처 기업 등에 세포주 분양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국가 셀뱅크 구축·운영('22년~)
 - (품질·시험) 백신 허가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단계에서 검체분석 및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검사 위탁시험 지원
 -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운영('23년~)
 - (인허가) 백신 물질개발·비임상·임상·제조·품질관리 등 제품화 성공을 위한 단계별 종합 기술 컨설팅
 - * 기업 맞춤형 1:1 제품화 컨설팅, 최신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
 - (인력양성) 국내외 백신 인허가 성공 및 백신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규제 전문인력 양성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교육시설 구축('22~'23년), 운영('24년~)
- **(특수시험검정동)** 백신 국가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 특수 실험실 증축·운영
 - *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 운영('24년~)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 부재 ■ 고위험병원체 기반 신·변종 백신 국가 출하승인 검정시험 시설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제품화 기술지원 ■ 특수시험검정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팬데믹 백신에 대한 신속한 품질관리 가능

□ 향후 계획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개발·제품화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술지원) 백신 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 위탁시험, 1:1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최신 기술·규제동향 정보 제공, 국가 셀뱅크 운영 등(지속)
 - (인력양성) 백신 제조·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해외 인허가 대비 모의실사 등 백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교육('24~)
- **(특수시험검정동)**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을 위한 특수시험검정동 운영
 - 신·변종 고위험 병원체 이용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을 위한 특수시험검정동의 안정적 운영

5-3-3

규제과학 R&D 지원

소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담당자	오상연 연구관	☎ 043-719-1788	e-mail : pearlynn@korea.kr
	주인선 연구관	☎ 043-719-4172	e-mail : jis901@korea.kr

□ 추진 배경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하고 철저한 국가품질관리를 통한 치료제·백신의 안전성 및 국민의 안심 확보

□ 주요 내용

◇ R&D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제검토 및 연구 실시

- **(R&D 코드)** 국가 R&D사업 기획 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 분류, 평가기술 필요성 등을 동시 검토하여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연계 지원
 - 기술-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R&D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기술 개발 또는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 신변종감염병 mRNA백신개발사업 등 사업별 맞춤형 규제지원(연중)
- **(감염병 대응 R&D)** mRNA 백신 등의 안전성·유효성·품질평가 기술 개발,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수행
 - *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22~'25)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제품화 지원은 부서별로 분절하여 운영 ■ 새로운 플랫폼 백신(mRNA 등) 개발 ■ 감염병 백신의 품질 및 유통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사업의 초기기획단계부터 제품개발까지 평가기술개발 및 제품화 컨설팅을 통해 R&D 통합지원체계로 운영 ■ mRNA 백신 등의 제품화를 위한 안전성·유효성·품질 평가기술 개발 등 지원 ■ 백신의 품질유통 정보 전달체계 및 시판후 안전관리기술 등 기반마련 연구 지원

□ **향후 계획**

- **(R&D 코디)** 국가 R&D사업 규제정합성 검토 수행(지속)
 - 국가 R&D사업 추진(또는 추진예정) 제품의 규제지원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규제정합성 검토' 추진
- **(감염병 대응 R&D)** 감염병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방안 연구 지원을 통한 규제과학의 선제적 기반 구축

5-3-4

의료제품(코로나19 치료제)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담당자	이하림 사무관 ☎ 044-202-2752 e-mail : eweb007@korea.kr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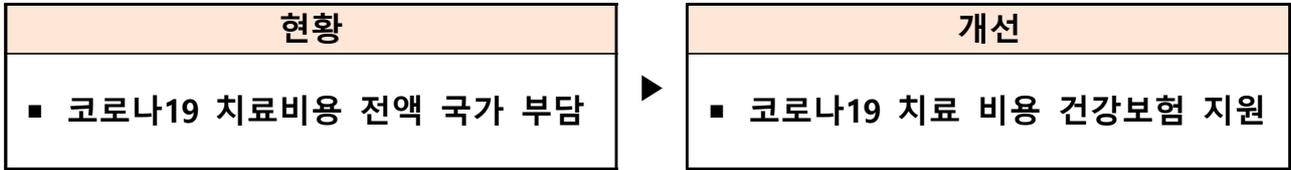
-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추진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건강보험 지원체계 전환

◇ 제약사 및 관계부처(식약처, 복지부 등) 협업을 통한 신속 등재 추진

- **(품목허가)** 긴급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임상현장 사용 등을 고려, 신속 품목허가*(식약처)
 - * 대상약제 : 베클루리주('20.7.24.), 파스로비드정('23.7.14.), 라게브리오캡슐(미허가)
- **(등재신청)** 품목허가 후, 급여결정 신청*(제약사→심평원)
 - * 대상약제 : 베클루리주('23.9.30.), 파스로비드정('23.9.27.), 라게브리오캡슐(미신청)
 - (서류제출) 심평원과 제약사간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 서류(판매 예정가 산출, 동일·유사약제 비용효과 자료, 국내외 사용현황 등) 제출 범위 명확화
- **(신속절차)**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의 신속한 절차진행 지원
 - (사전절차) 신청서 접수 후, 건보공단에 제약사와 사전 약가협상 진행 요청(복지부)
 - (급여평가) 급여결정 신청 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성 평가 검토(심평원)
 - * 제약사 제출자료 부족으로 보완요청 시 처리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약가협상) 사전 협상 통해, 본 협상 기간(60→30일) 단축 검토(건보공단)
 - (건정심 의결 등) 급여기준, 상한금액 등을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복지부)



□ 향후 계획

- 급여결정 신청(M), 급여평가(M+5개월), 약가협상(M+6개월), 건정심
 심의·의결 및 고시(M+7개월)